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성은 예산분석관
이선화 예산분석관

지 원 | 박서연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교육위원회

[교육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

II.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17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논의 필요 26
 - 1-2. 초·중·등 공교육 성과 제고 필요 33
 - 1-3. 특별교부금 사업과 보통교부금 사업 간 차별화 강화 필요 38
2.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보조금 관리 부실 및 집행 부진 43
 - 2-1.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및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국고 환수 필요 45
 - 2-2. 연례적인 집행을 저조 51
 - 2-3. 국고 부담 비중의 점진적인 조정 검토 필요 53

Ⅲ. 개별 사업 분석

1. 복지플랫폼 구축사업 계획 변경으로 당초 사업취지 축소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55
2.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의 시범사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률 저조	62
3.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의 부적절한 사업운영	66
4.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성과 저조	71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분석	77
5-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자 확대 시 면밀한 검토 필요	78
5-2.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자 감소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84
6.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 필요	86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의 성과제고 필요	92
8.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성과 관리 강화 필요	100
9.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의 집행부진 및 보조사업 관리 부실	106
10. 사학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110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의 인센티브 운영 개선 필요	115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의 자체수입 발굴 노력 필요	119



CONTENTS

13.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의 집행효율성 제고 필요	122
14.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124
15.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29

[국가교육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13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결산 개요

- 1. 현 황 141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9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0

II. 주요 현안 분석

- 1.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52
 - 1-1.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53
 - 1-2.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의 편성 내역과 다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문제 159
- 2.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66
 - 2-1.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의 적정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167
 - 2-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77

Ⅲ. 개별 사업 분석

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의 투자실적 제고 필요	181
2.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의 예산 전용 후 불용 문제	189
3.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 관리 철저 및 실적 제고 필요	192
4.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198
5.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및 신규 지원 재검토 필요	203
6.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09
7.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의 적정 계획 수립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215
8.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21
8-1.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22
8-2.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26
9.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230

[문화재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235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1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2

II. 개별 사업 분석

- 1.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43
- 2.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49
- 3.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55
 - 3-1.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56
 - 3-2. 일반연구비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61
- 4.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운영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64
- 5.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 관리 철저 및 효과성 검토 필요 270
- 6.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적정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277
 - 6-1.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278
 - 6-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사업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281
- 7.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집행 필요 284

교육위원회





교육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조 553억 300만원이며, 4조 3,307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4조 3,272억 500만원을 수납하고 35억 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었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8,766	208,766	208,766	431,352	428,853	2,500	-	99.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7,491	17,491	17,491	6,292	6,292	-	-	10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829,046	3,893,062	3,892,061	1,002	-	100.0
합계	4,055,303	4,055,303	4,055,303	4,330,707	4,327,205	3,501	-	99.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9조 4,406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99조 2,722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33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50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3,362,762	94,233,013	94,272,632	94,104,243	13,371	155,017	99.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264,689	1,264,689	1,338,996	1,338,996	-	-	10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829,046	3,829,046	-	-	100.0
합계	88,456,497	99,326,748	99,440,674	99,272,286	13,371	155,017	99.8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3조 6,621억 4,700만 원이며, 13조 1,089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7%인 12조 9,406억 400만원을 수납하고 1,683억 3,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었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학진흥기금	368,158	368,158	368,158	460,093	424,479	35,614	-	9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3,293,989	13,293,989	13,293,989	12,648,850	12,516,125	132,725	-	99.0
합계	13,662,147	13,662,147	13,662,147	13,108,943	12,940,604	168,339	-	98.7

자료: 교육부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3조 6,797억 8,200만원이며, 이 중 94.6%인 12조 9,406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없었으며 365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학진흥기금	368,158	368,158	368,554	424,479	-	10,021	115.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3,293,989	13,293,989	13,311,228	12,516,125	-	26,509	94.0
합계	13,662,147	13,662,147	13,679,782	12,940,604	-	36,530	94.6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064억 8,400만원 (9.6%)이 증가한 6조 9,32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080억원 (△2.9%)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26,786	177,682	177,682	388,713	211,031	61,927
기금	6,814,137	6,148,739	6,148,739	6,544,192	395,453	△269,945
합계	7,140,923	6,326,421	6,326,421	6,932,905	606,484	△208,018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2회계연도 교육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89억 9,700만원(△0.1%) 이 감소한 100조 5,38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7조 7,905억 원(21.5%)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77,166,254	83,814,972	94,685,223	94,630,675	△54,548	17,464,421
기금	5,581,640	5,810,139	5,922,139	5,907,690	△14,449	326,050
합계	82,747,893	89,625,111	100,607,362	100,538,365	△68,997	17,790,47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의 자산은 57조 574억 8,700만원, 부채는 1조 9,009억 5,600만원으로 순자산은 55조 1,565억 3,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조 8,960억 2,100만원, 투자자산 22조 3,126억 5,100만원, 일반유형자산 30조 7,668억 500만원, 무형자산 720억 1,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99억 9,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7,782억 1,500만원(3.0%)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채무증권과 장기지분증권 등 장기투자증권의 감소에 따른 투자자산 1조 2,327억 7,400만원 감소, 단기투자증권 등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7,211억 2,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858억 3,000만원, 장기차입부채 1조 23억 9,900만원, 장기충당부채 22억 6,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6,104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44억 5,700만원(0.8%)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358억 3,500만원 증가, 장기미지급금 증가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21억 3,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7,057,487	58,835,702	△1,778,215	△3.0
Ⅰ. 유동자산	3,896,021	4,617,146	△721,125	△15.6
Ⅱ. 투자자산	22,312,651	23,545,425	△1,232,774	△5.2
Ⅲ. 일반유형자산	30,766,805	30,602,067	164,738	0.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72,016	62,211	9,805	15.8
Ⅵ. 기타비유동자산	9,994	8,853	1,141	12.9
부 채	1,900,956	1,886,499	14,457	0.8
Ⅰ. 유동부채	285,830	249,995	35,835	14.3
Ⅱ. 장기차입부채	1,002,399	1,026,393	△23,994	△2.3
Ⅲ. 장기충당부채	2,265	1,780	485	27.2
Ⅳ. 기타비유동부채	610,462	608,331	2,131	0.4
순 자 산	55,156,531	56,949,203	△1,792,672	△3.1
Ⅰ. 기본순자산	19,562,271	19,562,271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9,981,642	18,229,067	1,752,575	9.6
Ⅲ. 순자산 조정	15,612,618	19,157,865	△3,545,247	△18.5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9조 4,795억 7,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5조 1,554억 500만원, 관리운영비 1,791억 1,000만원, 비배분비용 1,722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7,674억 4,800만원, 비배분수익 1,722억 3,7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5억 8,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0조 3,034억 4,600만원(25.6%) 증가한 99조 4,769억 9,200만원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 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19조 6,683억 9,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81조 2,975억 8,900만원)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프로그램(5조 1,006억 7,000만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프로그램(4조 9,050억 2,200만원) 등으로 나

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24억 3,200만원과 경비 863억 4,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1,606억 4,900만원과 기타비용 21억 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1,387,925	81,708,473	19,679,452	24.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5,155,405	85,487,009	19,668,396	23.0
나. 프로그램 수익	△3,767,480	△3,778,536	11,056	△0.3
II. 관리운영비	179,110	220,490	△41,380	△18.8
III. 비배분비용	172,237	127,535	44,702	35.1
IV. 비배분수익	2,262,281	2,882,952	△620,671	△21.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9,476,992	79,173,546	20,303,446	25.6
VI. 비교환수익 등	△2,587	△1,252	△1,335	△106.6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9,479,579	79,174,798	20,304,781	25.6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6조 9,492억 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5조 1,565억 3,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7,926억 7,200만원(3.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0조 3,047억 8,1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2조 1,444억 4,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 조달 등 재원의 조달 105조 3,988억 7,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조 1,667억 2,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조 3,826억 1,4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626억 9,400만원, 기타 순자산의 감소 6,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6,949,203	52,378,185	4,571,018	8.7
Ⅱ. 재정운영결과	99,479,579	79,174,798	20,304,781	25.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1,232,154	79,087,711	22,144,443	28.0
Ⅳ. 조정항목	△3,545,247	4,658,106	△8,203,353	△176.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55,156,531	56,949,203	△1,792,672	△3.1

자료: 교육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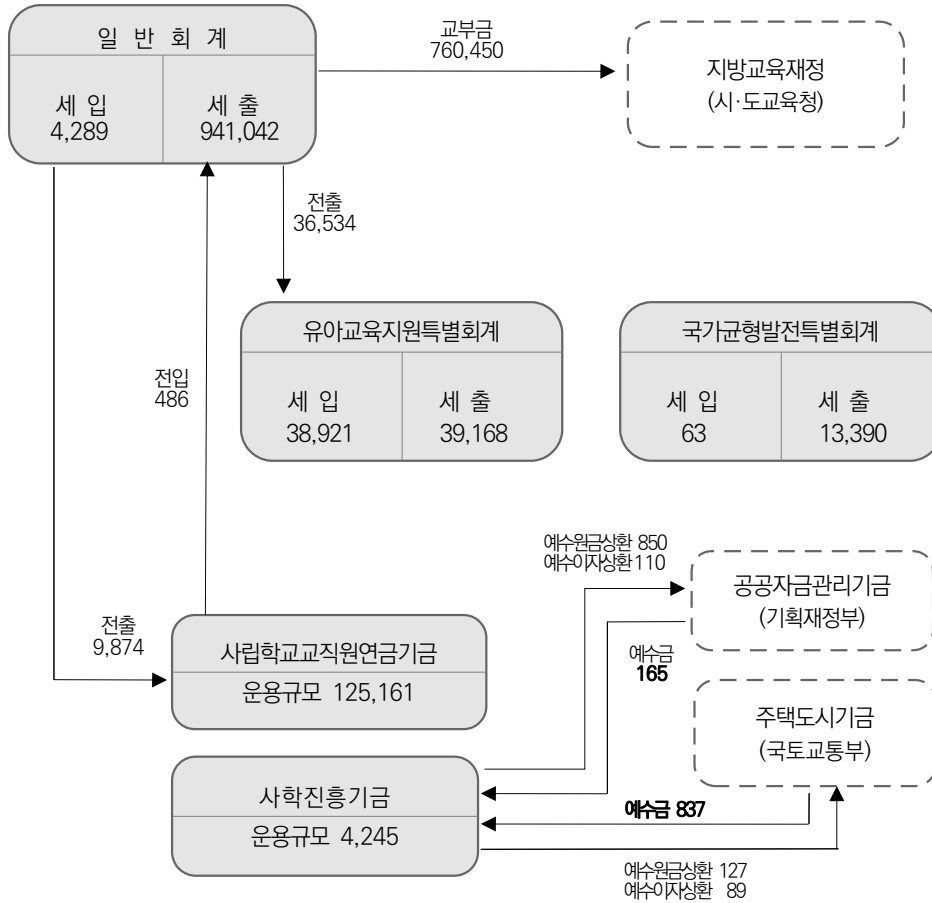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교육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6,534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9,874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165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850억원과 예수이자 110억원을 상환하였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837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127억원과 예수이자 89억원을 상환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그린스마트 스쿨**, ②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③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단계 사업 연부율 조정 등으로 881억원이 감액(6,075억원 → 5,194억원)되었고,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은 실집행 저조 및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일치 등을 위해 13.8억원이 감액(22.1억원 → 8.3억원)되었다.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은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인원 조정으로 170억원이 감액(1,725억원 → 1,555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③ **전문대학 혁신지원** 등이 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원단가 2만원을 인상함에 따라 2,394억원이 증액(3조 5,896억원 → 3조 8,290억원)되었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신규 플랫폼 1개를 추가하여 400억원이 증액(2,040억원 → 2,440억원)되었다. 또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 외 추가 지원 등을 위해 140억원이 증액(3,880억원 → 4,020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② **대학(전문)혁신지원** 등이 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교육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지원 시 역차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 및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한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학(전문)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의 미 선정 대학 일부를 추가 선정하되, 이로 인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사항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한다”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②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초과세수로 인한 정부 세입경정 증액에 따라 10조 9,854억원이 증액(65조 595억원 → 76조 449억원)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면 등교에 따른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469억원이 증액(4조 6,566억원 → 4조 7,035억원)되었다⁴⁾.

3)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4)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2.5.

2022년도 교육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실현,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및 교육급여 확대 지원**, ② **국가장학금 확대**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확대**, ③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 ④ **전문대학의 신산업 미래기반 조성 지원**, 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투자를 강화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개선 여건과 별개로 증가하는 구조이며,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한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도교육청 보유재원으로 남아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등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중등 공교육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국고 환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내실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혁신기관이 양적인 확대에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시스템 등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첨단분야 진출(취업, 창업, 진학)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 수강신청이 저조한 교육과정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수요분석 관리를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 등 교육과정 이수 실적 및 진로성과 연계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법인 전환 이후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관리 및 정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출연금의 정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²⁾ 제외)로 조성된다.³⁾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고, 특별교부금은 다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를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교부금은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프로그램 1500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구 분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및 교육세 일부 ¹⁾)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관리 (10%)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 검토 후 교부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2023년 신설) 제외
자료: 교육부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76조 449억 5,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2년 집행액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8,554억 1,4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은 2조 1,895억 4,200만원 규모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조 3,137억 2,500만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6,568억 6,300만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2,189억 5,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및 증액교부금 포함 ¹⁾)		65,059,537 (69,798,032)	76,044,956 (80,783,451)	76,044,956 (80,783,451)	76,044,956 (80,783,451)	75,760,666 (80,133,510)
보통교부금		63,217,987	73,855,414	73,855,414	73,855,414	73,533,444
특별교부금		1,841,550	2,189,542	2,189,542	2,189,542	2,227,222
	국가시책	1,104,930	1,313,725	1,313,725	1,313,725	1,336,333
	지역현안	552,465	656,863	656,863	656,863	668,167
	재난안전관리	184,155	218,954	218,954	218,954	222,722

주: 1) 2022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포함, 2023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포함

1.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4)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0조5)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6)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5)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세계잉여금 정산액은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규모는 5조 2,526억 3,300만원이며, 추경증액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포함한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액은 81조 2,975억 8,9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액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경예산(A)	세계잉여금 정산분(B)	최종액 (A+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5,252,633	81,297,589
보통교부금	63,217,987	73,855,414	5,088,972	78,944,386
특별교부금	1,841,550	2,189,542	163,661	2,353,203
국가시책	1,104,930	1,313,725	98,197	1,411,922
지역현안	552,465	656,863	49,098	705,961
재난안전관리	184,155	218,954	16,366	235,320

주: 세계잉여금 정산은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2022년도에 교부한 것임

자료: 교육부

나.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7)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되며, 교육·학예 등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의회의 의결로 예산을 확정한다.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다른 법률,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시·도교육청 기금 재원은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달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청 자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채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이 80.6%(예산액 기준)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6%로 교부금 의존도가 높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9조 6,973억 8,000만원으로, 109조 9,070억 5,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9조 8,632억 800만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되었고, 18억 6,6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419억 7,9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07,247,319	2,450,061	109,697,380	109,907,053	109,863,208	1,866	41,979
중앙정부이전수입	86,463,986	-	86,463,986	86,641,973	86,641,973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1,076,099	-	81,076,099	81,297,589	81,297,589	-	-
- 증액교부금	909,449	-	909,449	909,449	909,449	-	-
- 국고보조금	616,119	-	616,119	605,889	605,889	-	-
- 특별회계전입금	3,862,320	-	3,862,320	3,829,046	3,829,046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067,671	-	17,067,671	16,938,234	16,938,234	-	-
- 지방교육세전입금	8,485,862	-	8,485,862	8,287,784	8,287,784	-	-
- 담배소비세전입금	661,643	-	661,643	636,317	636,317	-	-
- 시도세전입금	4,530,438	-	4,530,438	4,520,079	4,520,079	-	-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80,345	-	180,345	157,717	157,717	-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187,789	-	1,187,789	1,316,296	1,316,296	-	-
- 교육급여보조금	24,757	-	24,757	24,755	24,755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95,497	-	95,497	95,497	95,497	-	-
- 비법정이전수입	1,901,339	-	1,901,339	1,899,789	1,899,789	-	-
기타이전수입	166,909	-	166,909	168,242	168,242	-	-
자체수입	1,046,472	-	1,046,472	1,202,550	1,158,705	1,866	41,979
- 입학금 및 수업료	4,957	-	4,957	5,659	5,258	306	95
- 사용료 및 수수료	14,295	-	14,295	14,242	14,211	-	31
- 자산수입	222,868	-	222,868	245,688	245,326	43	320
- 이자수입	119,788	-	119,788	207,531	207,531	-	-
- 금융자산회수	-	-	-	-	-	-	-
- 기타수입 등	684,564	-	684,564	729,430	686,380	1,517	41,533
지방채 및 기타	1,891,470	2,450,061	4,341,530	4,345,243	4,345,243	-	-
- 교부금부담	-	-	-	-	-	-	-
- 자체부담	-	-	-	-	-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기타(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1,891,470	2,450,061	4,341,530	4,345,243	4,345,243	-	-
내부거래	610,811	-	610,811	610,811	610,811	-	-
- 기금전입금	610,811	-	610,811	610,811	610,811	-	-

주: 현재 2022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3. 3.) 기준(2023. 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9조 6,973억 8,000만원으로, 102조 1,902억 4,800만원(현액 대비 93.2%)이 집행되었고, 4조 5,903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조 9,167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문의 이월액이 3조 3,91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3.9%를, 예비비 및 기타의 불용액이 1조 2,188억 2,4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정책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7,247,319	2,450,061	109,697,380	102,190,248	4,590,348	2,916,783
유아및초중등교육	42,775,429	2,258,472	45,192,759	39,954,761	4,316,845	921,153
- 인적자원운용	433,730	724	434,457	409,865	434	24,158
- 교수학습활동지원	7,910,389	330,136	8,241,602	7,329,933	753,979	157,689
- 교육복지	5,925,102	12,355	5,938,590	5,832,075	8,332	98,182
- 보건급식	5,086,948	90,268	5,319,236	5,006,529	162,223	150,484
- 학교재정지원관리	12,817,325	-	12,817,325	12,768,707	-	48,619
- 학교시설여건개선	10,601,935	1,824,989	12,441,548	8,607,652	3,391,876	442,020
평생교육	248,109	836	248,945	231,097	12,584	5,264
교육일반	20,051,044	190,753	20,254,199	19,892,659	260,920	100,621
- 교육행정일반	1,310,856	17,437	1,339,450	1,238,880	41,374	59,197
- 기관운영	954,288	173,316	1,128,566	872,108	219,545	36,912
- 재무활동	17,785,900	-	17,786,183	17,781,671	-	4,511
예비비 및 기타	1,523,393	-	1,352,132	133,308	-	1,218,824
인건비	42,649,345	-	42,649,345	41,978,423	-	670,922

주: 현재 2022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3. 3.) 기준(2023. 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8조 8,617억 1,300만원(전체 집행액 대비 4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출금 등이 17조 4,491억원 7,700백만원(전체 집행액 대비 17.1%), 기금으로의 내부거래가 16조 6,620억 2,100만원(전체 집행액 대비 16.3%) 등이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성질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7,247,319	2,450,061	109,697,380	102,190,248	4,590,348	2,916,783
인건비	49,592,897	1,079	49,589,683	48,861,713	270	727,699
물건비	3,407,386	24,755	3,519,609	3,293,864	67,946	157,799
이전지출	3,759,030	3,512	3,758,004	3,655,552	34,084	68,368
자본지출	14,236,993	2,416,710	16,760,919	11,738,906	4,483,976	538,037
상환지출	358,289	-	358,289	358,288	-	1
전출금 등	17,668,232	4,005	17,657,646	17,449,177	4,072	204,397
예비비 및 기타	1,562,471	-	1,391,209	170,727	-	1,220,482
내부거래	16,662,021	-	16,662,021	16,662,021	-	-

주: 현재 2022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3.3월) 기준(2023. 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6개 기금, 부산 4개 기금, 대구 2개 기금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 교육교류협력기금 등 기금 신설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2022년도에는 교육정보화기금 등을 신규로 설치하였다. 2022년말 기금 조성액은 22조 1,671억 5,600만원이며, 이 중 3.5%(7,860억 1,100만원)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21조 3,811억 4,5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었다.

[시·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교육청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 (A)	사용액 (B)	현재액	집행률 (B/A)
서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07	15,827	8,515	7,312	53.8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016	118,594	3,425	115,169	2.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2,971	138	2,833	4.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289,791	80,287	1,209,504	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	465,100	-	465,100	0
	생태전환교육기금	2022	1,006	588	418	58.4
부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918,889	-	918,889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485,597	-	485,597	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2	500	100	400	20.0
	교육정보화기금	2022	240,000	-	240,000	0
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	490,337	-	490,337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700,270	-	700,270	0
인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055,154	229,505	825,649	21.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64,944	110,495	454,449	19.6
광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1,351	-	1,351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46,059	-	446,059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1,925	-	201,925	0
대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548,248	-	548,248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839	-	202,839	0
울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53,395	-	153,395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301,804	-	301,804	0
세종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447,626	-	447,626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0,370	-	50,370	0
경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07	27,874	11,135	16,739	39.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614	295	3,319	8.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758,388	-	1,758,388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1,147,829	-	1,147,829	0
강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286	-	3,286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1,030,662	-	1,030,662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487,498	-	487,498	0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	50,000	-	50,000	0

(단위: 백만원, %)

교육청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 (A)	사용액 (B)	현재액	집행률 (B/A)
충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912,901	70,000	842,901	7.7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1	97,187	10,155	87,032	10.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334,978	-	334,978	0
충남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2015	79,866	7,255	72,611	9.1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998,726	-	998,726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	-	0	0
전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1	994	-	994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790,163	-	790,163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59,700	-	559,700	0
전남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2001	8,376	6,830	1,546	81.5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303	-	303	0
	폐교매각대금관리기금	2020	13,764	-	13,764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870,943	-	870,94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	422,800	-	422,800	0
경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441,518	104,400	337,118	23.6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013	282,301	27,595	254,706	9.8
	공무원주택임차기금	2010	5,301	4,587	714	86.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850,144	-	850,144	0
경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131,420	68,000	1,063,420	6.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1	704	-	704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748,151	25,900	722,251	3.5
제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44,077	16,806	227,271	6.9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21	116,091	-	116,091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5,000	-	45,000	0
합 계			22,167,156	786,011	21,381,145	3.5

주: 1.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2. 2022년말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기준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논의 필요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⁸⁾ 제외)로,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그 규모가 결정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되었으며, 2001년 내국세의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봉급교부금과 내국세교부금의 통합,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보전 등에 따라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 20.46%, 2020년 20.79%로 조정되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니라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나. 분석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개선 여건과 별개로 증가하는 구조이며,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한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도교육청 보유재원으로 남아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규모는 학생수와 같은 교육수요 지표 변동과는 무관하게 내국세 및 교육세 규모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0년 동안(2013~2022년) 연평균 7.9% 증가한 반면,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10.4% 증가하였다.

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3~2022년]

(단위: 억원, 만명,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10,619	408,681	394,056	431,615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6	7.9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수	657	638	620	602	583	570	556	544	535	532	△2.3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6.25	6.41	6.35	7.16	7.99	9.20	10.88	9.85	11.28	15.28	10.4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교부기준(세계잉여금, 추경예산 포함)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격차가 있었지만 2020년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비교]

(단위: 명)

항목		2008		2015		2020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	초등	24.1	16.4	16.8	15.2	16.3	14.4
	전기 중등	20.2	13.7	15.7	13.0	13.1	13.2
	후기 중등	16.5	13.5	14.1	13.1	10.9	12.6
학급당 학생수	초등	30.0	21.6	23.4	21.1	22.7	20.3
	전기 중등	35.3	23.9	30.0	23.3	26.2	22.6

주: 1. OECD 기준 교원은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 및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임

2.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3. OECD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단계는 구분 가능하여 해당 교사 및 학생은 포함

4.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OECD는 전일제·비전일제 모두를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를 토대로 교육부 작성

특히, 향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행 내국세 연동의 교부금 산정방식이 유지될 경우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 12.)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는 2023년 532만명에서 2040년 329만명, 2070년 22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학령인구(6~17세) 추계]

(단위: 천명)

구 분	2023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학령인구	5,326	5,100	4,068	3,291	3,569	2,972	2,276
- 초등(6~11)	2,604	2,337	1,592	1,814	1,688	1,370	1,091
- 중등(12~14)	1,362	1,400	1,151	774	928	784	562
- 고등(15~17)	1,360	1,363	1,325	703	953	818	623

주: 중위 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 12.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5,200달러로 OECD 평균 10,722달러의 1.4배이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OECD 평균 17,559달러의 64.3%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단위: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구 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초등학교~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OECD 평균	10,090	814	10,722	13,882	3,386	17,559	11,004	1,330	11,990
한 국	13,874	1,326	15,200	6,069	5,219	11,287	11,119	2,700	13,819

주: 1. 합계에 해외재원 포함, 한국의 경우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

2. 초기재원 기준: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을 정부 부담에 포함하여 산출

3. 초등교육에 유아교육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 2022. 10.

최근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시도교육청은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기금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수는 2017년 9개에서 2022년 55개로 확대되었으며 연도말 적립액은 같은 기간 3,206억 7,800만원에서 21조 3,811억 4,500만원으로 66.7배로 증가하였다.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금은 은행예금⁹⁾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예금별로 연이자율은 최저 0.6%~최고 5.5% 수준이며, 2022년 총 617억 2,2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¹⁰⁾

[연도별 시·도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7	9	356,613	35,935	320,678
2018	10	466,881	33,077	433,804
2019	20	1,798,057	82,336	1,715,721
2020	32	2,976,076	81,311	2,894,765
2021	46	6,167,707	763,647	5,404,060
2022	55	22,167,156	786,011	21,381,145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특히, 시·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설을 통하여 기금 적립액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예측오차가 발생한 영향도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액과 불용액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출로 계상되기 때문에, 기금 전출로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감소한다. 그러나 기금 전출금은 실제

9) 16개 교육청은 농협을, 1개 교육청은 부산은행을 금고로 선정하였다.

10) 시·도교육청별로 예금상품 및 이자율, 예치 시기 등에 편차가 있어 적립금 규모에 비해 이자수익이 적은 경우도 있다.

(단위: 억원)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적립금	18,003	16,449	11,906	12,801	6,493	7,511	4,552	4,980	29,263
이자수익	86	73	6	17	4	16	17	26	17
교육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적립금	15,174	12,649	10,713	13,509	13,094	14,427	17,864	3,884	213,811
이자수익	81	37	18	42	2	115	49	11	617

자료: 교육부

로 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기금에 적립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22년말 기준 17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액은 11조 5,845억원, 16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적립액은 8조 8,074억원 규모이다.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9	6	11,828	-	11,828	-	-	-	-
2020	13	23,056	-	23,056	-	-	-	-
2021	14	36,895	6,774	30,121	13	18,721	207	18,514
2022	17	120,564	4,719	115,845	16	90,409	2,335	88,074

주: 1)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2) 2022년은 가결산(2022. 3.) 기준(2023. 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출로 계상되는 기금 전출금을 확대하면서 2019년 이후 이월액, 불용액 등을 포함하는 결산상 잉여금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21조원(34.7%) 증가함에 따라 기금 전출금을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3.1조원)¹¹⁾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11)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는 교육청의 내부유보금(1.07조원)이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추경예산 등을 통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예산으로, 2022년도 서울시의회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내부유보금으로 1.07조원이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추이: 2015~2022년]

(단위: 억원)

구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보조금 반환액	지방채 상환액	순세계 잉여금 ¹⁾²⁾
2015	623,605	565,979	57,626	37,330	405	264	19,628
2016	660,979	600,419	60,560	39,001	138	1,587	19,835
2017	724,435	656,114	68,320	46,056	113	1,574	20,577
2018	788,365	716,127	72,238	48,858	134	885	22,360
2019	873,873	804,011	69,862	47,599	273	230	21,761
2020	822,266	777,055	45,211	27,244	562	502	16,902
2021	880,760	838,102	42,658	24,501	335	101	17,721
2022	1,098,632	1,021,902	76,730	45,903	83	0	30,743

- 주: 1) 순세계 잉여금: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2) 2022년도 서울시의회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삭감된 경비를 내부유보금(1.07조원)으로 편성하였고, 당해연도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됨
 3) 현재 2022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3.3월) 기준(2023. 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이상을 종합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타 기금과 달리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보유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로 시도교육청이 적절한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도말 보유재원은 2017년 2조 577억원에서 2022년 23조 2,662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1.1%¹²⁾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2)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의 22.8%를 차지한다.

[시·도교육청 연도말 보유자원 추이: 2017~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5
연도말 보유자원	20,577	22,360	33,569	39,940	66,356	232,662
순세계잉여금	20,577	22,360	21,761	16,902	17,721	30,7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11,828	23,056	30,121	115,84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	-	-	18,514	86,074

- 주: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추경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합한 최종액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각 회계연도 말 기준
 3.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서울시교육청 내부유보금(1.07조원) 포함

자료: 교육부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2. 초·중등 공교육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초·중등 공교육은 초·중등 학생들이 받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OECD 교육지표 2021」은 공교육 기관을 직접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 직접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기관’(교육부, 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초·중등 공교육의 재원은 정부재원(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 민간재원(가계 등), 해외재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므로 정부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초·중등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교육비는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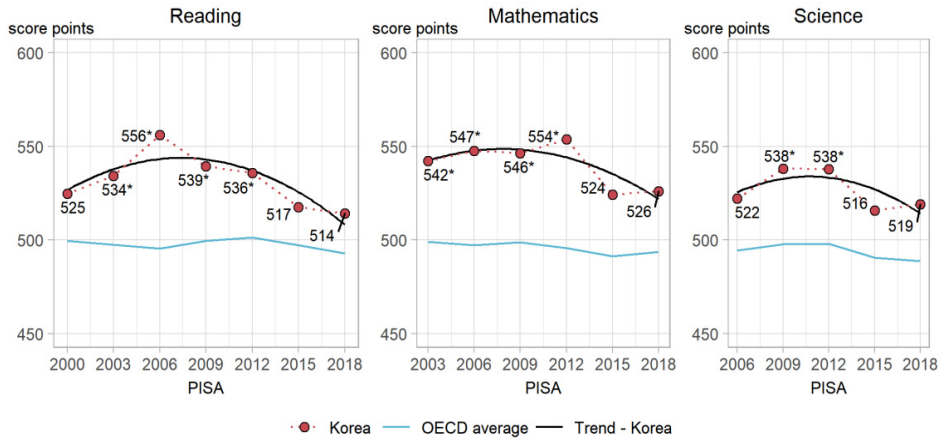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초·중등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중등 공교육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읽기, 수학, 과학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지만, 점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읽기 점수는 2006년 556점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514점으로 하락하였으며, 수학 점수는 2012년 554점에서 2018년 526점으로 하락하였으며, 과학 점수는 2012년 538점에서 2018년 519점으로 하락하였다.

13)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 비교 연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22. 6. 13.)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3에서 과목별로 5.9%~11.6%, 고2에서 7.1%~14.2%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중3은 국어, 영어 교과에서, 고2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교과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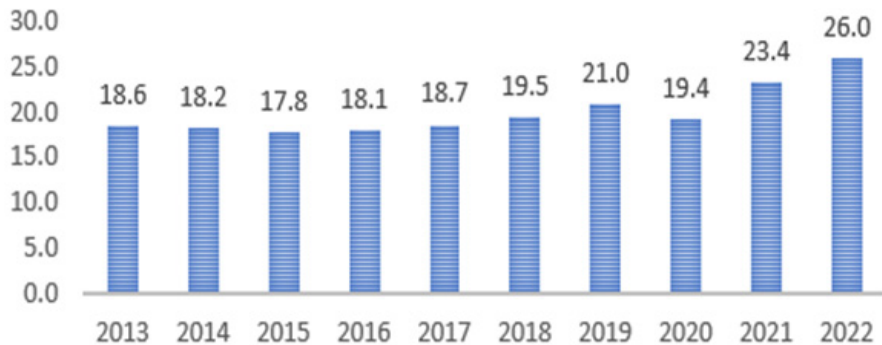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	4.1	11.8	3.3	4.0	9.0	3.6
2021	6.0	11.6	5.9	7.1	14.2	9.8

자료: 교육부

또한 우리나라 초·중등 공교육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1.4배로 초·중등 공교육의 보편성은 확보했으나 수월성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초·중등 사교육비는 2017년부터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는 약 26조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다.

[초·중등 사교육비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교육부-통계청 공동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연도별 결과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는 49만원이며, 영어(23만 6천원), 수학(22만원), 국어(13만 7천원) 순으로 많이 지출하였다.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의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50.0%), 선행학습(24.1%), 진학준비(14.2%)에서 비중이 높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2018~2022년 동안 교육청 교육재정지출은 33.5조원 증가하였으나, 학생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확대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교육재정지출은 실제 사업 추진보다는 기금 적립금 증가(15.9조원)에 머물렀으며, 실제 지출은 근로자인건비 증액 규모(5.5조원)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증액 규모(3.3조원)도 높았다. 다만,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지원이 3.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고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1~2022년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ICT활용교육 지출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18~'22 증가액
전체 세출	73,737,072	82,081,073	77,332,619	84,919,951	107,247,320	33,510,248
기금 전출금	110,268	133,1176	1,178,019	3,191,631	15,999,449	15,889,181
인건비	33,202,111	34,829,197	36,301,542	39,766,134	42,649,345	9,447,234

(단위: 백만원)

구 분	'18	'19	'20	'21	'22	'18~'22 증가액
공무원	30,478,746	31,412,411	31,995,599	33,148,572	34,431,069	3,952,323
근로자	2,723,365	3,416,786	4,305,943	6,617,562	8,218,277	5,494,912
교수학습 활동지원	4,553,657	5,036,522	5,677,830	6,500,185	7,910,389	3,356,732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7,317,921	9,106,615	6,794,184	8,795,810	10,601,935	3,284,014
교육복지 및 보건급식	9,563,765	10,759,325	11,314,835	10,322,836	11,012,050	1,448,285
학교재정 지원관리	11,154,436	11,504,362	12,530,974	12,448,099	12,817,325	1,662,889

주: 1. 최종 예산 기준

2.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처리를 위한 예산과목이 2020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금 전출금은 연도말 기금 적립금의 증가액으로 기재

3. 기존에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근로자인건비'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나, 2021회계연도부터 '근로자인건비'로 통합하여 관리

자료: 교육부

2022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은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금적립 등 교육혁신과 관련 없는 경직적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와 직결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비중은 7.38%, 교직원역량강화 지출 비중은 0.1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예산 비중은 0.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최종예산		구분	최종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적자원운용	433,730	0.40	교육복지	5,925,102	5.52
교직원역량강화	138,727	0.13	학비지원	432,841	0.40
교직원인사	114,834	0.11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511,998	0.48
교직원복지	180,169	0.17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72,209	0.07
교수학습활동지원	7,910,389	7.38	교육복지지원	4,908,053	4.58
교육과정운영	2,136,367	1.99	보건급식	5,086,948	4.74
학력신장및평가	708,589	0.66	학교재정지원관리	12,817,325	11.95
장학및연구	83,735	0.0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601,935	9.89

(단위: 백만원, %)

구 분		최종예산		구분	최종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아교육	664,840	0.62	평생교육	248,109	0.23
	특수교육	373,726	0.35	교육행정일반	1,310,856	1.22
	영재교육	49,431	0.05	기관운영	954,288	0.89
	독서교육	128,199	0.12	재무활동	17,785,900	16.58
	직업교육	683,536	0.64	예비비 및 기타	1,523,393	1.42
	학교정보화	1,826,605	1.70	인건비	42,649,345	39.77
	특별활동지원	573,480	0.53	공무원인건비	34,431,069	32.10
	학생생활지도	414,415	0.39	근로자인건비	8,218,277	7.66
	대안교육	63,156	0.06			
	진로진학교육	81,763	0.08			
	학생선발배정	122,547	0.11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사교육의 목적에서 학교수업 보충(50.0%) 유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역량 및 학습 속도에 맞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등 AI기술을 접목한 교실 수업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핵심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교육을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재정지출 기초를 기존 인건비, 학교시설확충 중심에서 학습 콘텐츠 및 교수 방식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특별교부금 사업과 보통교부금 사업 간 차별화 강화 필요

가. 현 황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으로 교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현안수요 및 재난지원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지는 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2018년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축소(4% → 3%)되면서 특별교부금 규모는 2017년 1조 7,826억원에서 1조 5,029억원 규모로 15.6%(2,797억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내국세가 증가하면 2022년에는 2조 3,532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 예산액: 2017~2022]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6
보통교부금	448,084	509,499	588,011	520,434	586,217	788,644
특별교부금	17,826	15,029	17,294	14,997	17,154	23,532
국가시책	10,696	9,018	10,376	8,998	10,292	14,119
지역현안	5,348	4,508	5,189	4,499	5,146	7,060
재난안전관리	1,783	1,503	1,729	1,500	1,715	2,353

주: 세계잉여금 및 정산분을 합한 최종액 기준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차별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육부 각 실·국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확정·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2022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조 4,119억 2,200만 원은 5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 87개 세부사업으로 교부되었다.

[2022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부액
[1]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1]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45,094
	[1-2] 혁신교육 확산 지원	14,977
	[1-3]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지원	20,661
	[1-4]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및 활성화	181,393
	[1-5]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	18,353
	[1-6]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 평가 지원	9,399
	[1-7]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교육	12,601
	[1-8]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및 임용연수체제 개선	14,240
	[1-9] 민주시민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12,040
[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10] 교육복지 지원 강화	149,112
	[2-1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521,606
	[2-1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	6,572
	[2-13] 유아교육 역량강화	7,346
	[2-14] 특수교육 지원강화	16,738
[3] 안전한 학교 구현	[3-15] 학생건강 및 안전	38,138
	[3-16]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8,161
[4] 진로·직업교육 책임강화	[4-17] 중등 직업교육 혁신 지원	276,315
	[4-18]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10,582
[5] 교육행정지원	[5-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	28,902
	[5-20] 지방교육 행·재정 지원	66,669
합 계		1,411,922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2-10] 교육복지 지원 강화)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을 지원(2020년 1,007억원, 2021년 1,364억 4,200만원, 2022년 1,261억 3,100만원)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2020년에 신규 도입(교육부 일반회계)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¹⁴⁾에 근거하여 국가(증액교부금)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청의 부담을 고려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증액교부금 신설을 통하여 일부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와 같은 점과 교육청 연도말 보유재원이 2020년 4.0조원, 2021년 6.6조원, 2022년 23.3조원으로 증가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 부담 47.5%는 보통교부금 및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청 부담 47.5% 중 일부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다.¹⁵⁾

② 교육부는 2022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48억 1,800만원 중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 사업 등 학교시설 신·증축, 보수 사업에 95.3%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에 해당하는 시설 관련 사업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교육기관 등 시설비”(2022년 6조 3,215억원)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시설항목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5) 2023년부터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학교시설 관련 사업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합계
금액	709,677	5,810	29,331	744,818
(건)	(1,062)	(6)	(18)	(1,086)
금액 비중	95.28	0.78	3.94	100.0

주: 교부통지액 기준(감교부 이전)이므로 최종 교부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교육부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도 시설관련 사업이 편성되면서 시설관련 사업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 2022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은 12조 4,415억원 중 8조 6,076억원 (69.2%)이 집행되고 나머지 3조 3,919억원은 이월되었으며 4,420억원은 불용되었다.

③ 2017. 12.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18. 1. 1. 시행) 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2017년 55.1%) 기존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보통교부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향후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앞당길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2018년부터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보강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보통교부금에 편성된 내진보강 수요는 2017~2022년 1조 2,500억원이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에 편성된 내진보강 사업은 동기간 5,986억원 규모이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2017~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보통교부금 내진보강 수요 ¹⁾	1,500	1,700	2,500	2,500	1,800	2,500	12,5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²⁾	1,783	1,502	1,730	1,499	1,731	2,426	10,671
- 재해복구	309	7	32	66	-	141	555
-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982	-	-	-	-	-	982
- 내진보강	491	1,495	1,698	350	1,145	807	5,986
- 코로나19 대응	-	-	-	1,083	586	1,477	3,146

주: 1) 교육기관 등 시설비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으로 수요 산정

2) 2017년은 포항지진 피해 지원으로 재해복구 수요가 많았음

자료: 교육부

종합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통교부금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금과 차별화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은 시설확충, 의무지출 등 통상적인 교육수요보다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핵심 역량 제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질 제고 등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¹⁾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SW·AI 인재 양성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스마트학습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의 2022년도 예산현액 4,315억 2,700만원 중 4,124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91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519,404	431,527	-	431,527	412,412	95.6	-	19,115	421,15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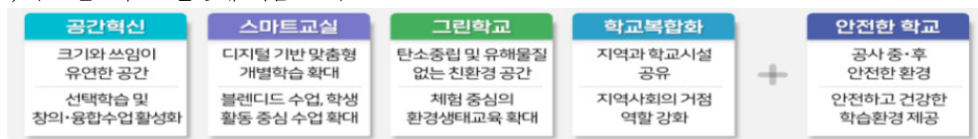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2020년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로 그린스마트 스쿨²⁾은 ①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②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③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⑤ 안전학 학교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유·초·중등교육시설 중 2,835동을 선별³⁾하여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04-300

2) < 그린스마트스쿨 5대 핵심요소 >



3) 교육부는 40년 경과 노후시설(7,980동) 중 적정규모육성기준 미만 학교 및 합숙소 등 교육용도 외 시

2021~2025년 동안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중기재정계획 하에 편성되었다. 전체 물량 중 75%(2,126동)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25%(709동)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021~2025년 재정사업 총사업비는 12.9조원(국비 30%, 시·도교육청 지방비 70%), BTL 임대료상환은 총 5.9조원(국비 30%, 지방비 70%) 규모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연차별 투자규모(안)]

(단위: 동, 조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계 (전체)
재정 사업	총사업비		3.5108	2.3414	1.1735	2.3471	2.3471	1.1735	12.8934
	(물량, 동)		582	386	193*	386	386	193	2,126
	예산 편성	계(A)	0.3334	1.7315	1.2666	2.3837	1.7917	5.3865	12.8934
		국비 (30%)	0.0943	0.4315	0.4212	0.6734	0.5075	1.5257	3.6536
		지방비 (70%)	0.2391	1.3000	0.8454	1.7103	1.2842	3.8608	9.2398
민자 사업	민자한도액		1.0919	0.7578	0.7578	0.7578	0.7693	-	4.1346
	(물량, 동)		179	132	132	132	134	-	709
	임대 료 상 환	계(B)	-	-	-	0.0219	0.0660	5.7952	5.8831
		국비 (30%)	-	-	-	0.0066	0.0198	1.7385	1.7649
		지방비 (70%)	-	-	-	0.0153	0.0462	4.0567	4.1182
합계	(물량, 동)		761	518	518	518	520	-	2,835
	계 (C=A+B)		0.3334	1.7315	1.2666	2.4056	1.8577	11.1817	18.7765
	국비 (30%)		0.0943	0.4315	0.4212	0.6800	0.5273	3.2642	5.4185
	지방비 (70%)		0.2391	1.3000	0.8454	1.7256	1.3304	7.9175	13.358

주: * 물량 386동 → 193동(감 50%) / (동단위 물량) 건물 연면적 2,750㎡를 1동 기준으로 표시
자료: 교육부

설을 제외한 6,088동의 약 50%에 대해 선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1.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및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국고 환수 필요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국고 환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 및 교육청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취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⁴⁾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21~2022년 동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으로 설정하였지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지방비)을 이월 처리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여 집행시기 도래 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다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예산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면 실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집행액으로 처리된다.

2022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의 이월 예산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합한 예산은 1조 2,123억원 규모이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지방비 예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현황]

(단위: 억원)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출금	2,504	2,730	-	1,687	-	214	-	99	1,456
교육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출금	984	444	324	264	643	930	844	-	12,123

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교육부

즉, 교육부 및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계정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로 설정하였지만,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에서 발생한 이월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취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국한해서 집행해야 하지만, BTL 사업 사전기획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보조금 예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국고 환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전체 물량 중 75%는 재정사업으로, 25%는 BTL 사업으로 추진하며, BTL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상환분(2024년부터 발생)의 3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보조금은 재정사업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BTL 사업 사전기획에 사용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5)의 취지에 부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

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3년 5월 실무회의 시 BTL 사전기획 추진 시 재정사업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 자체 재원을 통해 추진되도록 안내 조치하였다는 설명이다.

셋째, 사립학교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재원별로 집행실적을 명확히 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준수하여 교부금의 재원별 구분 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⁷⁾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로 구분하고 중앙관서는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실적보고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별 예산, 집행실적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원별 구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10.~2023.5.까지 전국 17개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 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사업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점검 대상 13개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215건, 3억 7,200만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간접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 사례]

'22년도 국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기관 및 작성자

제출기관명	00 학교	작성 기준일	2022.12.31.
작성자	000	연락처	0000
확인자	000	연락처	0000

2. 추진현황

(단위 : 학교수)

구 분	사전기획 (재정+BTL+미정)				설계용역 (재정)				공 사 (재정)				비고 (BTL)
	준비 중	진행 중	완료	계	준비 중	진행 중	완료	계	착공 전	진행 중	완료	계	
2021년 대상사업													
2022년 대상사업	0	0	1	1	1	0	0	1	1	0	0	1	0

3. 불용액 발생 내용(사유)

- 해당없음

4. 집행부진 사유

- 해당없음

5. 기타의견

자료: 교육부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교육청이 보조사업자이고 초·중등 학교가 간접보조사업자이다. 교육청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교부하는 반면, 사립 학교에 대해서는 비목을 구분하지 않고 '사립학교 전출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립학교 보조금 실적보고서에 비목별 집행실적을 명확히 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국고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공립					사립	합계
	사전 기획	설계 용역	공사	임시 교사비	소계	사립학교 전출금	
2021	14,247	2,518	126	7,906	24,797	30,705	55,502
2022	927	27,822	44,631	38,434	111,813	50,167	161,980

주: 2022회계연도 국고 집행내역 합계는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예산 집행실적 현황 중 국비(2021년 2차 + 2022년 1차) 합계와 일치(2021회계연도 이월예산은 제외)

자료: 교육부

넷째, 각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차액을 고려한 교부, 낙찰차액 불용처리 등의 조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는 적극적인 관련 규정의 이행이 필요하며, 이월 낙찰차액은 국고 환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은 낙찰차액에 대해 불용처리, 낙찰차액을 고려한 교부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체단체보조사업 관련 내용으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3조도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2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결과, 낙찰차액은 126억 1,11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부는 낙찰차액을 이월액에 포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승인하였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초년도에 교부한 금액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보조사업 종료시(사업기간 3년)까지 시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도 아니고 국고와 지방비 집행실적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는 K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교육부는 낙찰차액에 대하여 감액하여 교부하거나 반납받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게 2022년 12월 실적보고 시 낙찰차액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23년 3월에 낙찰차액 현황을 취합하여 2023년 7월 보조금 2차 교부 시 감교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다섯째, 교육부 및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의 재정을 국고보조사업 관리 기능이 미비한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의 재정을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으며, 에듀파인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이다.

그러나 K에듀파인 시스템은 국고와 지방비 등 재원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사업 종료 후 정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교육부는 2023년 7월부터는 그린스마트 스쿨 누리집 내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을 개선·운영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낙찰차액 이월 등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연례적인 집행을 저조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학부모 반대, 관련 절차 수행 등으로 당초 계획 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2021년에 신규 도입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해연도 국비 942억 5,200만원 중 58.9%(555억 300만원)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이월되었다. 또한 지방비 3,804억 100만원 중 8.4%(318억 1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이월되었다. 2021년 이월된 국비 387억 5,000만원은 99.5%(385억 5,200만원)가 집행되었으나 지방비 이월액 2,506억 1,300만원 중 22.4%(560억 1,8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시·도교육청 실집행액: 2021~2022년]

(단위: 백만원, %)

비고		예산			시·도교육청 실집행액			실집행률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21	당해연도	94,252	380,401	474,653	55,503	31,801	87,304	58.9	8.4	18.4
	이월	38,750	250,613	289,363	38,552	56,018	94,570	99.5	22.4	32.7
'22	당해연도	412,412	1,762,435	2,174,847	162,163	80,452	242,609	39.3	4.6	11.2

주: 2021년 당해연도 예산은 2021년말 기준, 2021년 이월 예산 및 2022년 당해연도 예산은 2022년말 기준
자료: 교육부

2022년 실집행률은 2021년보다 하락하였으며, 2022년 당해연도 국비 4,124억 1,200만원 중 39.3%(1,621억 6,300만원)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이월되었다. 또한 지방비 1조 7,624억 3,500만원 중 4.6%(2,426억 9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이월되었다.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바,⁸⁾⁹⁾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절차 수행에 따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은 더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청에서 설계공모 등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교육부 및 교육청은 낙찰차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승인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1~2022년 사업 추진 결과, 낙찰차액은 126억 1,111만원이 발생하였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8)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3. 국고 부담 비중의 점진적인 조정 검토 필요

공사립학교 시설확충비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점,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적립금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국비 비중을 낮추고 교부금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립 초·중등 교육시설 증개축 사업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공립학교 증설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수요항목¹⁰⁾에 해당하므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여왔으며,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특별한 재정수요이기 때문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왔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공사립 초·중등 교육시설 증개축 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30%)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만으로는 시설노후화 해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시설 인프라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므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동 사업의 예산안이 편성된 2020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에, 국고를 일부 지원하여 교육청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유지되어 온 재정운용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교육자치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며 사업 도입 시점과는 달리 정부재정 여건은 과거보다 악화된 반면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교부금의 증가로 2022년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¹¹⁾에 11.6조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¹²⁾에 8.6조원의 적립금을 쌓고 있으며,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의 지출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용도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과 유사한 과거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는 점,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적립금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국비 비중을 낮추고 교부금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는 시·도교육청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2019. 12. 3.)되었으며, 제30조는 교육감이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복지플랫폼 구축사업 계획 변경으로 당초 사업취지 축소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가. 현 황

복지플랫폼 구축¹⁾은 퇴직 교직원이 보유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노후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복지플랫폼 구축의 2022년도 계획현액 9억 4,000만원 중 5억 4,300만원(57.8%)를 집행하고, 3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복지플랫폼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플랫폼 구축	940	940	-	940	543	57.8	-	397	-
일반수용비	290	270	-	270	181	67.0	-	89	-
일반연구비	0	20	-	20	20	100.0	-	0	-
공사비	0	300	-	300	247	82.3	-	53	-
자산취득비	650	350	-	350	95	27.1	-	255	-

자료: 교육부

2022년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 9,000만원,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 콘텐츠 자체 제작 스튜디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되어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자산취득비에서 3억원을 공사비로 계획변경하여 집행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038-301

나. 분석의견

첫째,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센터 공간이 축소되고 스튜디오 설치 및 교육센터 기술장비를 활용한 교육콘텐츠의 제공 등이 제한되어 당초 계획한 전문적·종합적인 교육센터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공실률이 20%에 달하는 대전회관(대전광역시 서구)¹⁾을 교직원 재직자 및 퇴직자의 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비품을 구입하고 교육 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설치하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2022년 예산에서 수립하였다.

[2022년도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세부내역]

내역	내용	예산 내역	비목
교육센터 구축	사학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관(대전광역시 서구) 공실 사무실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센터 구축	구축비용 (재료비, 비품 등 제반비용) 등 3억원	자산 취득비
교육 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	연금제도, 연금업무와 관련한 자체 사내강사의 온라인 교육제작 및 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구축사업비	4K 카메라 시스템, 줌렌즈 시스템, 고정용 카메라 등 3억 5,000만원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교직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공동활용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학습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사업비	2억 9,000만원	일반 수용비

자료: 교육부

1) 대전회관은 지상 20층 및 지하 5층 건물이며, 2021년 10월 현재 4층은 전체 층이 공실이며 다른 층은 부분적으로 공실 상태로, 4층 전체를 교육센터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사무실 공간인 4층 전체(2,382.45㎡)가 별도의 공사 없이 교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기 등을 구비하여 교육센터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센터 구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5,000만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TP교육센터 구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앞서, 2022. 2. 21. ~ 5. 13. 동안 사업규모, 공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과업지시 전문화 등을 위해 ‘TP 교육센터 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컨설팅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4층은 교육시설로 적절하지 않으며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2022년도 공사비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인 대전센터 4층 전체 공간(2,382.45㎡)의 1/2 정도 수준인 필수공간(1,034.72㎡)에 대해 우선 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잔여면적 확장 공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사학연금공단은 종합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2022. 7. 11. ~ 8. 10. 동안 ‘TP교육센터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다.²⁾ 6억 5,000만원 규모 사업비를 활용한 1,034.72㎡면적에 대한 실시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교육센터 구축 공사비는 5억 3,900만원이 소요되고 자산취득비는 1억 1,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TP교육센터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금액
교육센터 구축비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434
	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6%)	26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26
	공급가액(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486
	부가가치세(10%)	49
	도급액(부가세 포함)	535
	예비비	4
소 계		539
공구기구비품 (사무가구, IT장비)	사무가구(관급자재)	69
	IT장비(강의실 및 토의실 등)	18
	네트워크 기자재	10

2) 동 설계용역은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1,980만원, 자체변경, 이사회 의결(6.24.))하여 추진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금액
	스튜디오 방송장비	14
소 계		111
합 계		650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이 과정에서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에 자산취득비(6억 5,000만원)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5억 3,900만원을 변경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3억원을 공사비로 전용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기존대로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도록 2022. 8. 31.에 승인하였다.

[복지플랫폼 구축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날짜	구분		금액 (백만원)	비고
2022. 7.22.	기재부 협의 변경	사학연금운영 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완료 및 교육부 제출	539	교육센터 조성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세목 신설 및 예산 확보 - (요청) 자산취득비(430-0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22. 8.31.	기재부 승인 통보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통보	300	- (승인) 자산취득비(430-01) → 공사비(420-03)

자료: 교육부

이에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공사비 예산이 3억원으로 축소되자 기존 실시 설계도의 구현가능성 검토 및 공간 조정을 위한 'TP교육센터 공간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2022.10.12.~2022.10.25.)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에 따라 센터 규모를 당초 규모(2,382.45㎡)의 1/3(661.01㎡) 수준으로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공단은 센터 규모 축소에 따라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 중 27.1%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은 대전회관 4층이 교육센터로 적합한 공간인지 철저한 검토 없이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서 센터 규모를 기존의 1/3 수준 (2,382.45㎡→661.01㎡)로 대폭 축소하였다.

[TP 교육센터 변경 전·후 도면]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이에 따라 당초에는 강의실(2실), 토의실(3실), 매체제작 스튜디오(1실), 운영실(1실), 휴게 공간, 대강당, 세미나실, 토의실, 스터디카페, 안내데스크 및 강의안내

시스템 등으로 전문적인 교육센터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교육센터는 강의실(1실), 분임토의실(3실), 휴게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조성이 이동식 스튜디오 장비로 대체되고 교육콘텐츠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콘텐츠 내용도 단순 어학 강의, 일자리 체험 과정 등으로 축소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2022년 교육 콘텐츠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콘텐츠 내용	집행액
재직 교직원	제2외국어 강의 콘텐츠	15,903
	문화복지 강의 콘텐츠	19,200
	생활영어 강의 콘텐츠	16,500
	재직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10,915
퇴직 예정자	퇴임대비 활력충전을 위한 Re:charge Up 교육	10,000
	은퇴 후 자산관리 및 세무 비대면강의	9,922
퇴직 교직원	(재능나눔) 마음을 전하는 손편지 쓰기	4,500
	(재능나눔) 퇴직교직원 비대면 봉사활동 추진	8,517
	(재능나눔) 2022년 사학연금 재능나눔 캠페인	2,272
	(재능나눔) 재능기부형 사회참여활동 운영	784
	(자격취득) 산림복지일자리 아카데미	900
	(자격취득) 숲 관련 일자리체험 과정 운영	2,112
	(자격취득) 산림복지전문가 일자리 체험 과정 운영	9,616
	(자격취득)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은발PD 양성 사업 운영	7,480
	(자격취득) 퇴직교직원 진로상담사 2급 자격 과정 운영	15,587
	(경력설계)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20,889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 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복지플랫폼 구축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당초 건설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건설비가 필요하게 되면서, 설계용역은 자체 전용을 통해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집행하였으며, 기재부의 건설비 전용 승인을 통한 공사비 규모 확정 이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기 추진 설계용역은 불필요하게 된 문제가 있다.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당초 건설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학연금공단은 'TP교육센터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일반연구비(260-01목)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1,980만원, 자체변경, 이사회 의결(6.24.))하여 일반연구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일반연구비(260-01목)는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건설비의 실시설계비(420-02목)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동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것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다.

또한 복지플랫폼구축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기재부의 공사비 전용 승인(2022. 8. 31.) 이전인 2022. 7. 11. ~ 8. 10. 동안 실시되었으며, 6억 5,000만원 규모 사업비를 활용한 1,034.72㎡면적에 대한 실시설계이며, 실시설계 결과 교육센터 구축 공사비는 5억 3,900만원이 소요되고 자산취득비는 1억 1,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당초 계획하지 못한 공사를 실시하면서 자산취득비(430-01) 6억 5,000만원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 5억 3,900만원으로 전용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2022. 7. 22.)하였으며, 기재부는 시설장비유지비 대신 공사비(420-03목)로 3억원을 전용 승인(2022. 8. 31)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비 규모가 축소되면서 기재부 전용 승인 이전에 실시한 실시설계는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공사비 예산이 3억원으로 축소되자 기존 실시설계도의 구현가능성 검토 및 공간 조정을 위한 'TP교육센터 공간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2022.10.12.~2022.10.25.)을 추가 실시하였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예산 집행 관련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의 시범사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을 저조

가. 현 황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¹⁾은 국립대병원 지원의 내역사업이며,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을 예비비로 93억 7,500만원을 편성(2022. 2. 16.)하여 10억 8,300만원(11.6%)을 집행하고, 82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병원 지원	65,260	65,260	9,375	74,635	66,343	88.9	8,292	78,833
국립대병원 공공임상 교수제 한시지원	-	-	9,375	9,375	1,083	11.6	8,292	19,06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대응과 국립대병원의 핵심역할인 진료, 교육, 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사업을 전담하는 정년트랙 의사인력을 말하며, 지방의료원에서는 필수의료²⁾ 등을 담당한다. 이들의 신분, 보수, 연수 등 근로조건은 국립대병원의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나(임용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 구체적인 직무범위, 근무기간 및 순환근무방식³⁾ 등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743-301

2)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교육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말까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코로나19로 환자 치료 및 필수 의료 제공을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150명, 1인당 인건비 단가 2.5억원)를 위해 2월 16일 예비비 93억 7,500만원을 배정받았다. 2023년에는 150명에 대한 인건비, 연구지원비, 기관부담금, 학술대회참가비 등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12개월분⁴⁾ 19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와 국립대병원 대응투자 형식으로 예산을 50:50 수준으로 분담한다.

나. 분석의견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 2022년 예비비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시범사업 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 채용이 저조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시범사업 실적을 제고하여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은 공공임상교수 채용이 저조하여 2022년 93억 7,500만원 중 10억 8,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다. 2023년 3월 기준 10개 국립대병원 모집 결과, 150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2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쳐 지원율이 낮았으며, 지원자 중 23명을 채용하여 당초 150명 채용 계획에 크게 미달하였다.

3) 선발된 공공임상교수는 임용기간의 1/3 미만을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한다.

※ (예시①) 일주일(6일근무)을 기준으로 2일 국립대병원 근무
(예시②) 일년을 기준으로 4개월 국립대병원 근무
(예시③) 삼년을 기준으로 1년 국립대병원 근무

4) 서울대병원 1인당 임상교수의 평균 인건비 및 운영비(22년)는 부교수 25호봉 기준으로 2.5억원이며, 이를 단가로 산정하였다.

[공공임상교수 채용실적: 2023년 3월 기준]

(단위: 명)

병원명	정원배정 (공고)	지원	선발	순환근무 공공의료기관
강원대병원	18	9	7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강릉의료원
경북대병원	15	3	1	울진군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14	-	-	-
부산대병원	7	-	-	-
서울대병원	17	11	8	경기도의료원(이천), 인천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 인천적십자병원
전남대병원	15	-	-	-
전북대병원	19	3	3	진안군의료원
제주대병원	15	-	-	-
충남대병원	15	3	3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충북대병원	15	1	1	청주의료원
소계	150	29	23	-

자료: 교육부

특히, 채용된 23명 중 8명은 기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로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⁵⁾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공의료제도 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면밀한 사업 준비 없이 예비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자 저조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교

5) [공공임상교수 채용자 중 이전 소속병원이 해당 공공의료기관인 자]

공공의료기관	선발자(명)	이전 소속병원이 해당 공공의료기관인 자(명)
영월의료원	3	1
속초의료원	2	1
울진군의료원	1	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3	1
진안군의료원	3	2
서산의료원	2	1
공주의료원	1	1

자료: 교육부

육부는 병원 및 의사의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보고서인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방안 연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2021. 9.)에 기초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1,424명의 공공임상교수 수요 총원이 필요하며, 이 중 1/10 규모인 140명을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진하되, 연차적으로 1차년도 32명, 2차년도 48명, 3차년도 64명을 신규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연구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차적인 선발을 제안한 것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단일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의료인력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임상교수제도와 병행하여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근무 형태의 유연화, 교육-수련 정책, 졸업 후 배치 정책등 의료인력 양성 정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되, 시범사업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다만, 공공임상교수제는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므로, 교육부는 향후 시범사업 실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¹⁾은 코로나19 시기에 저소득층 가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콘텐츠 비용(1인당 10만원)을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09억 9,400만원을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교부하였다.

[2022회계연도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10,094	10,094	10,094	10,094	100.0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 개요]

- **(예산규모)** 315.5억 원(국고 101억 원, 지방비 214.5억 원)
 - (사업비) 306.5억 원(자치단체경상보조: 30%, 교육청 대응투자: 70%)
 - (운영비) 9억 원(국고, 한국장학재단 출연)
- **(지원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지원수준)**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1
- **(지원시기)** '22. 6월 말 온라인 신청 개시('22. 12. 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추진체계)** 교육부(정책 총괄)-교육청(재원 조성)-재단(사업 집행)-지원수단 운영사(지급)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09-300

한국장학재단의 실집행 결과, 지원대상자(30만명) 중 25만명(83.4%)이 신청하고 19만명(62.2%)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교부예산 100억 9,400만원 중 62억 9,000만원(62.3%)을 집행하고 38억 400만원(37.7%)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실집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교육청	지원대상자	신청인원	지원인원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서울	41,090	33,040	25,478	1,233	726	507
부산	23,080	20,082	15,815	692	452	240
대구	17,000	14,317	11,226	510	321	189
인천	22,430	18,487	13,794	673	394	279
광주	14,310	12,357	9,422	429	270	159
대전	10,400	8,447	6,482	312	184	128
울산	2,760	2,412	1,894	83	54	29
세종	1,390	1,296	1,001	42	28	14
경기	59,990	48,778	36,501	1,800	1,042	758
강원	10,630	8,854	6,314	319	180	139
충북	10,790	9,200	6,586	324	188	136
충남	11,940	10,667	7,222	358	205	153
전북	18,960	14,437	10,739	569	309	260
전남	14,630	12,264	8,672	439	248	191
경북	17,870	15,854	11,607	536	333	203
경남	23,516	20,166	14,537	705	414	291
제주	5,680	4,825	3,223	170	91	79
한국장학재단	-	-	-	900	851	49
합계 (집행률)	306,466	255,483 (83.4)	190,513 (62.2)	10,094	6,290 (62.3)	3,804 (37.7)

자료: 한국장학재단

나. 분석의견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짧은 사업기간 등 부적절한 사업운영 및 사업관리로 인해 저소득층의 학습특별지원 바우처 신청 및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와 지원대상이 동일(중위소득 50%)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신청자 및 수급자 수가 각각 25.5만명, 19.1만명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30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교육급여, 타 바우처가 전국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반면,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은 장학재단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²⁾에 기반하여 수행한 결과 방문신청으로 접수하는 타 바우처에 비해 바우처 수혜자에게 충분한 신청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공공부문 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비교]

구분	사회서비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에너지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담당	보건복지부 (세부 바우처별 담당부서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교육부 (지역별 교육청)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22년 이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에너지비용) 15만원(1인)~ 37만원(4인)	(출산·육아 비용) 200만 원	(문화체험 비용) 11만 원	(학습보조 비용) 10만 원
사용처 범위	전기, 가스비 등 요금차감 또는 등유, LPG 등 구매	대부분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가능 (유흥·사행업종 등 제외)	문화, 관광, 체육관련 가맹점 (별도 가맹점 지정)	온·오프라인 서점, EBS콘텐츠 구매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거주지 주민센터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자료: 교육부

2) 장학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13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및 지급하는 등 온라인 역량 기반의 학자금지원 전문기관이다.

2022년 12월까지 25만명이 신청하여 23만명이 지원금을 배정받았으나, 이 중 19만명만이 사용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타 정부지원 바우처와 상이하게 서점, EBS로만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실제 수혜 가정(학생)에서 학습 관련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2022. 6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12월까지 사용기간을 보장했기 때문에 짧은 사용기간 설정으로 연장신청 마감시점인 10월 말 신청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정도밖에 사용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용기간 중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당초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예산 2.7억원)하였으나, 신규로 콜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및 민원 등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콜센터 미운영으로 지출하지 않은 위탁사업비를 광고선전비(온라인 매체 홍보 등), 수수료 및 사용료(만족도 조사 및 사용독려 상품권 구매) 등으로 변경하여 지출하였으나, 이 지출은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제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선전비³⁾는 저소득층, 조손부모 등의 접근성이 낮은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포털 등 온라인 홍보, 24시간 뉴스 자막 홍보 등에 지출되었다.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 사용 독려 이벤트⁴⁾는 바우처 사용자가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 사용 독려 이벤트 참여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용에 대한 유인효과가 불확실하다.

[한국장학재단 사업운영비]

(단위: 천원)

운영비 세부내역 구분	기존	변경	증감
위탁사업비 (전산 개발 및 운영, 도급 위탁 용역 등)	755,685	542,920	△212,765
공공요금 (알림톡, LMS, 인쇄물 배송 등)	66,245	133,271	67,026
광고선전비 (온라인 매체 홍보 등)	40,000	124,000	84,000

3) 홍보 영상 제작: 9,570,000원, 홍보 포스터 제작: 3,300,000원, EBS 방송 광고: 16,130,000원, 유튜브, 포털 등 온라인 홍보: 38,952,000원, 24시간 뉴스 자막 홍보: 44,000,000원, 무상급식소 현장 홍보: 11,047,410원

4) 지원금 사용독려 이벤트(도서상품권 지급): 23,750,000, 만족도조사 참여 이벤트(도서상품권 지급): 23,750,000, 만족도조사 위탁: 18,000,000

(단위: 천원)

운영비 세부내역 구분	기존	변경	증감
인쇄비 (사업 안내자료 제작 등)	30,190	37,154	6,964
수수료 및 사용료 (만족도 조사 및 사용독려 상품권 구매)	100	50,000	49,900
국내여비	3,900	7,800	3,900
회의비 및 사업추진비	3,600	4,575	975
특근매식비	280	280	-
합 계	900,000	900,000	-

자료: 교육부

종합하면,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방식, 제한된 사용처, 짧은 사용기간 등 여러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 30만명 중 19만명만이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교육부는 주민센터 신청 및 현금으로 지원하던 교육급여를 2023년부터 바우처로 전환하여 지급할 계획이므로, 교육급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¹⁾은 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9억 900만원 중 38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7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 관련 예산은 2개 내역사업에 11억 6,800원이 편성되었으며, 디지털교과서 수정 보완 사업의 2022년 예산현액 7,9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운영 지원의 예산현액 10억 8,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4,868	41	4,909	3,878	79.0	847	184	4,868
디지털교과서 수정 보완	79	79	-	79	70	88.6	-	9	586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운영 지원	1,089	1,089	-	1,089	1,089	100.0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교과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 되고 에듀넷 등 외부 교육용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이다. 또한 「교과 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2)에 따른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학생용 전자저작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3

물로 동 규정의 편찬 및 검정 절차를 거친 정규 교과서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일반회계(11억 6,800만원) 외에도 특별교부금, 지방비(교육청)를 재원으로 하며, 2022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55억 9,400만원, 지방비 245억 5,100만원을 합하여 총 324억 3,900만원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에 지원되었다.³⁾ 또한 2015~2023년 동안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투입된 총 재정 규모는 1,567억 4,300만원이다.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디지털교과서 개발, 운영 및 활성화		합 계
재원	교육부 일반회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방비 (교육청)	
2015	138	5,360	-	5,498
2016	139	3,290	-	3,429
2017	1,012	5,208	-	6,220
2018	1,137	23,479	-	24,616
2019	1,070	37,053	-	38,123
2020	836	5,314	-	6,150
2021	191	8,303	-	8,494
2022	1,168	6,720	24,551	32,439
2023	586	5,594	25,594	31,774
합 계	6,277	100,321	50,145	156,743

자료: 교육부

또한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2023년 동안 150억 100만원이 지원되었다.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2018~2020)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용성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학교 내 디지털교육 클래스 운영(2021~현재)은 디지털교과서와 다양한 원격수업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3) 2022년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보전금은 교과서당 평균 2.5억원

플랫폼 및 교육용 콘텐츠의 연계·활용을 통해 학생중심의 온·오프라인 수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예산]

(단위: 교, 백만원)

구분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학교 내 디지털교육 클래스 운영			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운영 학교수	584	886	302	50	49	50	국가시책
지원 예산	6,000	6,510	1,746	250	245	250	특별교부금

자료: 교육부

디지털교과서는 초·중등 274종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다. 국정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 편찬기관이 개발⁴⁾하되,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기관인 KERIS가 기술을 지원하며, 검정 디지털교과서는 발행사가 개발⁵⁾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내역]

연도	학교급	학년	구분	개발 교과	종수	적용
2017	초등학교	3~4	국정	사회(4책*1종), 과학(4책*1종)	8	2018~2021
			검정	영어(2책*5종)	10	2018~
	중학교	1	검정	사회①(8종), 사회②(8종), 과학 1(5종), 영어 1(13종)	34	
	고등학교	1~3	검정	영어(11종), 영어회화(4종), 영어 I(9종), 영어 독해와 작문(5종)	29	
2018	초등학교	5~6	국정	사회(4책*1종), 과학(4책*1종)	8	2019~2022
			검정	영어(2책*5종)	10	2019~
	중학교	2	검정	과학(5종), 영어(13종)	18	
2019	중학교	3	검정	과학(4종), 영어(13종)	17	2020~
2021	초등학교	3~4	검정	사회(4책*11종), 과학(4책*7종)	72	2022~
2022	초등학교	5~6	검정	사회(4책*11종), 과학(4책*6종)	68	2023~

자료: 교육부

4) 국정(편찬기관 선정 → 개발 → 보급)

5) 검정(발행사 개발 → 검정 심사(위탁기관) → 보급)

나. 분석의견

서책형 중심의 교실 수업, 디지털 교과서 연계 콘텐츠 부족, 일부 과목에 한정된 개발 등의 이유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이 저조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향후 디지털 교과서가 교실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은 교육부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지방비(교육청)를 재원으로 하며, 2015~2023년 동안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에 투입된 총 재정 규모는 1,567억 4,300만원이다.

수업시간에 디지털교과서를 스트리밍한 실적을 보기 위해 뷰어 접속 학생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13.1%, 중학교의 경우 평균 15.2%,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8.7%에 그쳤다.

[2022년 대상 학생 수 대비 디지털교과서 뷰어 접속 학생 현황]

(단위: 명, %)

초등학교			
학년	전체 학생 수	접속 학생 수	접속 학생 비율
3학년	424,454	51,397	12.1
4학년	470,779	55,331	11.8
5학년	458,085	68,437	14.9
6학년	455,657	62,152	13.6
합계	1,808,975	237,317	13.1
중학교			
학년	전체 학생 수	접속 학생 수	접속 학생 비율
1학년	430,054	53,944	12.5
2학년	447,603	71,274	15.9
3학년	470,771	79,338	16.9
합계	1,348,428	204,556	15.2
고등학교			
학년	전체 학생 수	접속 학생 수	접속 학생 비율
1학년	427,320	64,296	15.0
2학년	403,910	34,751	8.6
3학년	431,118	10,461	2.4
합계	1,262,348	109,508	8.7

주: 1. 전체 학생 수는 2022 교육통계연보 기준(KEDI)

2. 교과서 PDF 등 사용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미제공 학년 접속: 초1학년 12,879명, 초2학년 16,838명

자료: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디지털교과서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AR·VR 등 다양한 콘텐츠 적용 및 학습자료공유기능 등 다양한 학습지원 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와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활용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일부 과목(사회, 과학, 영어)에 한정되어 코로나19 과정에서 온라인수업 진행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14.)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은 모든 초·중·고의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특수교실을 포함한 전체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하였다. 2017~2022년 동안 학교 무선환경 구축 및 교원용 노후PC 교체, 스마트기기 보급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9,186억 8,100만원이 지원되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예산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2017~2020	특별교부금, 지방비(교육청)	174,355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	2020	특별교부금, 지방비(교육청)	13,400
초중등학교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2020	국고 40%, 지방비 60%	592,217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2021	특별교부금, 지방비	42,709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2020~2022	국고 40%, 지방비 60%	96,000
합 계			918,681

자료: 교육부

2022년말 기준 무선망 구축률(일반·교과·특별교실수 대비 무선망 구축 교실수 비율)은 115.3%로 일반·교과·특별교실 이외의 학교공간에도 구축되었으며, 스마트기기 보급률(학생수 대비 보급대수 비율)은 50.6%이다.

[시도교육청별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22년)]

(단위: %)

시도	학습공간 대비 무선망 구축률 (Wifi6 구축률)	스마트기기 보급률
서울	140.8(133.1)	31.8
부산	104.7(86.2)	69.1
대구	108.3(79.4)	52.8
인천	115.3(103.3)	39.3
광주	126.5(124.3)	31.0
대전	99.7(64.0)	65.6
울산	104.2(104.2)	69.0
세종	162.4(162.4)	16.6
경기	92.7(87.6)	50.8
강원	110.1(97.8)	71.0
충북	130.0(104.8)	51.6
충남	95.9(95.9)	56.9
전북	119.1(117.5)	21.1
전남	114.0(65.6)	58.0
경북	129.1(112.7)	54.8
경남	150.5(144.9)	86.7
제주	124.6(84.4)	25.8
계	115.3(103.1)	50.6

자료: 교육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온라인교육 활성화 및 교수학습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경우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로 디지털 인프라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책형 중심의 교실 수업, 디지털 교과서 연계 콘텐츠 부족, 일부 과목에 한정된 개발 등의 이유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투자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향후 디지털교과서가 교실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¹⁾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회계연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656,663	4,703,585	△29,900	4,673,685	4,673,685	4,340,171	333,514	4,566,436
국가장학금 지원	4,134,819	4,134,819	△29,900	4,104,919	4,104,919	3,809,957	294,962	4,030,777
국가장학금 I 유형	2,834,604	2,834,604	△29,900	2,780,961	2,780,961	2,490,164	290,797	2,648,720
다자녀장학금	917,995	917,995	-	941,738	941,738	941,516	222	999,837
국가장학금 II 유형	210,000	210,000	-	210,000	210,000	219,797	△9,797	210,000
대학노력연계 입학금 감축대응	90,000	90,000	-	90,000	90,000	79,933	10,067	90,000
지역인재장학금	80,000	80,000	-	80,000	80,000	76,405	3,595	80,000
사업운영비	2,220	2,220	-	2,220	2,220	2,142	78	2,220
대학생 근로장학금	369,333	416,255	-	416,255	416,255	382,957	33,298	376,445
국가근로장학	255,409	302,331	17,800	320,131	320,131	320,131	-	367,695
교사대상 튜터링	105,000	105,000	△17,800	87,200	87,200	54,162	33,038	-
다문화탈북멘토링	6,750	6,750	-	6,750	6,750	6,750	-	6,750
사업운영비	2,174	2,174	-	2,174	2,174	1,915	259	2,000
우수학생국가장학금지원	51,153	51,153	-	51,153	51,153	50,931	222	57,856
인문100년	27,641	27,641	-	26,661	26,661	26,599	62	31,696
예술체육비전	9,333	9,333	-	9,333	9,333	9,319	14	11,047
드림	4,769	4,769	-	5,749	5,749	5,688	61	5,703
전문기술인재	8,680	8,680	-	8,680	8,680	8,608	72	8,680
사업운영비	730	730	-	730	730	717	13	730
희망사다리장학금지원	99,338	99,338	-	99,338	99,338	94,306	5,032	99,338
I 유형	45,880	45,880	-	45,880	45,880	44,497	1,383	45,880
II 유형	51,600	51,600	-	51,600	51,600	48,015	3,585	51,600
사업운영비	1,858	1,858	-	1,858	1,858	1,794	64	1,858
운영비(인건비)	2,020	2,020	-	2,020	2,020	2,020	-	2,02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

5-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자 확대 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과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2012년에 도입하였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 자체노력 연계’와 ‘입학금 감축 대응’에 대해 지원되며, ‘대학 자체노력 연계’는 등록금 인하·동결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입학금 감축 대응’은 입학금을 감축한 대학에 대해 입학금을 일부 보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구조]

구 분		목 적	지원 대상(2022년 지원인원)
I 유형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8구간 이하 가구원인 학생 (약 80만명)
다자녀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자녀인 학생 (약 20만명)
II 유형	자체 노력 연계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자체노력 수행 대학 학생 (약 50만명)
	입학금 감축대응	입학금 감축 대응	입학금 감축 이행 대학 학생 (입학생)
지역인재		지방대학 육성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약 1.5만명)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2,100억원이나,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유형(입학금 감축대응) 중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2,19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노력 연계	210,000	210,000	-	210,000	210,000	219,797	△9,797
II유형	입학금 감축대응	90,000	90,000	-	90,000	90,000	79,933	10,067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2022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포함)의 지원단가 확대에 따라 국가장학금 II 유형 소요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9구간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나, 지원대상자 확대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을 지원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I유형(다자녀 포함) 지원대상인 8구간(2022년 1,024만원 이하) 이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단가 및 지원자수는 대학이 지원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²⁾

그러나 교육부는 2022년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지원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월 1,024만원)에서 9구간(월 1,536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을 수정하여 집행하였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구분		장학금 지원구간 경계 소득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1구간	153만원 이하	30%
	2구간	256만원 이하	50%
	3구간	358만원 이하	70%
	4구간	460만원 이하	90%
	5구간	512만원 이하	100%
	6구간	665만원 이하	130%
	7구간	768만원 이하	150%
	8구간	1,024만원 이하	200%
9구간		1,536만원 이하	300%
10구간		1,536만원 초과	-

- 주: 1.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2.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4,876,290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5,121,080원

자료: 교육부

2) 다만, II유형은 모두 특별한 경우(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소득감소가 있을 때)에 한하여 9구간 이상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9구간, 10구간에서도 소규모의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학자금 지원 9구간 가구의 지원인원 및 지원액이 2021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특히 지원액에 있어서는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확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중 자체노력 연계형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1 1학기	국공립	인원	105	167	351	286	323	2,214	1,285
		금액	85	116	321	253	278	1,022	630
	사립	인원	10,495	19,213	42,293	34,964	36,672	39,196	19,250
		금액	5,573	9,047	19,937	15,081	14,951	14,702	6,881
'22 1학기	국공립	인원	21	36	142	157	153	1,239	721
		금액	29	50	135	145	142	513	322
	사립	인원	1,706	3,370	30,909	26,513	27,133	29,970	15,084
		금액	675	1,274	13,865	10,583	10,142	10,379	4,748
'21 2학기	국공립	인원	49	67	231	189	211	2,518	1,413
		금액	55	52	258	209	222	1,217	651
	사립	인원	11,629	18,636	42,107	35,143	37,317	38,467	18,786
		금액	6,022	8,776	19,520	14,864	15,684	15,568	6,918
'22 2학기	국공립	인원	36	31	186	163	149	1,229	746
		금액	55	49	167	133	131	588	355
	사립	인원	1,798	3,256	31,025	26,314	28,617	30,068	14,625
		금액	773	1,302	15,458	11,673	12,129	12,636	5,291
구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21 1학기	국공립	인원	4,160	7,170	18,060	655	602	35,378	
		금액	2,199	5,463	13,721	242	202	24,534	
	사립	인원	52,106	30,397	61,611	1,085	1,201	348,483	
		금액	14,867	7,678	14,189	427	476	123,808	
'22 1학기	국공립	인원	2,470	1,979	4,294	24,462	25	35,699	
		금액	1,153	1,126	2,061	14,714	22	20,410	
	사립	인원	40,537	23,984	49,154	22,659	27	271,046	
		금액	9,929	4,831	9,352	3,743	11	79,533	
'21 2학기	국공립	인원	4,889	6,441	17,781	345	351	34,485	
		금액	2,347	5,143	15,333	125	118	25,730	
	사립	인원	53,196	29,149	61,711	534	544	347,219	
		금액	17,041	9,143	16,681	249	263	130,731	
'22 2학기	국공립	인원	2455	1985	4738	19,974	20	31712	
		금액	1,287	1,195	2,816	14,477	20	21,273	
	사립	인원	40,991	24,617	53,363	17,088	29	271,791	
		금액	12,809	6,751	13,667	3,827	14	96,331	

자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가구의 지원이 2021년 1학기 655명(2억 4,200만원)에서 2022년 1학기 24,462명(147억 1,4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2021년 1학기 1,085명(4억 2,700만원)에서 2022년 1학기 22,659명(37억 4,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2022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포함)의 지원단가를 크게 인상함에 따라 8구간 이하 수혜자의 등록금 경감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보충 지원해야 하는 소요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 기초·차상위 계층은 2021년 520만원에서 2022년 첫째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학자금 지원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학자금 지원 8구간은 6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다자녀장학금의 경우 8구간 이하 2021년 450~520만원이던 지원단가를 2022년 450만원~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하였다.

[2022년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 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지원구간 경계값	2021년	-	~146	~243	~341	~438	~487	~633	~731	~975
	2022년	-	~153	~256	~358	~460	~512	~665	~768	~1,024

'21년 지원 단가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22년 지원 단가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주: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I유형(다자녀 포함)을 통한 8구간 이하 수혜자의 등록금 경감률(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단가/평균 등록금)이 크게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I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자금 지원 8구간의 등록금 경감률이 국공립대는 2021년 16.1%에서 2022년 83.7%로 상승하였으며 사립대는 9.0%에서 46.8%로 상승하였다. 국가장학금은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단가로 동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준이 사립대 보다 낮기 때문에 국공립대 재학생의 등록금 경감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

(단위: %)

[1유형 장학금]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8~	국공립	100.0	100.0	100.0	100.0	93.3	88.0	88.0	28.7	16.1
2021	사립	69.5	69.5	69.5	69.5	52.1	49.2	49.2	16.0	9.0
2022	국공립	100.0	100.0	100.0	100.0	93.3	93.3	93.3	83.7	83.7
	사립	93.6	69.5	69.5	69.5	52.1	52.1	52.1	46.8	46.8

주: 1. 평균등록금 대비 경감율

2. 평균등록금 수준은 매년 변동의 거의 없으며 2020년 기준 국립대 418만원, 사립대 748만원수준

자료: 교육부

특히, 교육부는 2022년 II유형 예산(대학 자체노력 연계)의 소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여 집행하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입학금 감축대응)에서 남는 예산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예산으로 증액(79억 2,300만원)하여 집행하였다.

[2020~22회계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예산	실집행액	예산	실집행액	예산	실집행액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노력 연계	310,000	309,060	310,000	305,974	210,000	217,923
II유형	입학금 감축대응	90,000	87,812	90,000	81,906	90,000	79,929

주: 1. 대학자체노력 연계와 입학금 감축 대응은 사업계획 상 구분이며, 예산상 하나의 내내역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학생지원 실집행액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I유형(다자녀 포함)의 지원단가 인상으로 수혜자의 등록금 경감률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II유형으로 보충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I유형(다자녀 포함)의 지원단가 인상으로 심화된 9구간 이상 수혜절벽과 소득 역진을 완화하기 위해 II유형예산을 9구간까지 지원하도록 운영하였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하여 8구간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I유형(다자녀 포함)과 II유형의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구간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점³⁾을 고려하더라도 II유형을 9구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대학(2023년 15개 대학)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는 대학의 지원액 규모는 2022년보다 증가하고 이들 대학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자 확대 시 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부분 및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2017년 627.4조원(GDP 대비 34.2%)에서 2022년 1,033.4조원(GDP 대비 47.8%)으로 증가하였다.

5-2.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자 감소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내내역사업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소득수준 8구간 이하 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의 2022년 예산현액 3조 7,226억 9,900만원 중 3조 4,31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910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장학금 I유형	2,834,604	2,834,604	△29,900	2,780,961	2,490,164	290,797
다자녀장학금	917,995	917,995	-	941,738	941,516	222
합 계	3,752,599	3,752,599	△29,900	3,722,699	3,431,680	291,019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대학 성적 기준 통과자 비율의 하락,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구간 상승 등으로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면서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 장학금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의 2022년 본예산은 3조 7,52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한국장학재단 출연지원으로 △299억원을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3조 7,226억 9,900만원 중 3조 4,31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910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감소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편성과 실제 지원 인원 간 격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엔데믹에 따른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대학의 성적 인플레가 정상화됨에 따라 성적 통과자 비율이 2020년 2학기 93.5%에서 2022년 2학기 90.8%로 하락하였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이 감소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대비 2021년 19.05%로 상승함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해 소득구간이 상승하여 지원한도액이 축소(예를 들어, 3구간 520만원 → 4구간 390만원)되거나 지원대상에서 탈락(8구간 → 9구간)하는 학생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 추이를 보면, 수혜인원이 2021년 100만명에서 2022년 95만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전용 포함)이 3,209억 1,900만원 발생하였다. 다만, 2022년 단가 인상 및 지원구간 소득 인상으로 지원금액은 2021년 2조 9,630억원에서 3조 4,3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개년('18~'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추이]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장학금		합계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수혜 인원	지원 금액	
'18	829,141	2,280,166	210,451	759,229	1,039,592	3,039,395	지원구간 소득 인상
'19	815,899	2,269,095	215,033	775,210	1,030,932	3,044,305	변동없음
'20	823,909	2,276,368	216,615	786,217	1,040,524	3,062,585	변동없음
'21	807,103	2,231,684	202,515	731,398	1,009,618	2,963,082	변동없음
'22	740,154	2,490,164	217,358	941,516	957,512	3,431,680	단가 인상, 지원구간 소득 인상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 통과자 비율, 공시지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동 장학금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가. 현 황

서울대학교 출연지원¹⁾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379억 7,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²⁾은 인천대학교 교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065억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출연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37,971	537,971	537,971	537,971	100.0	577,490
기관운영출연금(350-01)	348,160	348,160	348,160	348,160	100.0	355,663
사업출연금(350-02)	189,811	189,811	189,811	189,811	100.0	221,827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06,503	106,503	106,503	106,503	100.0	117,698
기관운영출연금(350-01)	78,246	78,246	78,246	78,246	100.0	80,306
사업출연금(350-02)	28,257	28,257	28,257	28,257	100.0	37,39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국립대법인 출연지원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구성되며,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의 기관운영출연금은 3,481억 6,000만원, 사업출연금은 1,898억 1,100만원 규모이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의 기관운영출연금은 782억 4,600만원, 사업출연금은 282억 5,700만원 규모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742-300

2) 코드: 일반회계 2742-302

나. 분석의견

첫째, 서울대학교는 2012년 법인 전환 이후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관리 및 정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출연금의 정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3)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에 출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012년 법인 전환 이후 출연금을 별도 세입 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2022년 동안 출연금 중 158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고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200억 3,600만원 규모이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의 불용액 및 이자발생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이자 발생액
	기관운영출연금(350-01)	사업출연금(350-02)	계	
2012	48	196	244	1,805
2013	-	478	478	2,500
2014	-	4,314	4,314	1,898
2015	639	1,723	2,362	1,601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이자 발생액
	기관운영출연금(350-01)	사업출연금(350-02)	계	
2016	683	2,383	3,066	1,504
2017	279	1,154	1,433	1,378
2018	98	1,259	1,357	1,731
2019	95	353	448	1,987
2020	37	599	636	1,022
2021	41	665	706	1,064
2022	19	811	830	3,546
합 계	1,939	13,935	15,874	20,036

자료: 교육부

서울대학교는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액을 반납하거나 이를 반영해서 다음연도 출연금을 산정하는 등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해 잉여금 처리 규정⁴⁾에 근거하여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잉여금을 부채 상환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는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액 등을 2020년까지는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법인회계 잉여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적립금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적립하고 있다. 2021~2022년 동안 총 적립액은 567억원 규모이며, 이 중 132억원을 사용하고 2022년말 적립금 규모는 435억원이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법인회계 잉여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적립금제도 도입

[서울대학교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유 형	2021년			2022년			
	적립액 (A)	사용액 (B)	잔액 (C=A-B)	전기말 잔액 (D)	적립액 (E)	사용액 (F)	잔액 (G=D+E-F)
건축적립금	295	-	295	295	120	98	317
장학적립금	30	-	30	30	-	6	24
퇴직적립금	120	-	120	120	-	28	92
연구적립금	2	-	2	2	-	-	2
합 계	447	-	447	447	120	132	435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잉여금 처분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며, 정부 출연금 운용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 및 처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2. 1.)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관리 및 정산을 하고 비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타 출연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보다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 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재정지원 출연사업에 대해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⁶⁾를 적용하여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을 정

6)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라 함은 사업비 지원 대상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학금 지원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제2항⁷⁾에 근거하여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을 반납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을 반납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관리 및 정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정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관리 및 정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인천대학교가 출연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 인천대학교 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정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천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달리 출연금을 별도계좌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에서

-
- 나. 사업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명칭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기관으로 구성된다)
 - 4.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 5.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매년도 사업 기간 종료 시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년도 국고지원금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 사업 기간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할 수 있다.
- ② 대학 또는 사업단의 장은 매년도 정산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연차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점검 또는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한 대학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같다.

7)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사업비의 관리)

- ①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회계연도 내에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수입 및 장학금 반환수익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반납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 규모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불용액 및 발생이자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발생이자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210	330	116	238	-	해당자료 없음 (법인회계로 통합 운영)				

자료: 인천대 결산 기준(2022년은 현재 결산 진행 중)

또한 인천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⁸⁾ 등에 근거하여 출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자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다음연도 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출연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천대학교 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정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현 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¹⁾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연구소, 기업 등)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77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244,000	244,000	33,500	-	277,500	277,500	100.0	354,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대학과 지역경제의 시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동 사업은 대학,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우려되는 지역대학 생존 위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2020년 예산에서 대학혁신지원(R&D)(일반회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개 플랫폼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재정지출 규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301-400

모가 50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부사업의 확장이며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1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세부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사업으로 최대 5년(3+2년,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거쳐 2년 추가 지원) 동안 지원되고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 재정지원]

(단위: 억원)

구분	예산	계속지원	신규지원	참여 지자체 수
'20	1,080	-	단일형(300억원, 2개) 복수형(480억원, 1개)	3개 플랫폼/ 4개 지자체(경남, 충북, 광주·전남)
'21	1,710	1,080억원 단일형(300억원, 2개) 복수형(480억원, 1개)	복수형(480억원, 1개) 복수형 전환 인센티브 ¹⁾ (150억원, 1개)	4개 플랫폼/ 8개 지자체(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22	2,440	1,740억원 단일형(300억원, 1개) 복수형(480억원, 3개)	700억원 단일형(300억원, 1개) 복수형(400억원, 1개)	6개 플랫폼/ 11개 지자체(충북, 광주· 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 경남, 대구·경북, 강원)
'23	3,420	2,520억원 단일형(300억원, 2개) 복수형(480억원, 4개)	900억원 단일형(300억원, 3개)	9개 플랫폼/ 14개 지자체(충북, 광주· 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부산, 전북, 제주)
'24	3,420	3,420억원 단일형(300억원, 5개) 복수형(480억원, 4개)	-	전년 동일
합 계	12,070	-	-	-

주: 1) 2020년 선정된 단일형 플랫폼 중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 전환

※ '25년부터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재원으로 통합 예정

자료: 교육부

2022년에는 6개 플랫폼에 2,436억 3,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플랫폼 별로 68.8% ~ 88.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교부·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C) (교부액)	집행률 (B/A)
교육부	2020	108,000	-	108,000	108,000	100.0
	2021	171,000	-	171,000	171,000	100.0
	2022	244,000	-	244,000	244,000	100.0



구 분	회계연도	예산액 (국고)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D) (교부액)	집행률 (D/C)
한국연구재단	2020	108,000	-	108,000	95,148	88.1
	2021	171,000	-	171,000	170,901	99.9
	2022	244,000	99	244,099	243,632	99.8



구 분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E)	집행액 (F)	집행률 (F/E)
		국고	지방비				
광주전남	2020	34,909	14,961	-	49,870	32,892	66.0
	2021	42,755	18,324	12,468	73,547	56,069	76.2
	2022	45,364	19,442	12,216	77,022	67,030	87.0
울산경남	2020	29,820	14,780	-	44,600	33,468	75.0
	2021	44,845	21,220	11,132	77,197	67,026	86.8
	2022	48,678	23,062	10,140	81,880	71,297	87.1
충북	2020	29,820	12,780	-	42,600	34,387	80.7
	2021	34,845	14,934	8,213	57,992	51,569	88.9
	2022	30,424	13,039	6,423	49,886	44,176	88.6
대전세종충남	2021	47,755	20,467	-	68,222	43,543	63.8
	2022	48,678	20,862	20,467	90,007	72,385	80.4
강원	2022	29,852	12,794	-	42,646	29,356	68.8
대구경북	2022	39,804	17,059	-	56,863	46,516	81.8

주: 다음연도 이월액은 집행액(F)에서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교육부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이 교과목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체제를 개편하지만, 동 사업은 참여대학들이 핵심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교육체계(학사구조, 교육과정 등) 개편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혁신기관(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인턴십, 현장실습, 프로젝트 랩, 재직자 교육 등), 기술개발(애로기술 해결, 기술이전 등)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 3개년(2020~2022년) 사업이 종료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한 지역혁신기관 수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당초 45개 지역혁신기관을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47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44개 기관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25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충북 플랫폼은 65개 기관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14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2022년 지역혁신기관 참여 현황]

(단위: 개)

		연구소	기업	교육청	기타	합계
광주·전남	계획	7	30	2	6	45
	실적	22	280	2	43	347
울산·경남	계획	6	27	1	10	44
	실적	11	235	2	7	255
충북	계획	15	25	1	24	65
	실적	7	135	1	5	148

자료: 교육부

-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12. 22.]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모든 플랫폼에서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지역혁신기관이 대부분 기업임을 고려할 때, 대학과 지역 소재 지역혁신기관(기업 등)을 대거 연계하여 취·창업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플랫폼에서는 사업 참여기관 취업자 수, 지역 내 취·창업자 수가 계획에 미달하는 등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양적인 확대가 학생들의 지역 내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증진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만 그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혁신플랫폼 별 주요 핵심성과]

(단위: 명)

구분	1차 연도 (‘20.8.~’21.5.)		2차 연도 (‘21.6.~’22.4.)		3차 연도 (‘22.5.~’23.3.)	
	목표값	실적값	목표값	실적값	목표값	실적값
광주·전남(1,559억 9,100만원)						
취창업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	-	2,173	2,243	2,280	8,869
사업 참여기관 취업자 수	-	-	-	-	171	58
지역 내 취·창업자 수	-	-	-	-	801	422
충북(1,301억 5,200만원)						
취창업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	-	1,950	3,284	2,000	3,011
사업 참여기관 취업자 수	-	-	-	-	105	165
지역 내 취·창업자 수	-	-	-	-	255	278
울산·경남(1,717억 9,100만원)						
취창업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	-	537	1,196	537	2,687
사업 참여기관 취업자 수	-	-	-	-	82	102
지역 내 취·창업자 수	-	-	-	-	517	520

자료: 교육부

플랫폼 운영조직의 인력은 신규채용 또는 파견(또는 겸직)을 통해 충원되며, 인력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계 지역혁신기관 수가 많을 수록 인력 규모 및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플랫폼의 경우 2022년 연계된 지역혁신기관이 347개, 플랫폼 운영조직 인력 수가 190명으로 인건비가 전체 집행금액의 12.6%(2021년 기준)를 차지한 반면, 울산·경남 플랫폼

의 경우 연계된 지역혁신기관이 255개, 인력 수가 228명으로 인건비가 전체 집행 금액의 7.6%(2021년 기준)을 차지했으며, 충북 플랫폼의 경우 연계된 지역혁신기 관이 148개, 인력 수가 73명으로 인건비가 전체 집행금액의 5.2%(2021년 기준)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의 적정 조직규모, 참여 지역혁신기 관 수와 플랫폼 운영조직 규모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소속	운영조직 체계 및 인력 현황						
광주 전남 플랫폼	대학 소속 (전남 대학교)	구분	운영인력(명)			인건비(백만원) (집행금액 대비 비중)	해당연도 집행금액 (백만원)	2022년 연계 기관(개)
			총인원	채용	파견/ 겸직			
		2020	155	143	12	2,371 (7.2%)	32,892	
		2021	185	176	9	5,509 (12.6%)	43,602	
		2022	190	180	10	-	-	
울산 경남 플랫폼	대학 소속 (경상국립 대학교)	구분	운영인력(명)			인건비(백만원) (집행금액 대비 비중)	해당연도 집행금액 (백만원)	2022년 연계 기관(개)
			총인원	채용	파견/ 겸직			
		2020	120	93	27	2,453 (7.3%)	33,468	
		2021	196	147	49	4,255 (7.6%)	55,925	
		2022	228	161	67	-	-	
충북 플랫폼	대학 소속 (충북 대학교)	구분	운영인력(명)			인건비(백만원) (집행금액 대비 비중)	해당연도 집행금액 (백만원)	2022년 연계 기관(개)
			총인원	채용	파견/ 겸직			
		2020	58	40	18	877 (2.6%)	34,387	
		2021	73	55	18	2,264 (5.2%)	43,376	
		2022	84	65	19	-	-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20203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 동안 첫 3개년 사업이 종료 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을 대상으로 단계평가를 실시하였 다. 평가항목은 1단계('20~'22) 추진실적(배점 400점) 및 2단계('23~'24) 추진계획 (배점 200점)이며, 1단계 추진실적은 9개 지표로 평가되었고 2단계 추진계획은 5개

지표로 평가되었다.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에 적절히 환류하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은 각각 A, B, C 등급으로 통과되었으며, 2023년 사업비 배분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배분액 차이가 최하위 플랫폼에서 5%(국고 24억원) 감액 후 최상위플랫폼에 8%(국고 24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여 세 플랫폼 모두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2023년 사업비 배분액]

(단위: 백만원)

순위	지자체	최종 등급	사업비 조정비율	조정액		사업비 배분액	
				국고	지방비	국고 ¹⁾	지방비 ²⁾
1	충북	A	+8%	+2,400	+1,028	32,295	13,841
2	울산·경남	B	-	-		47,831	20,500
3	광주·전남	C	△5%	△2,400	△1,028	45,431	19,471

주: 1) 한국연구재단 위탁사업관리비를 제외한 국고 배분액

2) 전체사업비(국고+지방비)의 30%를 지방비로 대응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 지방비 배분액을 표기

자료: 교육부

종합하면, 대학과 지역 소재 지역혁신기관(기업 등)을 대거 연계하여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취창업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가 학생들의 지역 내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증진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플랫폼 운영조직 인력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계 지역혁신기관 수가 많을수록 인력 규모 및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평가 결과에 대해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에 적절히 환류하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내실있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혁신기관이 양적인 확대에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시스템 등을 설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운영조직 인력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¹⁾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의 내역 사업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계·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2022년도 예산현액 968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R&D)	435,929	435,929	33,114	469,043	469,043	100.0	557,247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89,010	89,010	7,800	96,810	96,810	100.0	144,3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은 2021년에 도입되었으며, 1차년도에 신기술분야 컨소시엄을 8개 선정하여, 2021년에는 컨소시엄당 연 10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컨소시엄당 연 107억원~112억원을 지원하였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3년간('21~'23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거친 후 3년('24~'26년)을 추가 지원한다.

2021년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8개 신기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56-300

술 분야이며, 주관대학과 참여대학 6개 대학을 포함한 7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교육과정을 공유한다.

[2021~2022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	주관 및 참여대학	대학명	지원액	
				2021	2022
1	인공지능	주관대학	전남대	2,624	2,500
		참여대학	성균관대	1,380	1,510
		참여대학	서울시립대	1,271	1,380
		참여대학	서울과학기술대	1,200	1,380
		참여대학	경북대	1,343	1,570
		참여대학	전주대	1,282	1,380
		참여대학	영진전문대	1,100	1,230
		소계		10,200	10,950
2	빅데이터	주관대학	서울대	3,900	4,400
		참여대학	경기과학기술대	900	900
		참여대학	경상국립대	1,120	1,120
		참여대학	서울시립대	1,020	1,020
		참여대학	숙명여자대	1,020	1,020
		참여대학	전북대	1,120	1,120
		참여대학	한동대	1,120	1,120
		소계		10,200	10,700
3	차세대 반도체	주관대학	서울대	3,336.2	3,760
		참여대학	강원대	1,162.7	1,255
		참여대학	대구대	1,086.8	1,310
		참여대학	송실대	1,232.5	1,200
		참여대학	조선이공대	951.8	1,080
		참여대학	중앙대	1,168.5	1,200
		참여대학	포항공과대	1,261.5	1,145
		소계		10,200	10,950
4	미래자동차	주관대학	국민대	4,000	4,065
		참여대학	계명대	1,100	1,235
		참여대학	대림대	760	980
		참여대학	선문대	850	1,180
		참여대학	아주대	1,020	1,085
		참여대학	인하대	1,270	1,320
		참여대학	충북대	1,200	1,335
		소계		10,200	11,200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	주관 및 참여대학	대학명	지원액	
				2021	2022
5	바이오헬스	주관대학	단국대	3,633.3	4,633
		참여대학	대전대	1,120.1	1,113
		참여대학	동의대	1,084.7	1,151
		참여대학	상명대	1,114.7	1,038
		참여대학	우송대	1,085.8	1,076
		참여대학	원광보건대	1,001.8	1,000
		참여대학	홍익대	1,159.6	1,189
		소계		10,200	11,200
6	실감미디어	주관대학	건국대	2,390	3,473
		참여대학	경희대	1,458	1,343
		참여대학	계명대	1,431	1,352
		참여대학	계원예술대	884	923
		참여대학	배재대	1,165	1,133
		참여대학	전주대	1,281	1,133
		참여대학	중앙대	1,591	1,343
		소계		10,200	10,700
7	지능형로봇	주관대학	한양대ERICA	4,020	4,268
		참여대학	광운대	1,070	1,164
		참여대학	부경대	1,050	1,165
		참여대학	상명대	1,010	1,125
		참여대학	영진전문대	910	970
		참여대학	조선대	1,130	1,176
		참여대학	한국산업기술대	1,010	1,082
		소계		10,200	10,950
8	에너지 신산업	주관대학	고려대	2,540	3,204
		참여대학	서울대	1,280	1,295
		참여대학	한양대	1,280	1,221
		참여대학	강원대	1,300	1,362
		참여대학	부산대	1,300	1,326
		참여대학	전북대	1,320	1,380
		참여대학	경남정보대	1,180	1,163
		소계		10,200	10,950
합계				81,600	87,600

주: 운영비 제외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첨단분야 진출(취업, 창업, 진학)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 수강신청이 저조한 교육과정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수요분석 관리를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 등 교육과정 이수 실적 및 진로성과 연계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컨소시엄별, 강좌 난이도에 따라 강좌 수강신청률이 낮은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 및 수준을 고려한 교과목 개설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과정 안내, 탄력적인 수강 방식 제공 등 교육과정 접근성을 제고할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컨소시엄 중에는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수강신청률이 낮으며, 고급과정이 초급 및 중급과정에 비해 수강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 실감미디어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 수강신청률이 하락하였다.

[2021~2022년 수강신청 정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

(단위: %)

구분	2021			2022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인공지능	73.8	69.7	73.2	87.4	61.5	60.8
빅데이터	103.2	139.5	98.6	100.2	81.6	79.0
차세대반도체	59.9	45.0	15.4	83.8	42.8	29.7
미래자동차	116.1	86.6	69.1	105.9	98.3	73.7
바이오헬스	0.0	0.0	0.0	52.4	18.5	9.4
실감미디어	84.2	63.5	69.3	53.5	65.1	36.8
지능형로봇	60.1	75.7	100.0	66.9	81.7	89.6
에너지신산업	36.4	22.4	28.4	71.1	65.8	38.8
컨소시엄 전체	83.4	90.4	58.3	81.4	67.5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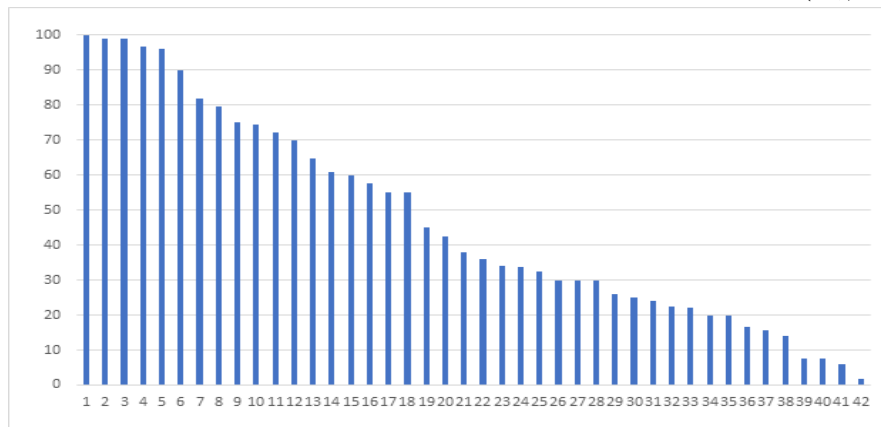
주: 온라인 강좌와 같이 수강신청인원 제한이 없는 강좌를 제외(바이오헬스는 2021년 정원 없는 교과목으로만 운영)

자료: 교육부

교과목별(2021년 기준)로 보면, 전체 728개 교과목 중 신청률이 50% 미만인 교과목이 162개, 신청률이 0%인 교과목이 9개에 달했다. 특히, 차대반도체 컨소시엄의 경우 42개 교과목 중 24개가 신청률이 50% 미만이며, 4개 교과목은 10%에 미달하여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교과목별 신청률]

(단위: %)



주: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학생이 마이크로디그리²⁾ 이수 등을 통해 첨단산업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컨소시엄별 운영 현황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2차년도 실적부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수’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컨소시엄별 마이크로디그리 등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 실적에 편차가 존재하는 바, 첨단분야별 기술 특성 및 범위, 컨소시엄별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2) 이수 요건은 대학별로 상이하며, 통상 6~12학점 수강 시 이수증 발급

[마이크로디그리 등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건, 명)

컨소시엄명	교육과정 운영 건수			교육과정 이수(예정)자 수		
	마이크로 디그리	기타 교육과정	소계	마이크로 디그리	기타 교육과정	소계
인공지능	19	8	27	1	48	49
빅데이터	73	3	76	353	-	353
차세대반도체	21	18	39	187	-	187
미래자동차	43	18	61	418	232	650
바이오헬스	11	6	17	124	14	138
실감미디어	23	-	23	336	-	336
지능형로봇	15	-	15	2,748	-	2,748
에너지신산업	23	17	40	218	82	300
합계	228	70	298	4,385	376	4,761

주: 기타 교육과정은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등 마이크로디그리 외의 모든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기타 교육과정 이수(예정)자 수는 연차점검 실적조사 항목이 아니므로 자체 취합자료 기준
(‘23.3.) 실적 기재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부는 사업 운영 특성상 취업률, 창업자수, 진학률 등 진로 관련 성과는 2차년도까지 컨소시엄별 자체 관리한 후 3차년도부터 필수 성과지표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해당 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등 성과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첨단분야 진출(취업, 창업, 진학)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 수강신청이 저조한 교육과정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수요분석 관리를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 등 교육과정 이수 실적 및 진로 성과 연계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¹⁾ 사업은 온종일 돌봄정책('18.4.4.)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교실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의 2022년도 예산현액 210억원 중 8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23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00	21,000	21,000	8,640	41.1	-	12,360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기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돌봄교실 신규 구축 비용(실당 0.3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2018~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며 보조율은 100%이고, 17개 시 · 도교육청이 사업시행주체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일반회계 1603-300

나. 분석의견

첫째, 2021~2022년 시·도교육청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교육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정책(‘18.4.)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인원(31만명, +7만명) 달성을 위해, 5년 간(‘18~’22) 3,500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75실의 초등돌봄교실이 확충되었으나, 단위학교의 수요부족으로 2021년에는 444실, 2022년에는 288실 확충을 위한 보조금이 교부되는 데 그쳤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2018~2022년]

(단위: 실,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교실수	700	700	700	700	700
	예산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시·도교육청 신청 및 교부	교실수	700	700	700	444	288
	예산	21,000	21,000	21,000	13,320	8,64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2021년 시설확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공간 확보 문제 등 학교 내 돌봄시설 추가수요 발굴에 한계가 있고 단위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충할 경우 돌봄전담사 배치 등 추가인력 운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에 비해 시·도교육청의 신청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초등돌봄교실 설치에 교육감 및 학교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돌봄교실 수요에 따라 사업물량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 신청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에 대한 수요 결과,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700실)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2022년 예산에 시·도교육청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국고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단위: 실)

'20.7.20. 최초 조사	'20.10.6. 추가 조사	'21.1.13. 추가 조사	'21.3.30. 추가 조사	'21.8.30. 추가 조사	'21.9.30 추가 조사 (세종, 대구 제외)	'21.10.19. 추가 조사 (세종, 대구 포함)
270	330	401	430	432	444	444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2023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추진되고, 초등돌봄교실 대기자²⁾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2018~2022년 동안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하지 못하여서 돌봄교실 확충 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교육부는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비와 시설비(신설, 겸용에서 전용으로 전환, 노후시설 환경개선)를 지원하였다. 온종일 돌봄정책('18.4.4.)에 따라 2018~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국고(학급당 3,000만원)로 지원하였다. 신설되는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이외의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 반영되었다(2021년 3,909억원,

2)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현황]

(단위: 명)

시도	2019년('19.3.5. 기준)			2021년('21.3.5. 기준)		
	신청자	이용자	대기자	신청자	이용자	대기자
전국	309,828	290,358	13,176	300,711	285,699	13,447

자료: 교육부

2022년 4,010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위한 리모델링과 시설·설비 및 교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돌봄교실 순증실 목적의 투입 예산 외 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에어프라이기, 전기밥솥, 찜통, 찻잔 세트, 손소독기, 물병, 벽걸이 시계, 소모품, 황사마스크, 고무장갑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증실하는 초등돌봄교실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일반교실에서 돌봄교실로 전환 시 비품 구입 사용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교에서 교실 당 일률적으로 지원한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동 사업의 실행률은 100%를 기록하였다.

교육부는 2018~2022년 동안 추진된 초등돌교실 시설확충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하지 못하여서 돌봄교실 확충 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적립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부담금), 관유물 대여료, 금융상품 투자·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생활안정자금대여,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집행액 기준)는 12조 5,161억 2,500만원이며, 수입은 자체수입 6조 2,986억 2,900만원, 정부내부수입 9,877억 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5조 6,551억 6,000만원, 기금운영비 519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사학연금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수입 계	13,293,989	13,293,989	-	-	13,293,989	12,516,125	-	13,246,158
자체수입	5,983,994	5,983,994	-	-	5,983,994	6,298,629	-	6,045,745
정부내부수입	987,706	987,706	-	-	987,706	987,706	-	1,089,994
여유자금회수	6,322,289	6,322,289	-	-	6,322,289	5,229,790	-	6,110,419
□ 지출 계	13,293,989	13,293,989	17,239	0	13,311,228	12,516,125	26,509	13,246,158
사업비	5,550,802	5,658,768	17,239	107,966	5,676,007	5,655,160	20,847	5,771,952
기금운영비	53,765	57,599	-	3,834	57,599	51,937	5,662	52,865
정부내부지출	48,575	48,575	-	-	48,575	48,575	-	46,100
여유자금운용	7,640,847	7,529,047	-	△111,800	7,529,047	6,760,453	-	7,375,241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나. 분석의견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및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으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 재정전망은 가입자 수, 보수상승률, 퇴직률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여 장래 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규모 등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3조¹⁾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1995년 재정계산제도 법제화 이후 5차례(2001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행되었다.

제1차~제3차 재정재계산 시 사학연금 재정수지 적자시점 및 기금고갈 시점이 거의 유사했으나, 2015년 사학연금 제도개선으로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 재정수지 적자시점 및 기금고갈 시점이 제3차 결과 보다 각각 12년, 18년 지연되었다. 그러나 부담률 인상 및 연금액 동결이 2020년 종료되는 등 2015년 사학연금 제도개선 효과가 사라지면서 제5차(2020년)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2029년에 재정수지 적자에 도달하고 2049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제4차(2015년) 재정재계산 결과 보다 각각 6년, 2년 앞당겨진 시점이다.

[사학연금 재정수지 전망]

구 분	제1차 재정재계산 (2001)	제2차 재정재계산 (2006)	제3차 재정재계산 (2010)	제4차 재정재계산 (2015)	제5차 재정재계산 (2020)
재정수지 적자시점	2020년	2018년	2023년	2035년	2029년
기금고갈 시점	2029년	2026년	2033년	2051년	2049년

자료: 교육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2023. 3. 31.)에 따르면 사학연금기금 고갈시점이 더 빨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사학연금 적립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43년 소진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정부의 5차 재정재계산(2049년) 보다 6년 앞당겨졌다.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단위: 조원, %)

구 분	수입(A)	지출(B)	재정수지(A - B)		적립금		
					불변가격	경상가격	
2023	6.2	5.1	1.1	(0.0)	25.2	25.2	(1.1)
2028	6.2	6.2	0.1	(0.0)	25.3	27.7	(1.0)
2030	6.2	6.5	△0.3	(0.0)	24.2	27.3	(0.9)
2040	5.6	8.2	△2.6	(△0.1)	6.2	8.3	(0.2)
2043	5.2	8.6	△3.3	(△0.1)	△3.1	△4.4	-
2050	5.4	9.1	△3.6	(△0.1)	-	-	-
2060	5.3	9.4	△4.1	(△0.1)	-	-	-
2070	5.1	9.5	△4.5	(△0.1)	-	-	-
2080	4.8	9.7	△5.0	(△0.1)	-	-	-
2093	4.3	9.6	△5.3	(△0.1)	-	-	-

주: 1. 전망액은 2023년 불변가격 기준

2. 적립금의 경우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최대 적립금 도달 및 적립금 소진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점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제시

3. ()는 GDP 대비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2023. 3. 31.

사학연금 제도개선은 1996년, 2000년, 2010년에 소폭 이루어졌으나,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개선과 함께 부담률을 7%(2015년) 또는 8%(2016년)에서 9%(2020년)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9%(2015년) 또는 1.878%(2016년)에서 1.7%(2035년)로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되는 연금액을 5년(2016~2020년) 동안 동결하는 등 이전에 비해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사학연금 제도개선 현황]

연도	제도개선 내용
1996년	- 부담률 인상 (보수월액의 5.5% → 6.5%) * '99년에 7.5%로 인상 -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 도입 ('96.1.1 이후 가입자)
2000년	- 부담률 인상 (보수월액의 7.5% → 8.5%) - 연금산정기준 변경 (퇴직 시 보수월액 →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 대상 확대 (전체 재직자) * 단, 퇴직연도에 따른 개시연령의 단계적 적용 등 경과조치를 통한 기존 가입자 기득권 보호
2010년	- 기준보수 변경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부담률 단계적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5.525% → 7%까지) -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2.1% → 1.9%)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의 70% → 60%) * '10.1.1 가입자부터 -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신규가입자부터 60세 → 65세) - 기준소득월액 상한 설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2016년	- 부담률 단계적 추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 9%) * '16년 8% → '17년 8.25% → '18년 8.5% → '19년 8.75% → '20년 9% -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1.9% → 1.7%)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5년 1.7% - 연금액 5년('16~'20) 동결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적용대상 확대 ('10.1.1 가입자부터 → '16.1.1 이후 신규 발생하는 모든 유족연금) - 연금지급률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16.1.1 이후 가입기간 최대 30년까지) - 상향조정된 연금지급 개시연령(65세) 적용대상 확대('96.1.1 이후 가입자에도 단계적 적용)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연금부담금에서 연금급여를 제한 연금수지는 2016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연금제도 개선의 효과가 약화된 2021년에는 흑자 규모(1,581억원)가 2020년의 50%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2022년에는 적자(△2,191억원)로 전환되었다. 즉, 연금수지 악화 원인은 수입 측면에서는 2016. 1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²⁾에 따라 부담률²⁾이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나 2021년 이후 부담률이 동결되어

2) 부담률 2015년(14%) → 2016년(16%) → 2017년(16.5%) → 2018년(17%) → 2019년(17.5%) → 2020년(18%)

부담금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지출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급여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³⁾

[사학연금 연도별 연금수지 및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연금 수지 (A-B)	재정 수지 (a-b)	총수입(a)				총지출(b)		
			연금 부담금 (A)	기금 운용 수익	기타	소계	연금 급여 (B)	기타	소계
2012	5,906	12,992	21,429	7,238	39	28,707	15,523	192	15,715
2013	3,646	10,549	20,632	7,094	24	27,750	16,985	216	17,201
2014	2,392	5,854	21,063	3,644	39	24,747	18,670	223	18,893
2015	964	5,591	21,906	4,823	45	26,775	20,941	241	21,183
2016	4,999	10,182	27,415	5,431	40	32,887	22,416	289	22,705
2017	5,242	18,484	29,535	13,472	62	43,071	24,293	292	24,586
2018	4,765	754	31,329	△3,763	71	27,636	26,563	318	26,882
2019	3,868	22,093	33,052	18,480	57	51,590	29,184	313	29,497
2020	3,408	24,626	35,091	21,546	56	56,694	31,682	385	32,067
2021	1,581	28,092	35,955	26,854	61	62,870	34,373	404	34,777
2022	△2,191	△20,052	36,406	△17,613	70	18,863	38,597	319	38,916

주: 기금 결산 후 평가손익이 반영된 수지 기준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발생 및 기금소진은 인구, 경제상황 등에 따라 도래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정부담-급여체계 대한 대안과 장기재정목표와 연계된 수익률 설정, 수익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다만, 2022년에는 기금운용수익이 손실(△1조 7,613억원)로 전환되어 재정수지가 적자(△2조 52억원)로 전환되었다.

가. 현 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¹⁾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의 2022년도 예산현액 88억 4,000만원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8,840	8,840	-	8,840	8,840	100.0	-	-	6,96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2021~2022년 수지차보전기관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자체수입 확보 노력에 대해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지차보전기관에 대해 ‘특별한 노력’ 등으로 기관의 자체수입²⁾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 수준은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50%이며, ‘특별한 노력에 따른 수입증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135-300

2) 결산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기관임의보유금 중 수입 계상분, 출연·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연구용역비 등 정부지원금, 차입금 등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

분'은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 운영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수입증대'를 의미한다. 인센티브의 지출 용도는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연도 중 지출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출 소요, 기관 청사 확보를 위한 건설비·부지매입비,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취득 소요 등 자본적 지출 및 경상비이다.³⁾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12억 9,500만원, 2022년 9억 8,3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었다. 이는 사업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의 5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센티브 적립금 현황 및 검토]

(단위: 백만원)

	자체수입 중 사업수입			인센티브
	계획(a)	실적(b)	증가(b-a)	
2021	10,592	13,278	2,686	1,295
2022	10,872	13,202	2,330	983

자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센티브 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한 수입목표 대비 초과 달성한 수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수입목표가 과소 편성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하게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계획 대비 자체수입 실적이 초과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체수입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초과 수입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2020년 사업수입은 계획(105억 9,200만원)대비 132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사업수입 예산을 2020년 실현된 사업수입보다 적은 규모인 10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3) 인건비, 신규사업에의 사용은 금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년간(2018~2022년)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정부 지원	출연금	8,600	8,600	7,846	7,846	8,569	8,569	8,714	8,714	8,840	8,840
	자체 수입	사업 수입	10,546	10,530	10,538	11,394	10,592	13,278	10,872	13,202	11,734	12,932
		사업외 수입	280	516	305	507	414	317	652	289	447	303
		전년도 이월금	1,430	1,152	1,362	1,387	1,350	2,229	1,300	2,560	1,707	2,808
		계	12,256	12,198	12,205	13,288	12,356	15,824	12,824	16,051	13,888	16,043
		지출 합계(D)	20,856	19,415	20,051	18,933	20,925	20,549	21,538	20,977	22,728	21,580
결산잉여금(C-D)		-	1,387	-	2,229	-	3,855	-	3,791	-	3,303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2022회계연도 예·결산 현황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센티브 지원 협의 시 현 청사계약기간(2017. 6.~2022. 5.) 만료 예정에 따라 청사 재계약(2022. 6.~2025. 5.) 관련 인상분 마련 및 신규 청사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 마련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센티브 사용용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진흥원은 당초 계획대로 청사 재계약 또는 신규 청사 이전에 따른 예측 불가능하고 시급한 특이소요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년 소요되는 사무환경 개선 공사,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센티브 적립금 사용내역]

(단위: 천원)

지출일자	금액	사용내역
2021.9.15.	22,000.0	청사 사무환경 개선 공사
2021.9.28.	15,000.0	청사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인프라 구축
2021.9.15.	4,507.8	청사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가구 구매
2022.7.14.	21,978.0	청사 사무환경 개선(영상시스템 구축 등)
2022.7.14.	2,271.4	청사 사무환경 개선(영상시스템 관제용 모니터 및 PC 구입)
2022.7.22.	51,000.0	청사 사무환경 개선(디지털 화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2022.11.2.	169,419.4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2022.12.2.	2,806.9	청사 관리비 납부
합 계	288,983.5	

자료: 교육부

기획재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2021~2022년 동안 수지차보전기관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자체수입 노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출연기관의 자체수입 노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지차보전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노력을 실효성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으로 인센티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¹⁾는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의 2022년도 계획현액 438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출연(정보화)	43,833	43,833	43,833	43,833	100.0	-	-	39,44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 기능인 교육·학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유일한 사업 수입원인 교육 콘텐츠 사용료가 감소하면서 2022년 사업수입이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부 및 정보원은 새로운 영역에서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최근 5개년 자체수입 중 84.3%가 전년도이월금²⁾이며,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일반회계 1303-500

2) 전년도 출연사업 낙찰차액 등

사업외수입³⁾이 15.5%(이자수입 6.1%, 잡수입 9.4%), 사업수입⁴⁾은 0.2%에 불과하다. 사업수입은 2018년 8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정부 지원 수입 (A)	출연금	36,879	36,879	37,317	37,317	37,892	37,892	39,139	39,139	43,833	43,833
		사업수입	198	8	198	2	198	2	198	1	198	-
	자체 수입 (B)	사업외 수입	120	165	120	202	120	73	120	108	120	174
		전년도 이월금	1,178	929	1,178	979	1,178	709	1,178	630	1,178	686
		계	1,496	1,102	1,496	1,183	1,496	784	1,496	739	1,496	860
	수입 합계 (C=A+B)		38,375	37,981	38,813	38,500	39,388	38,676	40,635	39,878	45,329	44,693
	전체 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 (B/C)		3.9	2.9	3.9	3.1	3.8	2.0	3.7	1.9	3.3	1.9
지출 합계(D)			38,375	37,016	38,813	37,826	39,388	38,072	40,635	39,261	45,329	44,123
결산잉여금(C-D)			-	965	-	674	-	604	-	617	-	570

자료: 교육부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지차보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비중이 2022년 결산 기준 1.9% 수준이다. 수지차보전기관은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다. 정부는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을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한다.

3) 출연금 이자수입, 임대수입, 위탁사업비 잔액, 일회성 수입 등

4) 교과서에 게재된 콘텐츠 저작권료

한국학술정보원은 교육 콘텐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사업수입이며, 콘텐츠 저작권료 외 대부분의 사업은 수입 창출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 관련 연구, 지원센터 운영, 교원 연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 대상 서비스의 무상제공 확대로 인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축소⁵⁾되었고, 현재 유일한 사업 수입원인 교육 콘텐츠 사용료도 최근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 콘텐츠 자체 제작이 줄어들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 기능인 교육·학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유일한 사업 수입원인 교육 콘텐츠 사용료가 감소하면서 2022년 사업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부 및 정보원은 새로운 영역에서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⁶⁾

5) 2015년 원격교육연수내용심사(수탁사업) 심사료를 자체수입에서 제외, 2017년 학술연구정보시스템(RISS) 내에 유료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화

6)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이 학교에서 쓰일 수 있도록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한국학술정보원의 기능을 개편하여 에듀테크 기업 대상 기술 표준 제공, 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수입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¹⁾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회지표 분석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의 2022년도 예산현액 10억 6,400만원 중 8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800	800	264	1,064	817	76.8	180	67	1,100
사회정책 조정 강화	650	650	235	885	675	76.3	145	64	950
- 일반용역비 (210-14)	100	100	15	115	81	70.4	26	7	10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300
- 정책연구비 (260-02)	550	550	220	770	594	77.1	119	57	550
범정부 공동 온종일 돌봄 조정지원	150	150	29	179	142	79.3	35	3	150
- 일반용역비 (210-14)	150	150	29	179	142	79.3	35	3	15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7031-313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사회정책 전략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을 연도 말에 시급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하였다.

‘사회정책 전략회의 개최’는 범부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 발표, 사회부처 간 협업 의지 표명 등을 위한 회의개최 비용으로, 매년 1억원(일반용역비)이 편성되어 왔다. 교육부는 매년 사회정책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할 사회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²⁾

그러나 사회정책 전략회의는 2018~2019년 두 해 개최되고 2020~2022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0~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용역비를 정책연구비로 연도 말인 2020년 12월에 자체 전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추진하였다.

2022년에는 새정부 사회정책 비전 발표 등을 위해 2022. 6월부터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를 준비하였으나,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발표 지연에 따른 사회정책 방향 발표 순연 요청³⁾, 박순애 부총리 사임으로 인한 공석 발생(8월~11월) 등의 사유로 최종 미개최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로 인해 일반용역비 예산(1억원)은 연도 말(2022. 12월)에 2023년 사회정책 방향 홍보영상(5,000만원) 및 자료집 제작(2,200만원),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2023.2.1.) 관련 영상 제작(2,000만원)으로 집행하고 2,600만원을 이월하였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전략회의 개최 예산을 당초 목적인 회의 개최 비용이 아닌 연구용역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은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며 연도 말에 추진할 정도로 시급성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포용국가전략회의’(2018. 9.) 및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회 개최(2019. 2.)

3) 국정과제 이행계획 발표(‘22.7~8월) 이후 시점으로 발표 요청

4) 회의 미개최로 인해 새정부 사회정책 비전은 ‘23.2.6.에 발표(‘23.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가. 현 황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은 대학혁신지원(R&D)¹⁾의 내역사업으로,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의 분절성 및 운영상 칸막이로 인해 사각지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 전문성과 교육부 제도 지원의 협업을 통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특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고 기술 혁신에 발맞춘 대학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도 정부 예산의 17개 협업예산 과제 중 ‘고등교육 신기술 인재 양성’에 포함되는 사업²⁾이다.

교육부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					
대학혁신지원 (R&D)	795,000	795,000	795,000	795,000	100.0	-	1,100,984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42,000	42,000	42,000	42,000	100.0	-	105,28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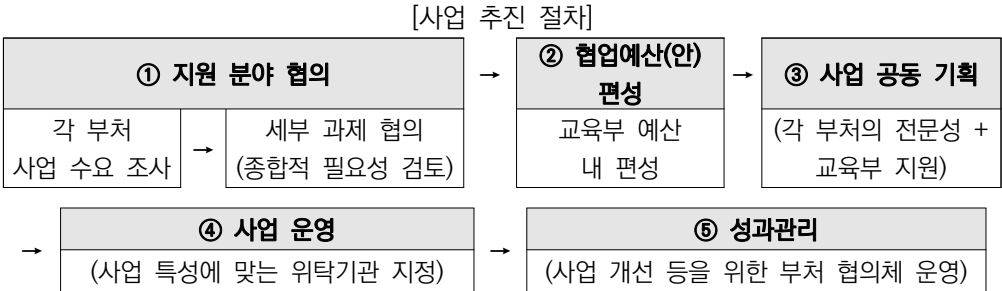
교육부 및 관련 부처청은 혁신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편성 시 신기술 분야별 소관 부처 수요를 조사한 후 인재양성 수준(대학, 대학원), 지원대학 수, 지원내용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정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향과 혁신인재양성 사업 운영의 일관성, 각 부처에서 기 운영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56-300

2) 기획재정부,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2021. 8. 27.

하여 각 부처 수요 접수 후 학부 과정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설계하고, 세부분야별 참여 대학수 및 1교당 양성인원, 1교당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조정하였다.



자료: 교육부

2022년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7개 부처, 14개 사업에 4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45개 대학에 미래형자동차, 자원개발 등 세부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학교 당 평균 지원단가는 3억원 정도이다.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세부 내역]

구분	부처명	세부 지원 분야	지원대학 (교)	양성인원 (명)	예산 (백만원)
1	산업부	미래형자동차	15	720	9,128
2		자원개발	5	120	831
3		수소연료전지	3	60	113
4		온실가스감축	10	240	1,445
5		이차전지	5	100	2,878
6		시스템반도체	30	1,200	9,776
7		바이오헬스	5	125	3,131
8	과기부	SI반도체	3	150	1,141
9	복지부	의료인공지능	5	100	3,621
10	환경부	디지털물산업	3	90	2,172
11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2	40	478
12		공간정보	8	320	1,215
13	개인 정보위	정보보안	1	30	348
14	특허청	지식재산	50	1,000	4,706
총 계			145	4,295	42,000

주: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대학 중복 가능(대학 수 및 단가 변동 가능)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의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협업예산으로 도입된 사업이지만, 신기술 분야 대학 인재양성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협업예산으로 운영하므로, 향후 부처별 신기술 대학인재양성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운용 효율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효과적인 국가 인재양성의 추진을 위해 전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있어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혁신인재양성사업 이외에도 신기술 분야 대학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10개 부처 29개 내역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협업형 혁신인재양성사업과 다른 신기술 대학 재정지원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거나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신기술 분야 대학 인재양성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21		2022 예산
			본예산	추경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	-	60,000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83,200	83,200	89,01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육성	9,600	9,600	9,60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118,778	118,778	118,778
과기부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 (교육훈련(정규교육))	SW중심대학	72,000	72,000	76,500
	정보통신방송혁신 인재양성 (교육훈련)	ICT혁신인재4.0	2,750	2,750	5,250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18,000	18,000	20,000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14,000	14,000	18,500
		ICT명품인재양성	6,000	6,000	6,000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5,760	5,760	5,760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14,500	14,500	6,000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	7,200	7,200	8,600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21		2022 예산
			본예산	추경	
	정보통신 방송혁신인재양성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	38,400	38,400	36,600
	인재활용확산지원 (R&D)	혁신성장 선도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11,250	11,250	12,000
국토부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1,544	1,544	1,960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스마트시티혁신인재육성	1,800	1,800	1,800
농림부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스마트팜)	3,000	3,000	3,000
문체부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문화기술핵심인력양성	4,750	4,750	6,000
복지부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1,500	1,500	1,500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육성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1,500	1,500	1,500
	보건의료인재 양성지원사업(R&D)	글로벌인재육성(바이오메디컬글 로벌인재양성)	9,425	9,425	9,413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	의사과학자연구비지원 의사과학자양성인프라구축	5,910	5,910	9,009
산림청	산림융복합 전문인력 양성(R&D)	산림연구인력교육훈련	3,150	3,150	3,500
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R&D)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교육훈련(26개 내내역))	63,902	63,902	80,177
	에너지인력양성	교육훈련	33,009	33,009	32,869
		해외연계	5,500	5,500	6,750
식약처	규제과학 인력양성사업		2,500	2,500	5,000
중기부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중소기업제약학과	11,966	11,966	13,260
	연수사업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 (스마트랩교육 및 운영)	534	534	534
환경부	특성화대학원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25,919	25,919	27,319

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17개 협업예산 과제 중 '고등교육 신기술 인재 양성'에 포함되는 사업

자료: 교육부

예를 들어,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과 교육부 소관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 대학 사업 간에도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는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사업의 AI반도체 분야에서, 혁신공유대학사업의 차세대반도체 분야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두 사업 모두 AI반도체, 차세대반도체라는 유사한 분야의 대학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기정보공학부, 재료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가 중복

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서 개설된 교과목에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및 ‘인공지능 하드웨어 설계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사업에서 같은 이름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지만, 서울대의 부처협업형 AI반도체 사업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은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 연합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혁신공유대학 사업과는 참여 학생 등을 별도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 지표에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포함하는 등 자체적인 점검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사업이 유사한 분야에서 동일한 대학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의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 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과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서울대학교 지원 현황]

사업	분야	참여학과	중복 개설 교과목명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AI반도체	전기·정보공학부, 재료공학부, 컴퓨터 공학부, 원자핵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프로젝트, 인공 지능 하드웨어 설계 프로젝트
혁신공유대학	차세대 반도체	참여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자료: 교육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의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협업예산으로 도입된 사업이지만, 신기술 분야 대학 인재양성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협업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개정(2022. 3. 시행)으로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부는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대학 간 연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고, 범부처 대학 인재양성 지원을 정교화·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향후 부처별 신기술 대학인재양성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운용 효율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¹⁾은 38개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의 2022년도 예산현액 1,165억 1,600만원 중 1,159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128,622	116,516	116,516	115,971	99.5	-	545	327,88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고가·첨단기자재 확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장비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검사기 등 1억원 이상의 고가·첨단기자재의 중복 운영 방지, 공동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 예산안 편성부터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 특성화 교육 및 중점연구 추진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704-303

확충 계획을 수립²⁾하였다.

대학이 중점연구 및 기초학문 육성계획, 지역연계 활용계획(지역연계 실험실) 및 권역별 중복장비 운영여부, 장비 운영계획, 장비 현황, 학내 중복장비 여부, 장비 노후도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 교육시설과가 내부적으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한다.

교육시설과는 2022년 대학별 중점연구 분야 연구장비, 공동연구 활용 장비, 탄소중립 연구분야 연구장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는 고가첨단기자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시설장비의 중복성, 시설장비의 활용성 등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2022년 고가첨단기자재 선정 기준]

(단위: 백만원, 개)

합 계		대학별 중점연구 분야 연구장비		공동연구 활용 장비		탄소중립 연구분야 연구장비·실습장비	
예산	장비수	예산	장비수	예산	장비수	예산	장비수
27,375	68	16,052	41	7,686	18	3,637	9

자료: 교육부

한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업(연구)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 시설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고가·첨단기자재 확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장비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이와 관련한 지침 등 규정은 없으며,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은 없으며,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억 5,500만원이며, 이 중 83.9%인 12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455	1,455	1,455	1,220	28	207	83.9
합계	1,455	1,455	1,455	1,220	28	207	83.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수입은 없으며,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총지출은 14억 5,5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	1,455	1,455	1,455	-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다.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자산은 3억 7,400만원이며, 부채는 없으며, 순자산은 3억 7,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0만원, 일반유형자산 2억 7,100만원, 무형자산 1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부채는 없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74	-	순증	순증
Ⅰ. 유동자산	0 ¹⁾	-	순증	순증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271	-	순증	순증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02	-	순증	순증
Ⅵ.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74	-	순증	순증
Ⅰ. 기본순자산	-	-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74	-	순증	순증
Ⅲ. 순자산 조정	-	-	-	-

주: 유동자산은 20만원 규모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억 1,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9억 1,800만원이며, 수익은 없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9억 1,800만원이다. 총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행정지원 프로그램(9억 1,800만원)이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18	-	순증	순증
가. 프로그램 총원가	918	-	순증	순증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0	-	순증	순증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18	-	순증	순증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18	-	순증	순증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0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억 7,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억 7,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9억 1,800만원인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2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 조달 등 재원의 조달 12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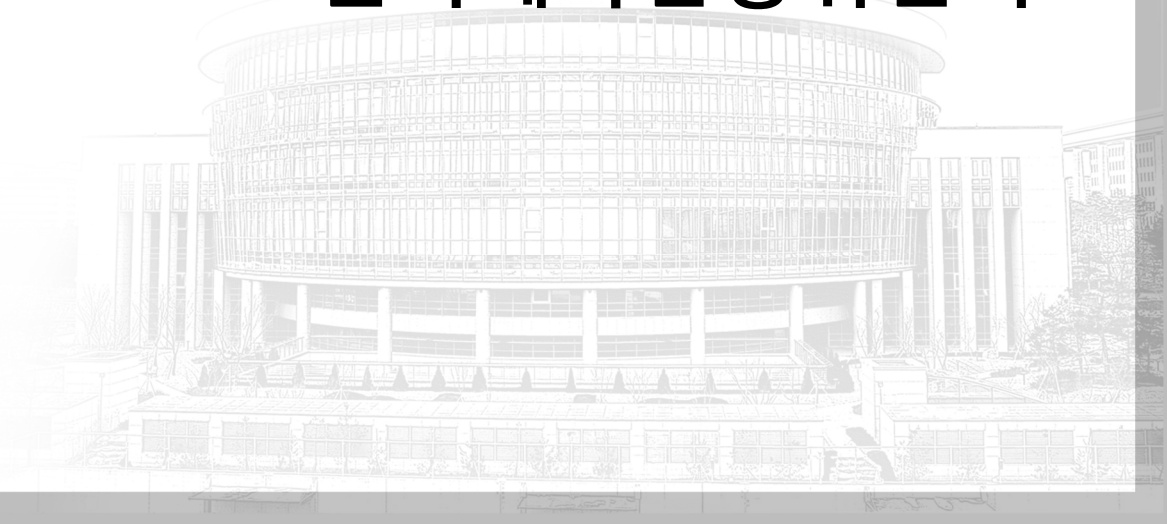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	-	-	-
II. 재정운영결과	918	-	순증	순증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292	-	순증	순증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74	-	순증	순증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36억 700만원이며, 4,340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2%인 4,042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297억 7,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0,513	60,513	60,513	214,341	198,910	15,431	-	92.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852	21,852	21,852	51,218	36,955	14,263	-	7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41,242	141,242	141,242	168,466	168,385	81	-	99.9
합계	223,607	223,607	223,607	434,025	404,250	29,775	-	93.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092억 1,900만원이며, 이 중 95.6%인 3조 9,295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566억 4,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0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46,303	3,246,303	3,305,597	3,165,160	50,202	90,235	9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6,926	616,926	657,686	635,711	-	21,976	96.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41,242	141,242	145,935	128,650	6,444	10,842	88.2
합계	4,004,471	4,004,471	4,109,219	3,929,521	56,646	123,052	95.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5조 3,662억 3,800만원이며, 5조 4,891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인 5조 4,545억 3,700만원을 수납하고 345억 9,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23,987	534,531	534,531	439,179	439,179	-	-	100.0
영화발전기금	200,447	200,447	200,447	163,229	162,967	262	-	99.8
지역신문발전기금	9,525	9,525	9,525	11,492	11,401	91	-	99.2
언론진흥기금	38,184	38,184	38,184	48,563	48,461	102	-	99.8
관광진흥개발기금	1,873,357	1,773,357	1,773,357	1,615,816	1,584,535	31,281	-	98.1
국민체육진흥기금	2,810,194	2,810,194	2,810,194	3,210,855	3,207,994	2,861	-	99.9
합계	5,455,694	5,366,238	5,366,238	5,489,133	5,454,537	34,596	-	9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5조 3,662억 3,800만원이며, 계획현액 5조 3,845억 9,700만원의 101.3%인 5조 4,545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06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7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23,987	534,531	534,647	439,179	-	3,337	82.1
영화발전기금	200,447	200,447	201,366	162,967	635	6,733	80.9
지역신문발전기금	9,525	9,525	9,525	11,401	-	328	119.7
언론진흥기금	38,184	38,184	38,184	48,461	-	545	126.9
관광진흥개발기금	1,873,357	1,773,357	1,774,500	1,584,535	6,391	90,865	89.3
국민체육진흥기금	2,810,194	2,810,194	2,826,375	3,207,994	3,646	21,914	113.5
합 계	5,455,694	5,366,238	5,384,597	5,454,537	10,672	123,722	10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64억 4,000만원(1.5%)이 증가한 3조 71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102억 500만원(7.3%)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92,460	83,389	83,389	243,074	159,685	150,614
기금	2,769,181	2,931,473	2,942,017	2,828,772	△113,245	59,591
합계	2,861,641	3,014,862	3,025,406	3,071,846	46,440	210,205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03억 2,000만원(2.4%)이 감소한 7조 3,26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435억 4,600만원(6.4%)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457,788	3,825,338	3,825,338	3,749,947	△75,392	292,159
기금	3,424,908	3,666,641	3,681,224	3,576,296	△104,928	151,388
합계	6,882,696	7,491,979	7,506,562	7,326,242	△180,320	443,54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은 전년 대비 7,01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6조 4,691억 3,7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554억 1,000만원, 투자자산 5,612억 9,200만원, 일반유형자산 737억 9,600만원, 무형자산 100억 4,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8억 1,9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4,788억 2,300만원 증가한 2조 8,312억 2,000만원으로 이는 유동부채 2,208억원, 장기차입부채 2,563억 8,800만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22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조 6,379억 1,700만원으로 적립금 및 양여금이 전년 대비 722억 8,600만원, 순자산 조정이 817억 7,700만원 감소하였으나, 기본순자산이 3,766억 2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6,469,137	15,767,777	701,360	4.4
Ⅰ. 유동자산	3,038,534	2,983,124	55,410	1.9
Ⅱ. 투자자산	6,551,502	5,990,210	561,292	9.4
Ⅲ. 일반유형자산	6,779,510	6,705,714	73,796	1.1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88,383	78,340	10,043	12.8
Ⅵ. 기타비유동자산	11,208	10,389	819	7.9
부 채	2,831,220	2,352,397	478,823	20.4
Ⅰ. 유동부채	564,606	343,806	220,800	64.2
Ⅱ. 장기차입부채	2,201,934	1,945,546	256,388	13.2
Ⅲ. 장기충당부채	10,992	9,499	1,493	15.7
Ⅳ. 기타비유동부채	53,688	53,547	141	0.3
순 자 산	13,637,917	13,415,379	222,538	1.7
Ⅰ. 기본순자산	7,152,081	6,775,479	376,602	5.6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487,565	3,559,851	△72,286	△2.0
Ⅲ. 순자산 조정	2,998,271	3,080,048	△81,777	△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조 3,183억 3,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조 1,195억 8,300만원, 관리운영비 4,039억 3,100만원, 비배분비용 778억 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716억 3,700만원, 비배분수익 3,128억 7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3,985억 4,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810억 9,000만원(9.2%) 감소한 5조 7,168억 7,5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 순원가 4,774억 2,400만원 감소, 관리운영비 200억 6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생활체육육성(8,039억 4,900만원)과 콘텐츠산업 육성(7,174억 9,500만원),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6,194억 2,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505억 7,600만원과 경비 1,533억 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273억 2,900만원, 이자비용 487억 3,300만원과 지급수수료 3,700만원, 대손상각비 8,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547,946	6,025,370	△477,424	△7.9
가. 프로그램 총원가	6,119,583	6,441,028	△321,445	△5.0
나. 프로그램 수익	571,637	415,658	155,979	37.5
II. 관리운영비	403,931	423,937	△20,006	△4.7
III. 비배분비용	77,805	65,621	12,184	18.6
IV. 비배분수익	312,807	216,963	95,844	4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716,875	6,297,965	△581,090	△9.2
VI. 비교환수익 등	2,398,543	2,215,490	183,053	8.3
VII. 재정운영결과(V-VI)	3,318,332	4,082,475	△764,143	△1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3조 4,153억 7,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3조 6,379억 1,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225억 3,800만원(1.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3조 3,183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3조 6,226억 4,700만원 증가,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817억 7,7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조달 3조 9,956억 7,4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730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534억 6,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83억 1,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3,415,379	13,282,753	132,626	1.0
Ⅱ. 재정운영결과	3,318,332	4,082,475	△764,143	△18.7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622,647	3,476,897	145,750	4.2
Ⅳ. 조정항목	△81,777	738,204	△819,981	△111.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3,637,917	13,415,379	222,538	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294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8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1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억원이 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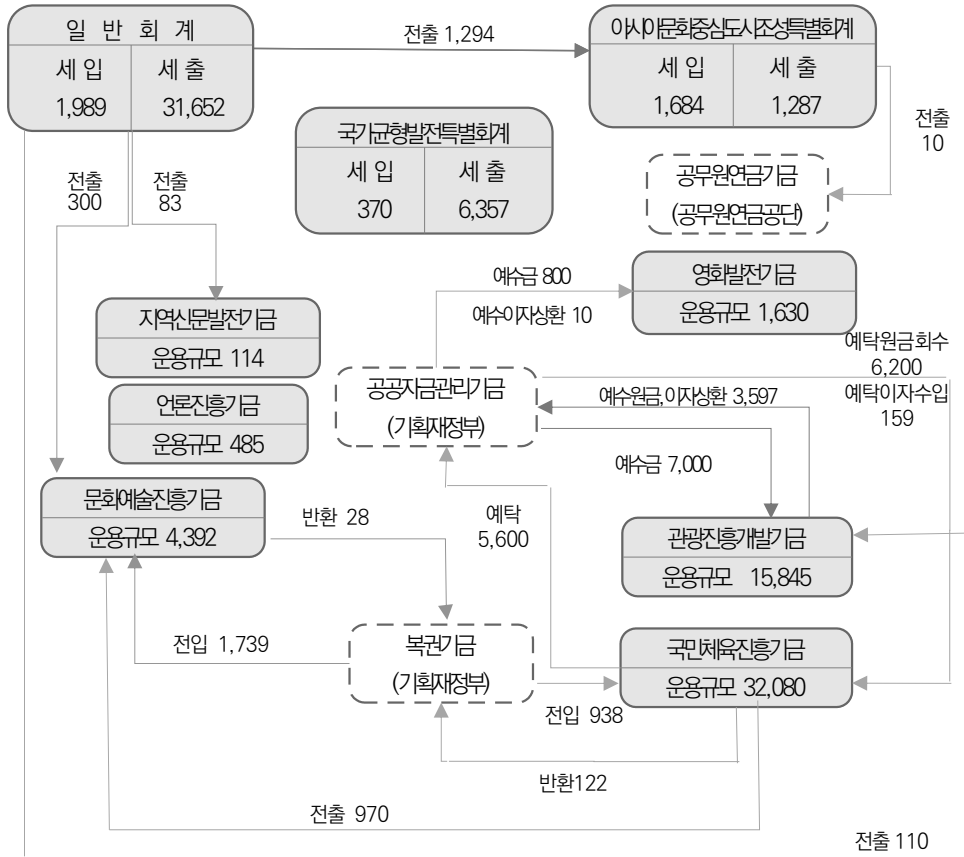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970억원을 전출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6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예탁원금 6,200억원을 회수하고, 예탁이자수입 159억원을 받았다. 복권기금으로부터는 938억원을 전입받고 122억원을 반환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739억원을 전입받고, 28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800억원을 예수금으로 받고, 예수이자 10억원을 상환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7,000억원을 예수금으로 받고 예수원금 및 이자로 3,597억원을 상환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②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은 자펀드 투자집행률 저조에 따라 신규 출자 규모를 고려하여 349억원 감액(1,737억원 → 1,388억원)되었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콘텐츠의 활용도 저조 등을 우려하여 36억원 감액(204억원 → 168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②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③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영화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399억원 증액(315억원 → 714억원)되었고,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문화분야 간접지원대책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265억원 증액(221억원 → 486억원)되었다. 또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554억원 증액(50억원 → 604억원)되었다.²⁾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계 피해가 지속되어 예술인의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제1회 추경 407억원에 이어 605억원이 증액되었다.³⁾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5.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시장 육성을 위한 **K-콘텐츠 신산업 성장**, ② 약자 프렌들리 문화 정책 등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향유기반 확대**, ③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이후 조기 회복 여건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장비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업 예산 편성시 관련 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예상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부현액의 14.0%만 집행되었으므로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적정 교부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1~2022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은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지원은 23.0%로 저조하고 2022년 계획액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는 2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관련 교부액 9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는 2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부액 60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다른 사업 예산과 합산하여 용역이 수행되었으나 일부 용역은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확보와 연관성이 저조하므로 용역 결과물에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관련 성과를 확인하는 등 동 사업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 파악을 통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계획액은 전액 교부되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의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를 교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적정 사업비 재교부를 포함한 사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에서 각 지자체별로 개발된 관광안내 앱은 민간에서 개발된 앱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며 단발적인 사용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된 앱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계획액은 지자체가 선정된 연도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각 지자체는 2022년에 교부액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0~2021년에는 당해 연도 집행률이 2.0% 미만으로 저조하였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한편 사업 수행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적정 연부액으로 편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다.

1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¹⁾은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 예술 기업 성장 지원, 예술 창·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344억 9,600만원 중 99.9%인 34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00만원을 이월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 중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160억 2,500만원,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10억원이 각각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술의 산업화 추진	34,486	34,486	-	10	34,496	34,460	99.9	34	2	30,684
아트컬처랩 조성	16,025	16,025	-	-	16,025	16,025	100.0	-	-	11,200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1,000	1,000	-	-	1,000	1,000	100.0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633-306

1-1.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은 예술인 및 예술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창·제작, 교육·네트워킹, 창업·보육·입주 공간 등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2년에 160억 2,5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규모	160억 2,500만원
시설규모	연면적 7,912.43㎡(2,390평) / 지하1층, 지상6~7층, 지상16~17층
공간활용계획	예술인 및 예술기업 대상 융합형 창·제작, 실험·시연, 교육·네트워킹, 창업·보육·입주 공간 등 구성
위치	서울시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5개층)
수행방식	민간경상보조(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장비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업 예산 편성시 관련 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하는 한편, 예상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사업 예산 160억 2,500만원은 당초 임대료 및 보증금 64억원, 건설비 57억 7,500만원, 장비 구입 등 35억원, 운영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 간 금액을 변경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승인하였다.²⁾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예산액 항목 간 변경 내역 및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변경 사유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3,490	750	△2,740	임대 기간 감소 등 수요 감소
	보증금	2,910	950	△1,960	
	소계	6,400	1,700	△4,700	
건설비 (리모델링)	설계	508	644	136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가
	공사 및 감리	5,267	7,900	2,633	야간·휴일 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 대행 비용 소요
	소계	5,775	8,544	2,769	
공연 및 전시 장비 구입 등		3,500	5,446	1,946	일부 장비의 추가 구매 또는 임차에서 구매로 변경
기본운영비		350	335	△15	
합계		16,025	16,025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2022 ‘예술의 산업화 추진 - 아트컬처랩 조성’ 예산변경 승인요청((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9. 29.)

·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예산 변경 승인(문화체육관광부, 2022. 9. 3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예산액의 항목별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당초 12개월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조성 후보지 검토,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기간 소요로 착공이 지연되고 일부 임대료 면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47억원이 감액 조정되었다.

그리고 건설비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건물의 다른 층 임차인의 민원으로 주간 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야간·휴일 공사로 공사비 소요가 증가³⁾하여 27억 6,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또한 공연 및 전시 장비 구입 등은 일부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임차에서 구매로 변경하여 19억 4,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장비 구입 등 변경 주요 사례]

(단위: 백만원)

공간	주요시설 및 장비시스템	당초	변경	증감
시연	· 시연시설: 융합 실험 + 시연 - 3D음향 및 오디오믹싱시스템, 영상촬영시스템, 무대기계 및 조명시스템, 체인호이스트 등	1,480	2,222	742
	· 시연시설: 프로젝션 맵핑 스튜디오 - 고사양 프로젝터 시스템, 프로젝트 맵핑 시스템, 음향시스템, 상부 그리드시스템 등			
	· 층별LED월: 창·제작물 시연 디스플레이 및 음향시스템	-	400	400
기타	· 글로벌 회의실 등 - 디스플레이 스크린, 영상 컨퍼런스, 음향시스템 등 회의 전용 시스템	-	777	7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연 및 전시 장비 구입 등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 및 예술분야 전용 장비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고가의 장비로 렌탈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3년 임대 비용이 구입 비용과 비슷한 장비는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에 유리하여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대 및 예술분야 전용 장비의 임대 불능 상황은 당초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시 관련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의 조정은 임대료 및 보증금이 당초 계획 대비 적게 집행됨에 따라, 예상 집행 잔액으로 장비를 확대 구매하고 임차 예정이었던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예산 편성시 관련 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하는 한편, 예상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부현액의 14.0%만 집행되었으므로,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적정 교부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례에 걸쳐 예산액 160억 2,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교부현액의 14.0%인 2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시기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16,025	16,025	11,698	'22. 1.	16,025	2,242	14.0	13,783	0
		1,614	'22. 7.					
		1,492	'22. 10.					
		1,221	'22. 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변경된 예산을 기준으로 실집행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비 중 공사 및 감리비 79억원과 장비 구입 등 54억 4,6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공간 조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실집행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D)	집행률 (D/B)	집행내역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3,490	750	△2,740	746	99.5	임대료
	보증금	2,910	950	△1,960	950	100.0	보증금
	소계	6,400	1,700	△4,700	1,696	99.8	
건설비 (리모델링비)	설계	508	644	136	356	55.3	건축기획비, 설계비
	공사 및 감리	5,267	7,900	2,633	0	0.0	-
	소계	5,775	8,544	2,769	356	4.2	
공연 및 전시 장비 구입 등		3,500	5,446	1,945	0	0.0	-
기본운영비		350	335	△15	190	56.7	전문가 활용, 수수료 등
합계		16,025	16,025	0	2,242	1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2년 1~3월 후보지 선정 및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을 완료하고, 4~7월 설계, 8~12월 공사 및 장비 구축을 거쳐 12월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 및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이 2022년 1~7월에 완료되어 2022년에는 설계절차만 진행되었고, 공사 및 장비 구축은 2023년에 추진되어 8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추진 및 계획]

구분	당초 계획	변경 추진 및 계획
후보지 선정 및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2022. 1. ~ 3.	2022. 1. ~ 7.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2022. 4. ~ 7.	2022. 8. ~ 12.
설계 적정성 검토	-	2023. 1. ~ 2.
공종별 계약체결 및 기술검토 등	-	2023. 3. ~ 4.
공사, 장비 및 기반설비 구축	2022. 8. ~ 12.	2023. 5. ~ 8.
리모델링 완료	2022. 12.	2023. 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2년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은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사전 절차 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022년에는 설계절차만 수행되었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교부신청서에도 공사 발주는 7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에 전체 사업비 160억 2,500만원의 73.0%인 116억 9,800만원을 교부하고 잔액 43억 2,700만원도 연내에 전액 교부하여, 2022년 실집행률은 교부현액의 14.0%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⁴⁾는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1차 교부금의 사용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적정 교부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의 편성 내역과 다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문제

가. 현황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은 기초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연예술 콘텐츠 기반의 부가상품을 개발·유통하는 것으로, 2022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공연영상 창·제작 지원 9억원, 공연영상 유통·수급 5,000만원, 공연영상화 교육·컨설팅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예술경영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 공연예술(연극·뮤지컬·음악·무용·전통) 단체 및 예술가
지원규모	· 10억원 - 공연영상 창·제작 지원: 4,500만원×5개분야×4개작품=9억원 * 4개 작품 중 2개 작품은 전막 공연형, 2개 작품은 숏폼형 - 공연영상 유통·수급: 500만원×5개분야×2개작품=5,000만원 * 5개 분야(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 공연영상화 교육·컨설팅: 250만원×5개분야×4개작품=5,000만원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에서 당초 예산 편성에 비해 확대·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액 10억원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교부현액의 85.1%인 8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1,000	1,000	1,000	851	85.1	149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은 공연예술의 부가상품 개발을 통한 공연예술시장 확대였으나, 사업계획에서는 공연예술 등 예술 콘텐츠(IP)를 활용한 부가상품 개발·유통 지원으로 예술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당초 기초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에서 부가상품 개발·유통 사업화 아이디어 보유 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공연영상화 제작 지원에서 부가상품 개발·유통 기업 육성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당초 예산 편성시와 비교할 때 확대·변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⁵⁾

5)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유통 지원 사업 교부 신청((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6. 2.)
·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유통 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문화체육관광부, 2022. 6. 8.)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예산편성 대비 사업계획 비교]

구분	2022년 예산편성	2022년 사업계획
사업 목적	· 공연예술의 부가상품 개발을 통한 공연예술시장 확대	· 공연예술 등 예술 콘텐츠(IP)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상품 개발·유통 지원으로 예술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기초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 *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 부가상품 개발·유통 사업화 아이디어 보유 기업 * 공연 등 예술분야 단체·기획제작사기업 및 기술·데이터·유통 등 일반기업
사업 내용	· 공연영상화 제작 지원 10억원 - 공연영상 창·제작 지원 9억원 : 4,500만원×5개분야×4개작품 - 공연영상 유통·수급 5,000만원 : 500만원×5개분야×2개작품 - 공연영상화 교육·컨설팅 5,000만원 : 250만원×5개분야×4개작품	· 부가상품 개발·유통 기업 육성 지원 10억원 - 부가상품 개발·유통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8억 4,000만원 - 부가상품 개발유통 기업 인큐베이팅 1억 600만원 - 홍보, 심사 등 5,400만원

자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예산 편성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장르 융합과 탈장르화가 활발하고, 2022년 ‘예술 디지털 부가상품 및 유통 서비스 사업화 지원’으로 공모한 결과 다양한 장르의 현장 수요가 있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환경 변화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도 고려된 사항이며, 동 사업은 특히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편성되었다. 또한 공모 결과 공연 분야의 접수 비중이 49.2%로 가장 높아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6)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선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공연	시각	융복합	합계
접수	29	15	15	59
	(49.2)	(25.4)	(25.4)	(100.0)
선정	10	5	5	20
	(50.0)	(25.0)	(25.0)	(100.0)
미선정	19	10	10	39
	(48.7)	(25.6)	(25.6)	(100.0)

주: 괄호 안은 접수, 선정, 미선정에서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등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시 공연예술 부가상품에 대한 개념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 부가상품에 대한 개념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에서 예산액의 33.0%만 당초 편성 내역에 부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편성 내역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은 당초 기초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연영상화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가상품 개발·유통 사업화 아이디어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상품 개발·유통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공연영상 창·제작 지원 5건, 2억 2,400만원, 공연영상 유통서비스 지원 3건, 1억 500만원, 부가상품 개발 관련 교육 1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 수준이다.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중 예산편성 부합 실적]

(단위: 백만원, %)

2022년 예산편성		2022년 사업실적		
내역	예산액 (A)	내역	집행액 (B)	집행률 (B/A)
· 공연영상 창·제작 지원 - 4,500만원×5개분야×4개작품	900	· 공연영상 창·제작 지원 - 4,480만원(평균)×5건 ¹⁾	224	24.9
· 공연영상 유통·수급 - 500만원×5개분야×2개작품	50	· 공연영상 유통서비스 지원 - 3,500만원(평균)×3건 ²⁾	105	210.0
· 공연영상화 교육·컨설팅 - 250만원×5개분야×4개작품	50	· 부가상품 개발 관련 교육 * 컨설팅 미실시	1	2.0
합계	1,000	합계	330	33.0

주: 1) 실감콘텐츠 영상을 활용한 다국어 자막공연 영상제작 등 5건

2) 공연영상 유통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등 3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외의 예산은 공연영상 이외 제작 지원 4억 2,100만원, 공연영상 이외 유통 서비스 지원 9,000만원 등에 집행되었다.⁷⁾

이와 같이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 중 33.0%인 3억 3,000만원만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편성 내역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에서 사전 검토 미흡 및 사업 지연으로 교육은 축소 운영하고 컨설팅은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획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에서 전문 운영사를 선정하여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운영사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컨설팅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전문 운영사 용역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에 비해 미흡하게 수행되었다.

먼저 교육은 전문 운영사 용역 수행시, 2022년 9~10월 중 약 3회에 걸쳐 회당 120분 이내(총 360분 이내)로 예술 콘텐츠 사업화에 필요한 법률, 저작권 등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2023년 2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날에 선정기업의 결과 발표를 전·후로 70분 동안 축소 운영되었다.⁸⁾

7)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중 예산편성 부합 이외 실적]

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액
공연영상 이외 제작 지원: 4,210만원(평균)×10건 ¹⁾	421
공연영상 이외 유통서비스 지원: 4,500만원(평균)×2건 ²⁾	90
결과공유회 운영(교육 제외)	43
예술 IP 기반 부가사업 사례 조사	25
자문회의 등 운영비	16
합계	595

주: 1) 디지털상품권 판매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10건

2) 실시간 그림교육 콘텐츠 판매 플랫폼 등 2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컨설팅은 전문 운영사 용역 수행시, 2022년 9~11월 중 선정기업 당 1~3회(총 40회 내외)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교육 및 컨설팅 비교]

구분	전문 운영사 용역	자체 운영
교육	· 시기: 2022.9.~10. · 대상: 선정기업 등 · 횟수 및 시간: 3회 내외, 회당 120분 이내 * 센터 직접 운영 사전교육 제외 · 내용: 예술 콘텐츠 사업화에 필요한 법률, 저작권 등	· 시기: 2023.2. · 대상: 선정기업 등 · 횟수 및 시간: 1회, 70분 * 센터 직접 운영 사전교육 제외 · 내용: 예술 IP 활용 부가상품 및 서비스 해외사례, 기업 브랜딩 및 홍보, 지식재산권
컨설팅	· 시기: 2022.9.~11. · 대상: 선정기업 20개사 · 횟수: 선정기업 당 1~3회, 총 40회 내외	* 미 실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컨설팅 등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행할 전문 운영사 선정 용역 공고를 2022년 8월말에 게시하고 9월에 입찰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3회 유찰되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하지 못하였다.⁹⁾

동 사업의 용역 공고가 늦어진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월부터 사업 기획 및 운영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수행 가능 기관을 찾기 어려운 용역을 계획하는 등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8)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 선정기업 결과공유회 일정(2023.2.16.)]

구분	일시	주요내용
오프닝	14:00~14:05	· 개회 및 행사 안내
교육1	14:05~14:15(10분)	· 예술 IP 활용 부가상품 및 서비스 해외사례(장애파트너스)
교육2	14:15~14:45(30분)	· 기업 브랜딩 및 홍보의 중요성(페이스북코리아)
선정기업 발표1	14:45~15:45	· 9개 기업(기업 당 약5분씩)
선정기업 발표2	16:00~17:00	· 8개 기업(기업 당 약5분씩)
교육3	17:00~17:30(30분)	· 지식재산권의 이해(특허법인 이오)
휴식 및 네트워킹	17:30~17:50	· 휴식 및 기업간 네트워킹
시상 및 마무리	17:50~18:00	· 시상 및 폐회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9) [1회] 2022.9.13.~9.15. 입찰(중소기업) 결과: 무응찰,
 [2회] 2022.9.30.~10.5. 입찰(중기업 확대) 결과: 부적격(기술점수 미달),
 [3회] 2022.10.26.~10.28. 입찰(일반기업 확대) 결과: 무응찰

이와 같이 2022년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 유통 지원 사업의 교육·컨설팅 등은 사업 기획 및 운영 관련 검토 등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고 수행 기관을 찾기 어려운 용역으로 계획되어, 교육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컨설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획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¹⁾은 관광숙박시설 경쟁력 강화, 주변 관광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327억 5,900만원 중 87.5%인 28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중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은 2022년도 계획현액 44억 7,700만원의 19.6%인 8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36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2022년도 계획현액 8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전용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32,431	32,431	328	-	32,759	28,678	87.5	184	3,897	26,156
안전민박 활성화	4,477	4,477	-	-	4,477	877	19.6	-	3,600	877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8,000	8,000	-	-	8,000	8,000	100.0	-	-	6,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0

2-1.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의 적정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은 안전한 민박 기반 조성을 통해 민박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합법·안전 민박업소 홍보 및 불법 민박업소 근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의 2022년 계획액은 안전민박 기반조성 2억 7,000만원, 안전민박 교육·홍보 6억 700만원,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36억원 등 총 44억 7,700만원이며,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되었다.

[2022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안전한 민박 기반 조성을 통해 민박업 건전성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합법·안전 민박업소 홍보 및 불법 민박업소 근절 캠페인을 통한 이용자 안전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
사업기간	· 2022년(단년도 계속)
사업규모	· 44억 7,700만원 - 안전민박 기반조성 2억 7,000만원 · 안전민박 홈페이지 운영 및 합법업소 DB구축 1억 4,000만원 · 온라인모니터링 조사 및 제도개선 등 연구 1억 3,000만원 - 안전민박 교육·홍보 6억 700만원 ·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및 정보제공 1억 5,000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활용 4억 5,700만원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36억원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2022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에서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23.0%로 저조하였고 2022년 계획액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액 44억 7,700만원 중 19.6%인 8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원은 불용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45억 3,100만원 중 47.1%인 2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3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계획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실집행 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4,477	877	0	3,600	19.6	877	3,654	4,531	2,133	58	2,340	47.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 및 보조사업자의 집행 실적이 모두 저조한 사유는 안전민박 활성화 내역 사업 중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세부내역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의 편성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에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을 논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은 도심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공유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²⁾)을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계 부처, 기관, 숙박업계 등의 합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해,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이 편성되었다.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에서 지원대상은 숙박업 중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이었다.

그러나 한걸음 모텔 후속 민관협의체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의무³⁾가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숙박업인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⁴⁾

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타부처 소관 숙박업 관련 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⁵⁾에 대해 의견수렴 및 조율 절차를 거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숙박업중앙회와의 추가협의를 따라 지원항목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단일 항목에서 소방 관련 물품도 선택할 수 있는 2개 항목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지원 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을 2021~2022년 2개년으로 계획하여, 2021년에 1차 사업으로 600㎡ 이상 업소를 지원하고 2022년에 2차 사업으로 600㎡ 미만 업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차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1차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2021년도 계획액 36억원으로 1차 사업 지원금 3억 8,061만원, 2차 사업 지원금 7억 3,803만원, 사업 관련 운영비 1억 9,012만원 등 총 13억 876만원(2021년 계획액 36억원의 36.4%)을 집행하였다.

4) [숙박업종 소관별 분류]

소관	숙박업종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 숙박업 -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산림청	· 자연휴양림(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대한숙박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관련 협회이다.

[2021년 편성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 추진 내역]

구분	당초	변경	
		1차 사업	2차 사업
지원 대상	· 일반·생활 숙박업 3만 여개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3,500여개소	· 일반·생활 숙박업 600㎡ 이상 업소 1만 3,000여개소	· 일반·생활 숙박업 600㎡ 미만 업소 1만 6,000여개소
지원 항목	· 소방작동기능점검 1회 비용의 80% (자부담 20%, 지원상한액 30만원)	· 아래 사항 중 택 1 - 소방작동기능점검 1회 비용의 80% (자부담 20%, 지원상한액 30만원) - 소방 관련 물품(상한액 15만원)	· 소방 관련 물품 (상한액 15만원)
사업 기간	· 2021.10.~2022.3.	· 2021.12.~2022.8.	· 2022.8.~2022.12.
지원 실적	-	3억 8,061만원, 1,521개소	7억 3,803만원, 5,150개소
	-	11억 1,864만원, 6,671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결과를 대상 지원과 예산 집행 내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대상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600㎡ 이상 업소 1만 3,000여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1.7%인 1,521개소를 지원하였고, 600㎡ 미만 업소 1만 6,000여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2.2%인 5,150개소를 지원하여, 전체 지원율은 2만 9,000여개소 중 6,671개소인 23.0%로 저조하다.

[2021~2022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 대상별 지원 내역]

(단위: 개소, %)

구분	계획	지원	지원율
600㎡ 이상	13,000	1,521	11.7
600㎡ 미만	16,000	5,150	32.2
합계	29,000	6,671	23.0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대상을 600㎡ 이상 1만 3,000여개소, 600㎡ 미만 1만 6,000여개소로 파악하였으나, 편의상 각각 1만 3,000개소, 1만 6,000개소로 표기하여 산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계획액 36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에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으나 2022년에도 전년도 이월액 35억 8,500만원의 36.1%인 12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2021년도 계획액의 이월 집행으로 2022년도 계획액 36억원은 전액 불용되었다.

[2021~2022년 편성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계획액 (A)	집행액 (B)	이월 액	불용 액	집행률 (B/A)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등 (b)	교부 현액 (c= a+b)	실집 행액 (d)	이월 액	불용 액	실집 행률 (d/c)
2021	3,600	3,600	0	0	100.0	3,600	-	3,600	15	3,585	0	0.4
2022	3,600	0	0	3,600	0.0	0	3,585	3,585	1,294	0	2,291	36.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2022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에서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23.0%로 저조하였고, 집행 실적도 2021년에는 교부현액의 0.4%, 2022년에는 교부현액의 36.1%로 저조하며 2022년 계획액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사업은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추진되었으나 타부처 소관 업종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내용과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 법령상 소관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 온라인모니터링 조사 및 제도개선 등 연구 사업에서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2건의 연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용역은 한정된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도시민박업 법제화 방안’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인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용역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온라인모니터링 조사 및 제도개선 등 연구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동 사업에서 2건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022년 온라인모니터링 조사 및 제도개선 등 연구 사업 수행 용역]

(단위: 백만원)

용역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계약 유형	수의계약사유	계약액	집행액	
						편성 연도	이월
지자체 대상 민박업 등록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2.9.5. ~11.30.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44	0
도시민박업 법제화 방안	'22.12.19. ~23.6.30.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4)	55	0	5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예산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 2022년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문화체육관광부, 2022. 2. 18.)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사업 집행]

-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⁷⁾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5항⁸⁾에 따라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학술연구’ 용역이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등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⁹⁾ 동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한 후 적합한 연구 수행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대상 민박업 등록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시민박업 법제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한정된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동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계약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같은 용역을 특수한 지식 등을 요구하는 용역을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기보다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22년에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 중 ‘도시민박업 법제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숙박중개업체 관련 법률 및 제도, 유사 민박업종 관련 제도 검토, 도시민박업 도입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로 관광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것이다.

[2022년 도시민박업 법제화 방안 용역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 도시민박업 법제화 방안 연구
사업기간	· 2022.12.~2023.6.
계약액	· 5,500만원
주요내용	· 온라인숙박중개업체 관련 법률 및 제도 - 글로벌 플랫폼 등록업종 및 세금납부 - 전자상거래법 등 글로벌 중개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법률 - 일본 주택숙박사업법 검토 · 유사 민박업종(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업 등) 관련 제도 검토 · 도시민박업 도입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¹⁰⁾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¹¹⁾이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관광정책국)

⑤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법」에 공사의 사업으로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이 규정¹²⁾되어 있고, 민박업 관련 사업이 안전민박 활성화 사업에 편성되어 동 사업에서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웰니스관광 사업의 경우 의료관광 육성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세부사업(의료 및 웰니스관광 육성)이 아닌 정책개발 관련 세부사업(관광자원 기반조성)에서 법제화 등의 용역이 추진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관련 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웰니스관광 관련 법령 등 연구용역 및 보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용역		보조사업		
세부사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 4161-311)		의료 및 웰니스관광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4463-306)		
세부내역사업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의료관광 육성	웰니스관광 육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세목	일반연구비	일반수용비등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계획액	650	242	5,501	4,050	2,400
연구용역	웰니스관광 정책분석 및 법제화 방안 연구 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2-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지자체에 대해 1차 연도에는 기획, 설계비, 공사비 등 9억원, 2차 연도에는 공사비 등 30억원이 지원된다.

2022년에는 2022년에 선정된 지자체(남원, 하동)에 대한 1차 연도 사업비 18억원, 2021년에 선정된 지자체(봉화, 해남)에 대한 2차 연도 사업비 60억원, 한국관광공사 사업 지원비 2억원 등 총 8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지역 내 유희시설을 친환경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규모 및 수행방식	· 80억원 - 2022년 선정 지자체(남원, 하동) 1차 연도 사업비: 9억원×2개소=18억원 - 2021년 선정 지자체(봉화, 해남) 2차 연도 사업비: 30억원×2개소=6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자체 선발, 심사 지원 등: 2억원 *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 선정 지자체 당 지원액: 총 39억원 - 1차 연도 사업비(기획, 설계, 공사 등): 9억원 - 2차 연도 사업비(공사 등): 3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는 2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관련 교부액 9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는 2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부액 60억원이 전액 이월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신규 선정지인 남원과 하동에 대해 3월과 5월에 각각 9억 원씩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남원에서는 교부액의 36.7%인 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하동에서는 교부액이 전액 불용되었다.

2차 연도 사업 수행지인 봉화와 해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과 12월에 각각 30억원씩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두 지자체는 해당 사업비를 전액 이월 하였다.

한국관광공사 사업비는 사업 수행 지자체 선발을 위한 공모 지원과 숙박시설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에 2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1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9,500만원은 이월되었다.

[2022년 편성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교부액 (A)	교부일	실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B/A)
1차 연도	남원	900	900	2022.3.29	330	570	0	36.7
	하동	900	900	2022.5.19.	0	0	900	0.0
2차 연도	봉화	3,000	3,000	2022.11.30	0	3,000	0	0.0
	해남	3,000	3,000	2022.12.6.	0	3,000	0	0.0
한국관광공사		200	200	2022.4.12.	105	95	0	52.5
합계		8,000	8,000		435	6,665	900	5.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각 지자체의 추진 경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사업 수행지인 남원은 2023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0월에 BF인증¹³⁾ 위해 설계를 중단하여 2023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동은 2022년 2월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나, 12월 대규모 군비 투자사업 축소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였고 2023년 6월까지 교부금을 반납할 예정이다.

2차 연도 사업 수행지인 봉화와 해남은 2021년에 최초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한 후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의 절차를 추진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두 지자체 중 봉화는 2022년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설계가 중단되어 2023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남은 2023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증액에 따른 투자 재심사로 설계가 중단되었다.

[2022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추진 내용
1차 연도	남원	· '22.1.~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기획 심의 · '22.5.~6. 도 원가심사, 시 일상감사, 도 재정투자심사 등 · '22.7.14.~'23.1.7. 설계 예정이었으나, '22.10.31. BF인증 위해 설계 중단 · '23.3. 위탁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완료 · '23.7. 설계 완료, '23.9. 착공 예정
	하동	· '22.12.16. 사업포기 · '23.6.30.까지 교부금 반납 예정
2차 연도	봉화	· '22.1. 안전등급 심사 · '22.2.~4. 계약 심사 승인 · '22.4.~5. 설계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22.6.30.~12.30.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2.10.31. 군관리계획 변경(자연취락지구 → 해제)을 위해 설계 중단 · '22.10. 공사비 부족으로 예산 증액 확정(66억원 → 94억원) · '23.6. 군관리계획 변경, '23.7. 설계 완료, '23.8. 착공 예정 · '23.4.24.~5.10. 위탁운영사 모집 공고

13) BF(Barrier free)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추진 내용
	해남	· '22.6.~7. 설계 공모 · '22.9.16.~'23.4.13.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 공사비(80억원) 대비 실시설계 총 공사비(115억원)가 높게 책정되어 전남도 투자 재심사 예정('23.4.12. 설계 중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1년에 선정된 봉화와 해남은 2022년에도 설계를 완료하지 못하여 2021년에 교부된 설계비 등을 2022년말 누적 기준으로 각각 29.9%, 35.8% 집행하였고, 2022년에 교부된 공사비 등은 전액 이월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 교부된 2021년 숙박시설 홍보, 위탁운영사 선발 예산도 지자체 사업 지연으로 2022년말 누적 기준 60.9%가 집행되었다.

[2021년 편성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재)교부액 (A)	2021년		2022년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실집행액 (C)	누적 실집행률 ((B+C)/A)
봉화	890	890	0	0.0	266	29.9
해남	890	890	19	2.1	300	35.8
한국관광공사	220	220	33	15.0	101	60.9
합계	2,000	2,000	52	2.6	667	36.0

주: 2021년 계획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사업 지원비를 제외한 지자체 간접보조금을 지자체에 재교부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2021년에 최초로 선정된 2개 지자체가 모두 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대상 지자체를 다시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2년에도 신규로 선정된 2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관련 교부액 9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에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022년에도 설계 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2년 교부액 60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의 투자실적 제고 필요

가. 현 황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¹⁾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를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1,38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138,800	138,800	-	138,800	138,800	100.0	-	190,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 출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이를 민간 벤처캐피탈에 출자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에서 민간투자자 유치 및 펀드(자펀드) 결성을 통해 콘텐츠 기업 등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 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40억원 증가한 1,388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2018~2023년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540	630	1,130	1,148	1,388	1,900
전년 대비 증감	10	90	500	18	240	5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으로 결성된 자펀드의 2022년 투자실적은 결성액 2,488억원의 9.8% 수준으로, 2020년 및 2021년에 비해 저조하고 2022년 이전에 결성된 자펀드 중에도 투자실적이 저조한 펀드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투자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예산으로 결성된 자펀드의 결성 첫 해 투자실적(결성액 대비 투자액 비율)은 9.8%로 2020년 22.8%, 2021년 17.0%에 비해 저조하고, 2023년 4월 누적 기준으로도 22.7%인 566억원 수준이다.

[2018~2022년 결성 자펀드의 연도별 투자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결성액 (A)	출자액	투자액							투자여력 (A-B)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B)	
2018	2,416	1,320	58 (2.4)	701 (29.0)	525 (21.7)	544 (22.5)	343 (14.2)	45 (1.9)	2,216 (91.7)	200
2019	1,968	1,080	-	98 (5.0)	425 (21.6)	435 (22.1)	354 (18.0)	75 (3.8)	1,388 (70.5)	580
2020	2,438	1,460	-	-	557 (22.8)	626 (25.7)	355 (14.5)	99 (4.1)	1,636 (67.1)	802
2021	2,548	1,440	-	-	-	433 (17.0)	806 (31.6)	206 (8.1)	1,445 (56.7)	1,104
2022	2,488	1,641	-	-	-	-	243 (9.8)	323 (13.0)	566 (22.7)	1,922

주: 1. 2023년은 4월말 기준임

2. 투자액은 각 연도별 신규 투자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결성 자펀드의 투자실적을 2023년 4월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드라마 펀드는 2022년 8월에 결성되었으나 결성액의 3.0%가 투자되었고, 모험투자 펀드 중 2022년 6월에 결성된 2개 펀드는 각각 결성액의 20.8%, 9.0%가 투자되었으며, 10월에 결성된 1개 펀드도 결성액의 12.1%가 투자되어, 전체 투자실적 22.7%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결성 자펀드 투자실적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결성일	결성액 (A)	투자액			투자여력 (A-B)
			2022	2023	합계(B)	
드라마	2022.8.23.	400	0	12	12	388
			(0.0)	(3.0)	(3.0)	
모험투자1	2022.6.16.	200	39	3	42	159
			(19.3)	(1.5)	(20.8)	
모험투자2	2022.6.23.	123	9	2	11	112
			(7.3)	(1.6)	(9.0)	
모험투자3	2022.7.1.	100	33	3	36	64
			(33.0)	(3.0)	(36.0)	
모험투자4	2022.9.2.	250	25	47	72	178
			(10.0)	(18.8)	(28.8)	
모험투자5	2022.9.16.	100	29	17	46	55
			(28.5)	(17.0)	(45.5)	
모험투자6	2022.9.27.	1,015	95	217	312	703
			(9.4)	(21.4)	(30.7)	
모험투자7	2022.10.5.	300	14	22	36	264
			(4.7)	(7.3)	(12.1)	
합계		2,488	243 (9.8)	323 (13.0)	566 (22.7)	1,922

주: 1. 2023년은 4월말 기준임

2. 투자액은 각 연도별 신규 투자액임

3. 모험투자 펀드는 결성일 순서로 정렬하였으며, 각각 다른 펀드명으로 구분되나 표기 편의상 연번으로 구분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고금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벤처업계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전반적인 투자집행이 보수적인 상황이며, 이는 벤처펀드 시장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라마 펀드 등은 결성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운영된 실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신규투자 금액은 6조 7,640 억원으로 전년 7조 6,802억원 대비 11.9% 감소하였다.

그러나 문화계정의 투자 대상인 게임 분야는 전년 대비 31.4% 감소(2021년 2,355억원 → 2022년 1,615억원)한 반면, 영상·공연·음반 분야는 전년 대비 10.6% 증가(2021년 4,161억원 → 2022년 4,604억원)하였으므로, 일률적으로 투자상황이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투자실적이 저조한 드라마 펀드와 모험투자1, 2 펀드 보다 늦게 결성 (2022년 9월)되었음에도 투자실적이 보다 높은 펀드(모험투자4, 5, 6)가 있으므로, 투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펀드 운용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원)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ICT제조	1,493	1,870	3,523	2,987	707
ICT서비스	10,446	10,764	24,283	23,518	1,986
전기·기계·장비	2,036	2,738	5,172	4,108	832
화학·소재	1,211	1,765	2,297	2,871	634
바이오·의료	11,033	11,970	16,770	11,058	1,520
게임	1,192	1,249	2,355	1,615	196
영상·공연·음반	3,703	2,902	4,161	4,604	1,102
유통·서비스	8,145	7,242	14,548	13,126	1,028
기타	3,518	2,546	3,693	3,753	808
합계	42,777	43,045	76,802	67,640	8,815

주: 2023년은 3월 기준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3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3.4.

투자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2022년 이전에 결성된 자펀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이전에 결성된 일부 자펀드는 투자실적이 같은 해 결성된 전체 자펀드의 투자실적에 못 미치면서, 결성액 대비 연도별 신규 투자액 비율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2023년 4월 누적 기준으로, 2019년 지역콘텐츠 펀드는 2019년 전체 결성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70.5%인 것에 비해 24.4%로 저조하고 2022~2023년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펀드매니저 퇴사 등으로 2023년부터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조합운용 방안에 대한 조합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펀드는 2022년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산운용이 중단된 펀드를 조속한 기한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결성 펀드의 투자실적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결성일	결성액 (A)	투자액						투자여력 (A-B)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B)	
게임	'19.12.30.	300	0 (0.0)	98 (32.5)	68 (22.6)	106 (35.4)	0 (0.0)	272 (90.5)	28
공연	'19.07.18.	108	23 (21.3)	26 (24.1)	21 (19.4)	23 (21.3)	0 (0.0)	93 (86.1)	15
공연	'19.07.30.	220	16 (7.3)	44 (19.9)	59 (27.0)	23 (10.5)	33 (14.8)	175 (79.6)	45
지역콘텐츠	'20.01.29.	275	0 (0.0)	50 (18.2)	17 (6.2)	0 (0.0)	0 (0.0)	67 (24.4)	208
청년콘텐츠	'19.07.31.	115	40 (34.8)	29 (24.8)	28 (24.3)	5 (4.4)	0 (0.0)	101 (88.2)	14
청년콘텐츠	'19.11.22.	150	0 (0.0)	25 (16.7)	43 (28.3)	40 (26.7)	0 (0.0)	108 (71.7)	42
청년콘텐츠	'19.12.06.	190	7 (3.4)	31 (16.1)	19 (10.3)	12 (6.3)	38 (19.7)	106 (55.8)	84
출판	'19.11.04.	110	12 (10.9)	23 (20.6)	20 (18.2)	45 (40.9)	0 (0.0)	100 (90.7)	10
콘텐츠 민간제안	'19.11.25.	300	0 (0.0)	70 (23.3)	73 (24.4)	79 (26.4)	5 (1.7)	227 (75.8)	73
콘텐츠 민간제안	'19.11.29.	200	0 (0.0)	31 (15.5)	87 (43.5)	21 (10.5)	0 (0.0)	139 (69.5)	61
합계		1,968	98 (5.0)	425 (21.6)	435 (22.1)	354 (18.0)	75 (3.8)	1,388 (70.5)	580

주: 1. 2023년은 4월말 기준임

2. 투자액은 각 연도별 신규 투자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2020년 5G 기술융합 콘텐츠, 콘텐츠 IP, 해외연계 펀드는 2020년 전체 결성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67.1%인 것에 비해 각각 55.9%, 49.6%, 55.9%로 저조하다. 특히 콘텐츠 IP 펀드의 투자실적은 2021년에 20.4%였으나 2022년에는 7.7%로 하락하였다.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개 자펀드는 같은 해에 결성된 다른 자펀드에 비해 투자실적이 낮고 신규 투자실적도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5G 기술융합 콘텐츠 등 3개 펀드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여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결성 펀드의 투자실적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결성일	결성액 (A)	투자액					투자여력 (A-B)
			2020	2021	2022	2023	합계(B)	
5G 기술융합 콘텐츠	'20.08.10.	400	91 (22.8)	66 (16.5)	64 (15.9)	3 (0.8)	224 (55.9)	176
게임	'20.07.29.	300	87 (29.0)	167 (55.6)	2 (0.7)	0 (0.0)	256 (85.3)	44
모험투자	'20.05.26.	200	48 (23.8)	58 (29.0)	71 (35.5)	10 (5.0)	187 (93.3)	13
모험투자	'20.06.02.	300	94 (31.3)	17 (5.7)	32 (10.7)	20 (6.7)	163 (54.3)	137
모험투자	'20.07.30.	215	44 (20.3)	41 (18.8)	44 (20.5)	9 (4.2)	137 (63.8)	78
모험투자	'20.10.25.	159	26 (16.4)	96 (60.3)	13 (8.2)	0 (0.0)	135 (84.9)	24
애니/캐릭터	'20.08.07.	117	8 (6.9)	6 (4.7)	52 (44.2)	24 (20.6)	89 (76.4)	27
애니/캐릭터	'20.08.10.	150	35 (23.3)	10 (6.7)	29 (19.1)	10 (6.7)	84 (55.8)	66
콘텐츠IP	'20.11.09.	260	53 (20.4)	53 (20.4)	20 (7.7)	3 (1.2)	129 (49.6)	131
해외연계	'20.08.05.	186	42 (22.6)	83 (44.6)	9 (4.8)	15 (8.1)	149 (80.1)	37
해외연계	'20.11.04.	152	30 (19.7)	30 (19.7)	20 (13.2)	5 (3.3)	85 (55.9)	67
합계		2,438	557 (22.8)	626 (25.7)	355 (14.5)	99 (4.1)	1,636 (67.1)	802

주: 1. 2023년은 4월말 기준임

2. 투자액은 각 연도별 신규 투자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3년에 결성이 계획된 K-콘텐츠 IP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으로, 투자실적이 저조한 2020년 콘텐츠 IP 펀드와 유사하다. K-콘텐츠 IP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는 IP 소유·유통·배급 중소·벤처기업이 포함되어 콘텐츠 IP 펀드 보다 확대되었으나 결성목표액도 콘텐츠 IP 펀드 결성액(260억원)에 비해 증가(1,500억원)하였으므로, 신규 펀드의 투자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IP 펀드와 K-콘텐츠 IP 펀드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콘텐츠 IP 펀드(운용 중)							K-콘텐츠 IP 펀드(2023년 신규)	
결성 시기	투자 기간	출자액	결성액 (A)	투자액 (B)	투자율 (B/A)	투자여력 (A-B)	출자액	결성목표액
2020.11.	4년	150	260	129	49.6	131	900	1,500

주: 1. 운용 중 펀드의 현황은 2023년 4월말 기준임

2. 투자여력에는 조합운용비용(결성액의 약 15%)이 포함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콘텐츠 IP 펀드와 K-콘텐츠 IP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비교]

콘텐츠 IP 펀드(운용 중)	K-콘텐츠 IP 펀드(2023년 신규)
· <u>문화콘텐츠 원천 IP(소설, 웹툰 등 타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 콘텐츠 등) 및 저작권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u>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u>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가 단독 보유하거나 유통사와 공동 보유하는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u>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결성목표액의 60% 이상 투자 -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소유(확보 포함)한 콘텐츠 중소·벤처기업 -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가 단독 보유하거나 유통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유통·배급하는 중소·벤처기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2년 결성 펀드의 2022년 투자실적은 결성액 2,488억원의 9.8%인 243억원 수준이고, 2023년 4월 누적 기준 투자실적도 22.7%인 566억원으로 저조하다.

그리고 2022년 이전에 결성된 펀드 중에도 투자실적이 같은 해 결성된 전체 자펀드의 투자실적에 못 미치면서, 결성액 대비 연도별 신규 투자액 비율이 낮아지는 펀드가 있으며, 이 중 일부 펀드는 2023년에 투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펀드 투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하여 청와대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억 5,000만원 중 6.7%인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미술진흥기반구축	31,051	31,051	1,654	270	32,975	19,075	57.8	12,165	1,735	35,620
미술창작 및 향유 지원	4,255	4,255	-	420	4,675	4,162	89.0	-	513	8,627
청와대 가을 특별전	-	-	-	550	550	37	6.7	-	513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 예산 5억 5,000만원을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으로 확보하였으나 전시를 추진하지 않아 5억 1,300만원을 불용하고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은 청와대 개방(2022. 5. 10.)과 관련하여, 청와대 소장 미술품 30여 점을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8월, 동 사업 예산 5억 5,000만원을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으로 확보하였다.²⁾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635-311

[2022년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감			전용 증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예술창작활동 지원	민간 경상보조	△120	미술진흥기반 구축	일반수용비	137.5
				공공요금 및 제세	9
미술진흥기반 구축	민간 경상보조	△280		임차료	24.6
				일반용역비	371.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		국내여비	1.4
				사업추진비	6
합계		△550	합계		5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 준비를 위해 2022년 8월 홍보영상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자문회의에서 청와대 소장품의 작품선정, 공개여부 및 순서, 전시 공간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작품 관련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여 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반영하여 전시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에서 전시를 추진하지 않았으나, 자문회의 사례비 등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홍보영상 제작 일반용역비 1,900만원 등 3,7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용역비로 제작된 영상 2편은 특정 전시에 대한 홍보 영상 1편, 청와대 소장 작품 및 작가 소개 영상 1편으로, 2022년에 전시를 추진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였다.³⁾

2)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승인 요청(문화체육관광부, 2022. 7. 14.)

·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승인 통보(기획재정부, 2022. 8. 3.)

3)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소장 작품 및 작가 소개 영상에 포함된 작품을 2023년 하반기에 전시하여 해당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청와대 가을 특별전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내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자문회의 사례비, 소모품 구입비, 진행비 등	137.5	15	122.5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및 자료 발송비, 보험료	9	0	9
임차료	전시용 영상 및 전자장비 대여 및 설치	24.6	1	23.6
일반용역비	전시 홍보영상 제작, 외부광고, 사진촬영, 전시실 조성, 전기조명 설치, 작품 운송·설치·철수, 전시·작품관리원 운영 등	371.5	19	352.5
국내여비	업무협의 관련 출장	1.4	1	0.4
사업추진비	업무협의 관련 간담회	6	1	5
합계		550	37	5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 제46조⁴⁾는 예산의 승인 전용시 유사성, 시급성, 필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을 전용하기 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을 전용한 후 해당 예산으로 2022년에 활용할 수 없는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수행하였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전용으로 확보한 예산의 93.3%를 불용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용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 관리 철저 및 실적 제고 필요

가. 현황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¹⁾은 공유저작물²⁾을 가공하거나 저작물을 수집하여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A)	(B)	(B/A)	이월액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11,048	11,048	-	11,048	11,048	100.0	-	-	11,049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5,575	5,575	-	5,575	5,575	100.0	-	-	5,635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2,375	2,375	-	2,375	2,375	100.0	-	-	2,335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1,000	1,000	-	1,000	1,000	100.0	-	-	96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되었다.

이 중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7억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련 용역 계약으로 수행하였고,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3억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모로 선정한 기업에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간접보조사업으로 수행하였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333-301

2) 공유저작물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의미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 <https://gongu.copyright.or.kr> ‘공유저작물 안내’ 참고)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공유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저작물을 수집하여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원천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도모
사업규모	· 10억원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7억원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3억원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과 합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일부 용역은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확보와 연관성이 저조하므로, 용역 결과물에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관련 성과를 확인하는 등 동 사업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 파악을 통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예산 10억원을 보조사업자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액 교부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부액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 기업인 간접보조사업자는 재교부액 3억원 중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 (재교부)액	재교부액	실집행액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700	700	700	700	-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300	300	300	300	300	2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에서 인공지능 원천 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예산 7억원은 다른 세부내역사업과 예산이 합산되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³⁾

용역계약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예산의 집행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집행액 11억 8,900만원의 58.9%를 차지한다.

[2022년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계약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계약명	인공지능 사업 집행액 ¹⁾	기타 사업 집행액 ²⁾	합계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300 (74.1)	105 (25.9)	405 (100.0)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145 (59.3)	99 (40.7)	244 (100.0)
공유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185 (50.8)	180 (49.2)	365 (100.0)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70 (39.9)	106 (60.1)	176 (100.0)
합계	700 (58.9)	489 (41.1)	1,189 (100.0)

주: 1)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집행액임

2)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중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 집행액임

1. 괄호 안은 각 계약액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2년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2,375	2,317
① 공유저작물 발굴 및 권리정보 구축	423	511
②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200	129
③ 공유저작물 포털 개선 및 유지운영	200	155
④ 공유저작물 창작 및 체험관 운영	300	270
⑤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사업	132	148
⑥ 공유저작물 보유기관 및 창작플랫폼	120	106
⑦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1,000	998

주: ⑦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음영 표기된 4개 사업(①, ②, ③, ⑥)과 예산이 합산되어 용역계약이 체결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각 용역계약의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관련 내용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저작물 보물찾기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관련 내용이 없다.

[2022년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계약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디지털화 등 DB 구축 -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발굴·수집 - 공유저작물 보유기관 대상 자료 수집·연계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및 DB구축(1만건) 등 · 공유저작물 신뢰도 제고 - 공유마당 전체 음악저작물 재분류 및 메타데이터 보강 - 연계기관 공유저작물 분류 및 메타데이터 작성 - 검색조건 적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 등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 지역 특색이 반영된 한국적 공유저작물 발굴 및 수집 · 주제별, 분야별, 시대별 한국적 공유저작물 발굴 및 수집 · 이용자 친화형 공유저작물 발굴 및 수집 · 국민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및 메타데이터 작성 · 홍보물품 제작
공유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 공유저작물 활용 인식제고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 *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공모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원 포함 - 분과(활용, 수집, 창작, 특별)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 * 특별분과에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관련 논의 - 맞춤형·참여형 캠페인 추진 등 · 저작권 기증 활성화·인식제고 홍보 - 저작권 기증 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기증저작물 활용성 확대 지원 - 기증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 공유저작물 참여 및 활용 서비스 개선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발 포함 · 공유마당 이용 편의성 및 관리기능 개선 · 국내·외 공유저작물 서비스 및 창작 플랫폼 연계

주: 주요내용은 각 사업 계약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과 다른 세부내역사업의 예산을 합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기존에 편성된 다른 세부내역사업과 공유저작물의 ‘수집·활용·서비스’라는 공통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및 업체 활용의 효율성과 사업 간의 연관성 및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업무별로 통합하여 용역을 계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공유저작물을 수집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기존 공유저작물이 구축된 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하므로,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계약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계약은 각 용역계약의 제안요청서 상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⁴⁾

그리고 이와 같이 예산을 합산하여 계약하는 것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2022년에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원천데이터의 확보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사업을 신규 편성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예산 등으로 수행된 용역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관련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 파악을 통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에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예산 3억원은,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집행되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저작물 보물찾기’의 경우,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로 활용될 원천저작물 확보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활용 관련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 결과 민간 기업 3곳이 선정되어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로 자율주행 576만개, 상황별 한국어-영어 대화문 100만개, 방송 음성 기반 말뭉치 1만개 등 총 677만개가 확보되었다.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중 나눔 공모 사업 구축 데이터 현황]
(단위: 천개)

구분	내용	데이터
이미지·센서	자율주행	5,760
텍스트	상황별 한국어-영어 대화문	1,000
	방송 음성 기반 말뭉치	10
합계		6,770

주: 2023년 4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모 사업으로 확보된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의 활용⁵⁾실적을 2023년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12월에 9개소에서 활용되었고, 2023년에는 1~4월까지 총 15개소에서 활용되어 매월 2~6개소에서 활용되는 수준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2022년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사업 중 나눔 공모 사업 구축 데이터 활용 실적]
(단위: 개소)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12월	1월	2월	3월	4월	
자율주행	3	1	0	1	0	5
상황별 한국어-영어 대화문	3	1	3	0	2	9
방송 음성 기반 말뭉치	3	0	2	1	4	10
합계	9	2	5	2	6	24

주: 1. 2023년 4월말 기준

2. 단위는 데이터를 신청하는 개소의 수(기관, 개인 포함)이며, 각 개소에서는 데이터 신청시 해당 분야의 구축 데이터 모두를 신청함(예: 자율주행 데이터 신청시 576만개 모두 신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를 확보하였으나 데이터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기관 등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홈페이지(<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가. 현 황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¹⁾은 콘텐츠 저작물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기업(개인 포함, 이하 동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5억 6,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1,428	31,410	-	31,410	31,178	99.3	-	232	33,047	
해외 저작권 보호·협력	6,564	6,564	-	6,564	6,539	99.6	-	25	7,199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1,565	1,565	-	1,565	1,565	100.0	-	-	5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예산은 이용권 지원 11억 4,500만원,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비 4억 2,000만원 등 총 1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행기관과 서비스를 선정한 후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소 10%~최대 50%)을 납부한다. 이후 참여기업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수행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를 발급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후 서비스를 제공한 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서비스 제공 금액의 최대 90%~최소 50%)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참여기업의 서비스 이용 상한액은 1억원(정부지원금 9,000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많아진다.²⁾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콘텐츠 저작물을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기업 또는 개인
지원방식	① 참여기업 선정 ② 양자 협약 체결: 참여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③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서비스 선택 ④ 참여기업의 자부담금(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⑤ 3자 계약 체결: 참여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 수행기관 ⑥ 온라인 포인트 형식의 바우처 발급: 한국저작권보호원 → 참여기업 ⑦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⑧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저작권보호원 → 수행기관
지원규모	· 15억 6,500만원 - 이용권 지원: 11억 4,500만원 -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비 등: 4억 2,000만원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은 실제 수요 보다 과다 편성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은 신규 편성된 2021년(1차 연도)에 교부액 18억 1,500만원 중 10.7%인 1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여 예산이 이월되었으나, 2022년(2차 연도) 누적 실행률도 17.7%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2)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이용권 유형별 지원 비율]

유형	기업 매출액	정부지원율	기업부담률
가형	10억원 이하, 개인	90%	10%
나형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80%	20%
다형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70%	30%
라형	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	40%
마형	100억원 초과	50%	50%

주: 기업 매출액 규모는 최근 3개년 평균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2022년 사업에서도 2022년(1차 연도)에 교부액 15억 6,500만원 중 14.4%인 2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여 예산이 이월되었으나, 2023년(2차 연도) 6월 누적 기준 실효행률도 44.9%로 저조하다.

[2021~2022년 편성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실효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편성연도	교부액 (A)	1차 연도		2차 연도	
		실효행액 (B)	실효행률 (B/A)	실효행액 (C)	누적 실효행률 ((B+C)/A)
2021	1,815	195	10.7	126	17.7
2022	1,565	225	14.4	478	44.9

주: 2023년 6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예산 15억 6,500만원은 이용권 지원 11억 4,500만원,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2억 6,000만원, 운영비 등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 간 금액을 2차례 변경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승인하였다.³⁾

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은 2022년 11월(1차 변경) 시스템 및 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 2억 6,200만원이 이용권 지원비로 변경되고, 사업 기간이 6개월 연장(2022년 1~12월 → 2022년 1월~2023년 6월)되었다. 그리고 2023년 1월(2차 변경)에는 이용권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이용권 지원비 1억 2,200만원이 사업 홍보, 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변경되었다.

2차 변경 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 사업의 2023년 6월말 기준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이용권 지원 36.3%,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97.5%, 운영비 등 79.5%가 집행되어, 이용권 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3) 1차 변경

: 2022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11. 6.), 「2022 한국저작권보호원(해외저작권 보호·협력)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문화체육관광부, 2022. 11. 14.)

· 2차 변경

: 「2022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 운영」 예산집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1. 2.), 「2022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 운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문화체육관광부, 2023. 1. 3.)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집행률 (B/A)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A)	2022	2023	합계 (B)	
이용권 지원	1,145	1,407	1,285	178	288	466	36.3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260	80	80	22	56	78	97.5
운영비 등	160	78	200	25	134	159	79.5
합계	1,565	1,565	1,565	225	478	703	44.9

주: 2023년 6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용권 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 예산은 각 서비스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정부지원을 평균 65%를 기준으로 약 50건씩 편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원내역은 총 19개 기업(개인 포함)⁴⁾에 대해, 건수 기준으로 저작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을 제외한 항목에서 5건 미만으로 지원되거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균단가 기준으로 현지소송에는 2,745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에는 443만원이 지원되어 서비스 항목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원 건수는 항목별 15건 이내로 변경예산 기준 약 50건 보다 낮고, 총 지원액은 4억 6,624만원으로 변경예산액 12억 8,500만원의 36.3% 수준으로 저조하다.

4)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명, 개, 백만원)

구분	개인	기업					합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지원수	4	2	3	2	1	7	19
지원액	49.5	135.0	134.1	20.4	9.4	117.9	466.2

주: 2023년 6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서비스 항목별 변경예산 대비 지원내역]

(단위: 만원, 건)

서비스 항목		변경예산		지원내역	
		평균단가	건수	평균단가	건수
저작권 보호전략 컨설팅	현지 합법유통 시장조사	200	50	2,200	3
	현지 법제조사	130	50	1,168	4
	침해대응 기술 적용방안 검토	130	50	0	0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180	50	1,800	1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저작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300	51	1,188	15
	불법시장조사	325	50	2,400	1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600	50	443	10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150	40	522	8
	현지소송(민·형사, 행정)	600	38	2,745	1
	법적대응 조치	150	41	498	4
합계		128,500		46,624	

주: 2023년 6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은 실제 수요 보다 과다 편성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동 사업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자 협약, 3자 계약 등을 이행하는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및 신규 지원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¹⁾은 스마트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256억원 중 99.9%인 25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스마트관광 활성화	48,971	48,971	-	48,971	48,948	99.9	-	23	33,631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25,600	25,600	-	25,600	25,577	99.9	-	23	8,7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244억원, 스마트관광도시 표준화 체계 5억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추진 7억원 등 총 256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지원비 등 3,000만원을 제외한 255억 7,000만원이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중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에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간접 보조사업(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비 244억원 중 236억원)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19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적용하여 신속·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기간	· 2022. 1. ~ 12. → 2022. 1. ~ 2023. 6.(6개월 연장)
사업규모	· 256억원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244억원 - 스마트관광도시 표준화 체계 5억원 - 스마트관광 활성화 추진 7억원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 공모 지원 관련 3,000만원은 문체부 직접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중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배수 후보지의 계획수립 지원 등 14억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소에 대한 사업 지원 210억원, 2020년과 2021년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한 후속 지원 20억원 등 24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중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 민관협력으로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을 추진하여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사업대상	· 지자체와 민간(기업/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규모	· 244억원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 지원(후보자): 14억원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 지원(선정지 1년차): 210억원(6개소×35억원) - 스마트관광도시 후속지원(선정지 2년차, 3년차): 20억원(4개소×5억원) * 후속지원 4개소: '20년 선정 1개소, '21년 선정 3개소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당 지원액: 총 45억원 - 1년차 35억원, 2년차 5억원, 3년차 5억원 - 국비 50%, 자부담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계획액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의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를 교부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적정 사업비 재교부를 포함한 사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중 지자체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액 236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한국관광공사 74.1%, 지자체 54.6% 수준이며, 특히 선정지 1년차와 2년차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선정지 1년차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청주 등 5개 지자체 대해 교부현액의 85.9%를 재교부하였으나, 각 지자체는 과업심의위원회, 정보화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등 정보화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절차 수행 기간이 소요되고 스마트관광 관련 시설물 착공이 지연되어 20~40%만 집행하였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하동의 계획수립을 위해 5,000만원을 재교부하였고 하동은 동 예산을 집행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지자체에서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어 35억원은 재교부되지 않았다.

선정지 2년차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여수와 대구의 2년차 지원금 5억원을 각각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사업 필수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 문제에 따른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1년차 지원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2년차에도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중 지자체 간접보조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한국관광공사(보조사업자)					지자체(간접보조사업자)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 A+B) ¹⁾	재교 부액 (D)	이월액	실집 행률 (D/C)	전년도 이월액 (E)	재교부 현액 (F= D+E)	집행액 (G)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G/F)
후보지	광주 등	300	-	300	300	0	100.0	0	300	300	0	0	100.0
선정지 (1년차)	청주	3,550	-	3,550	3,050	500	85.9	-	3,050	1,220	1,830	0	40.0
	울산	3,550	-	3,550	3,050	500	85.9	-	3,050	625	2,425	0	20.5
	경주	3,550	-	3,550	3,050	500	85.9	-	3,050	849	2,201	0	27.8
	남원	3,550	-	3,550	3,050	500	85.9	-	3,050	1,024	2,026	0	33.6
	양양	3,550	-	3,550	3,050	500	85.9	-	3,050	720	2,330	0	23.6
	하동	3,550	-	3,550	50	3,500	1.4	-	50	50	0	0	100.0
	소계	21,300	-	21,300	15,300	6,000	71.8	-	15,300	4,488	10,812	0	29.3
선정지 (2년차)	여수	500	0	500	0	500	0.0	3,498	3,498	3,496	0	2	99.9
	대구	500	2,300	2,800	2,300	500	82.1	1,200	3,500	3,122	378	0	89.2
	수원	500	1,100	1,600	1,600	0	100.0	299	1,899	1,530	367	2	80.6
	소계	1,500	3,400	4,900	3,900	1,000	79.6	4,997	8,897	8,148	745	4	91.6
선정지 (3년차)	인천	500	0	500	500	0	100.0	500	1,000	987	0	13	98.7
합계		23,600	3,400	27,000	20,000	7,000	74.1	5,497	25,497	13,923	11,557	17	54.6

주: 1) 부처 계획액(A)이 전액 교부되어, 공사 교부현액(C)은 부처 계획액(A)과 공사의 전년도 이월액(B)을 합한 것으로 기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중 지자체 간접보조사업은 2021년에 1년차 지원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고, 2022년에도 정보화사업 필수 행정절차 이행 등 2021년과 유사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2년 사업비 236억원을 전액 한국관광공사에 교부하여 실집행률은 74.1%로 저조하였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에 재교부한 보조금의 실집행률도 54.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1차 교부금의 사용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²⁾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의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교부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적정 사업비 재교부를 포함한 사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개발된 관광안내 앱은 민간에서 개발된 앱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며 단발적인 사용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발된 앱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은 스마트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결과물의 활용실적을 통해 사업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선정된 인천의 관광안내 앱은 2022년말 누적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는 9.4만건, 다운로드 당 사용건수는 2.8건이고, 2022년말 기준으로 앱을 유지하는 비율은 37.6%이다. 그리고 2021년에 선정된 수원의 관광안내 앱은 2022년말 누적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는 11.3만건, 다운로드 당 사용건수는 3.2건이고, 2022년말 기준으로 앱을 유지하는 비율은 13.2%이다.

두 지자체의 관광안내 앱 활용실적은 민간에서 개발된 앱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³⁾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제휴업체의 등록 수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 결과물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으로 개발된 앱은 선정된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에 한정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단발적인 사용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조성 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⁴⁾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숙박, 교통, 레저 등 여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야놀자 앱의 2022년 12월 한달 동안 신규 다운로드 수는 645만건, 누적 다운로드 수는 1억여건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결과물 활용 현황]

(단위: 건, 명, %)

시작연도	지자체	오픈일	다운로드 수 (A)	사용건수 (B)	회원수 ¹⁾ (C)	유지율 (C/A)	다운로드 당 사용건수 (B/A)
2020	인천	2021. 6. 30.	94,493	267,527	35,516	37.6	2.8
2021	수원	2022. 7. 1.	113,449	363,461	14,972	13.2	3.2

주: 1) 회원수는 2022.12.31. 기준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수임

1. 2022.12.31.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지자체 선정 내역]

(단위: 개소)

선정 연도	선정 수	선정 지자체
2020	1	인천
2021	3	여수, 대구, 수원
2022	6	청주, 울산, 경주, 남원, 양양, 하동
2023	3	용인, 인제, 통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¹⁾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의 지역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역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것으로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332억 3,200만원 중 99.5%인 33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35,431	35,431	151	35,582	35,401	99.5	165	16	44,301
관광거점도시 육성	33,081	33,081	151	33,232	33,051	99.5	165	16	42,3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19년 4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에서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20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제관광도시 부산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전주·목포·안동 등 4곳에 대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2022년도 계획액은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 관광거점도시 310억원, 홍보 및 마케팅 19억원, 컨설팅 2억원 등 총 331억원이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2-318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계획액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내 용	수행방식	계획액
관광 거점 도시	국제관광도시 (부산)	도시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자치단체 경상보조	70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30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전주 ·목포·안동)	도시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자치단체 경상보조	130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80
	소계			310
홍보 및 마케팅 (한국관광공사)		관광거점도시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민간 경상보조	19
컨설팅		관광거점도시 통합 컨설팅 지원	직접	2
합계				3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의 사업비는 국비 2,402억원, 지방비 3,167억원 등 총 5,569억원이며, 각 도시별로 국비는 500억원 이내 지원되고 지방비는 50% 이상 매칭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연차별 사업비(국비 및 지방비)]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비	129	360	310	410	627	566	2,402
지방비	149	425	415	538	803	837	3,167
합계	278	785	725	948	1,430	1,403	5,569

주: 2024~2025년 사업비는 변동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 실적은 교부현액의 54.2%로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한편,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액 변경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사업 시작 연도인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절차 지연, 2021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1년 2월~12월)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사업 추진과 각종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

동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2022년 계획액 기준 93.7%)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의 비중은 2020년 55.8%, 2021년 33.3%, 2022년 54.2% 수준이다.

[2020~2022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경상 보조	2020	3,900	3,900	-	3,900	2,866	921	113	73.5
	2021	25,000	25,000	921	25,921	9,893	15,960	68	38.2
	2022	20,000	20,000	15,960	35,960	23,282	12,495	183	64.7
자본 보조	2020	9,000	9,000	-	9,000	4,335	4,601	64	48.2
	2021	11,000	11,000	4,600	15,600	3,922	11,522	156	25.1
	2022	11,000	11,000	11,522	22,522	8,431	13,815	276	37.4
합계	2020	12,900	12,900	-	12,900	7,201	5,522	177	55.8
	2021	36,000	36,000	5,521	41,521	13,815	27,482	224	33.3
	2022	31,000	31,000	27,482	58,482	31,713	26,310	459	5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집행 실적을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으로 나누어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359억 6,000만원의 64.7%인 232억 8,200만원이 실집행되었다.

특히 전주는 교부현액 73억 7,700만원의 30.0%인 2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액 41억 2,700만원 보다 적은 수준이다.

[2022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교부액 (A)	교부일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부산	7,000	3,500	'22.5.3.	450	7,450	7,250	200	-	97.3
		3,500	'22.10.25.						
강릉	3,250	1,625	'22.4.30.	3,632	6,882	3,654	3,080	148	53.1
		1,625	'22.11.1.						
전주	3,250	1,625	'22.5.4.	4,127	7,377	2,215	5,162	-	30.0
		1,625	'22.10.2.						
목포	3,250	1,625	'22.4.26.	3,456	6,706	4,369	2,302	35	65.2
		1,625	'22.11.2.						
안동	3,250	1,625	'22.4.29.	4,295	7,545	5,794	1,751	-	76.8
		1,625	'22.11.24.						
합계	20,000	20,000		15,960	35,960	23,282	12,495	183	6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별로 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내역과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강릉의 자율주행 관광지 순환차량 운영 사업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에 기간이 소요되었고, 한국관광/야간관광 100선 홍보 사업 등은 사업 계획 수립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전주의 뉴(NEW)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과 공동마케팅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목포의 목포 바다의 노래 공연도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만 추진되었고 관광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또한 안동의 와룡터널 기본구상 및 콘텐츠개발 사업은 관계 기관 업무협약에 기간이 소요되었고, 마을경관 디자인 사업과 홍보 마케팅 사업은 내부 검토, 사업 추진방향 수립 등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225억 2,200만원의 37.4%인 84억 3,100만원이 실집행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보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특히 부산, 전주의 실집행률은 각각 29.6%, 27.5%로 20%대이며, 5개 지자체 모두 전년도 이월액(115억 2,200만원) 보다 실집행액(84억 3,100만원)이 적다.

[2022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교부액 (A)	교부일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부산	3,000	1,500	'22.5.3.	2,270	5,270	1,561	3,512	197	29.6
		1,500	'22.10.25.						
강릉	2,000	1,000	'22.4.30.	2,162	4,162	1,495	2,588	79	35.9
		1,000	'22.11.1.						
전주	2,000	1,000	'22.5.4.	2,619	4,619	1,271	3,348	-	27.5
		1,000	'22.10.2.						
목포	2,000	1,000	'22.4.26.	2,000	4,000	1,787	2,213	-	44.7
		1,000	'22.11.2.						
안동	2,000	1,000	'22.4.29.	2,471	4,471	2,317	2,154	-	51.8
		1,000	'22.11.24.						
합계	11,000	11,000		11,522	22,522	8,431	13,815	276	3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별로 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내역과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의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은 해안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험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을숙도 생태관광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 등의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강릉의 경포 환상의 호수 루트 리모델링 사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전통배 복원 및 선착장 조성 사업과 월화거리 야간경관 및 단오분수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설계 기간 등 소요로 착공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전주의 한식콘텐츠 세계화 사업은 타 사업과 위치가 중복되어 대상지가 변경되었고 광역 교통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은 타 사업과 통합 기획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목포의 바다의 노래 무대 정비 및 설치 사업은 상시공연으로 인해 기본설계 용역이 지연되었다.

또한 안동의 탈춤공원 관련 사업은 동일 사업지 내에서 수행되는 타 사업의 선행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통합관광안내소 조성 사업은 건축 부지확보 협의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와 같이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각종 행정 절차 진행에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업 수행 중 변수 발생으로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에 교부된 예산은 사업 추진 지연 및 전년도 이월액 우선 집행으로 일부만 집행되고 2023년으로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54.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를 50%씩 나누어 전액 교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1차 교부금의 집행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²⁾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지자체 내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액 변경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의 적정 계획 수립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¹⁾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²⁾에서 같은 법 제20조의2³⁾ 등에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10억 8,800만원 중 43.9%인 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4,716	4,716	-	4,716	3,352	71.1	-	1,364	4,212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1,088	1,088	-	1,088	478	43.9	-	610	58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1

2)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022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예산은 화재안전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원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8,800만원 등 총 10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 40%가 지원되며, 공공야영장은 지방비 60%, 민간야영장은 지방비 30%, 자부담 30%가 매칭된다.

[2022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개요]

구분	화재안전 시설 지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 * '19~'21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제외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 '20~'21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제외
지원 내용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
지원 규모	· 10억원 -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3,000만원 * 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1,500만원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8,800만원 - 공공야영장: 개소 당 최대 200만원 * 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개소 당 최대 200만원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에서 계획현액의 43.9%를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하였으므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현액 10억 8,800만원의 43.9%인 4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4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현액의 43.9%만 집행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2022회계연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계획 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액 (C)	전년도 이월액 (D)	교부 현액 (E=C+D)	실집 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F/E)
1,088	478	610	43.9	478	14	492	492	0	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은 2019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부칙의 경과조치⁴⁾에 따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 3.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5호타목 및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다목·라목·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르면 소화기 보관함 설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은 2020년 3월까지, 방염천막 기준 준수, 이격거리 확보 등은 2021년 3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구분	별표7 제1호 다목·라목·사목	별표7 제1호 마목·바목
조치 기한	· 2020년 3월 3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9. 3. 4)로부터 1년 이내	· 2021년 3월 3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9. 3. 4)로부터 2년 이내
내용	· 별표 7 제1호다목·라목·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	· 별표 7 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
세부 내용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u>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u>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u>일산화탄소 경보기</u>,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u>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u>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의 지원 실적을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69개소에서 2022년 104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대상 대비 누적 지원 비중도 1,170개소 중 573개소인 49.0%로 저조하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예정)
대상(A) ¹⁾	810	879	990	1,170	1,170
지원	169	154	146	104	82
누적지원(B)	169	323	469	573	655
누적지원비중(B/A)	20.9	36.7	47.4	49.0	56.0

주: 1)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리를 운영하는 야영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상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의 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2019년 53.1%에서 2020년 71.3%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56.2%, 2022년 43.9%로 낮아졌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예정)
계획액(A)	1,947	2,250	1,088	1,088	584
집행액(B)	1,033	1,605	611	478	515
집행률(B/A)	53.1	71.3	56.2	43.9	8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의 지원 실적과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조치를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야영장에서 자체 예산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해 2021년까지 지원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022년부터는 신규 야영장 등록 추이와 재지원대상(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2~3년 경과) 야영장 규모 등 사업의 제도와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의 소관 부처이나, 야영장업 등록과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미준수시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⁵⁾ 그리고 2024년부터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을 안전 기준 미준수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야영시설 안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야영시설 화재 안전 사업의 주체와 야영장 안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¹⁾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 인재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첨단기술 기반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675억 9,600만원 중 96.2%인 650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사업 중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은 2022년도 계획현액 50억 3,000만원의 99.9%인 50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은 2022년도 계획현액 13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66,564	66,564	1,032	67,596	65,037	96.2	1,298	1,261	72,156
지역스포츠 산업 지원	12,682	12,682	-	12,682	12,666	99.9	-	16	11,380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5,030	5,030	-	5,030	5,028	99.9	-	2	5,025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1,300	1,300	-	1,300	1,300	100.0	-	-	1,7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2

8-1.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를 통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문화활동 등이 가능한 지역 내 스포츠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2년 동 사업의 계획액은 50억 3,000만원이며,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50억원이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운영 3,000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2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체육, 문화활동 등이 가능한 지역 내 스포츠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기간	· 2022년(단년도 계속) * 지자체 사업기간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8개월
사업규모 및 수행방식	· 50억 3,000만원 -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5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운영: 3,000만원 * 문체부 직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계획액을 지자체가 선정된 연도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각 지자체는 2022년에 교부액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0~2021년에는 당해 연도 집행률이 2.0% 미만으로 저조하였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한편 사업 수행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적정 연부액으로 편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액 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선정된 경상남도 고성군은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어 교부현액 50억원을 전액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계획액	집행 (교부)액	교부시기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5,000	3,000	'22.4.8.	5,000	0	5,000	0	0.0
	2,000	'22.11.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은 2020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지자체가 선정된 해에 계획액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당해 연도 집행 실적은 경주 1.9%, 창원 0.4%, 춘천 0.8%로 저조하였다.

[2020~2021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선정 연도	지자체	계획액	교부액 (A)	교부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실집 행액 (B)	실집 행률 (B/A)	실집 행액 (C)	누적 실집행률 ((B+C)/A)	실집 행액 (D)	누적 실집행률 ((B+C+D)/A)
2020	경주	5,000	3,000	'20.4.14.	96	1.9	1,453	31.0	3,411	99.2
			2,000	'20.12.24						
	창원	5,000	3,000	'20.4.14.	19	0.4	2,974	59.9	282	65.5
			2,000	'20.12.24						
2021	춘천	5,000	3,000	'21.4.30.	38	0.8	3,981	80.4	981	100.0
			2,000	'21.11.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각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에 선정된 경주는 2020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부지 확보 및 장비 사양 기간 설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2년에 완료하였고, 창원은 사업 위치 변경과 추가 공사비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에 선정된 춘천은 2022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2022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 변경 내역]

선정 연도	지자체	사업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2020	경주	'20.3.~12. (10개월)	'20.3.~22.12. (2년 10개월)	· 설계용역 중 추가부지 확보 사항 발생 · 설치 장비 사양 기간 설정 시간 소요
	창원	'20.4.~12. (9개월)	'20.4.~23.12. (3년 9개월)	· 민원으로 인한 사업 위치 변경 · 설계 결과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수급 지연
2021	춘천	'21.4.~22.11. (1년 8개월)	'21.4.~23.12. (2년 9개월)	·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기간 소요
2022	고성	'22.3.~23.9. (1년 7개월)	-	·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사업에서 지자체가 선정된 연도에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어 교부액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0~2021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착공 이전에 발생하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자체가 선정된 연도의 집행 실적은 교부액 기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2)는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1차 교부금의 사용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부합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단년도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행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 공사 등 각 절차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적정 연부액으로 편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2.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은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건립하여 드론축구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21~2024년 동안 국비 33억원, 지방비 77억원 등 총 110억원 규모의 전주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건립하여 드론축구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 드론 교육·체험장, 아카이브 등
사업기간	· 2021~2024년
사업규모 및 수행방식	· 총 110억원 - 국비 33억원, 지방비 77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전라북도 전주시) * 2022년도 계획액 13억원
시설규모	· 부지면적 8,000㎡(2,424평), 연면적 3,299㎡(1,000평), 건축면적 1,600㎡(485평)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광장 부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계획액은 국비 기준으로 2021년 3억원, 2022년 13억원, 2023년 17억원 등 총 33억원이 편성되었다.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연도별 계획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국비	300	1,300	1,700	3,300
지방비	0	3,300	4,400	7,700
합계	300	4,600	6,100	1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비를 2021년 및 2022년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각각 교부현액의 6.7%, 20.7%가 집행되고 잔액은 이월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고 1차 교부금 집행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은 당초 3개년(2021~2023년) 사업으로 2021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2023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각종 절차 진행으로 설계는 2023년 7월에 완료되고 공사는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추진 및 계획]

구분	당초 계획	변경 추진 및 계획
사업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21. 7. ~ 9.	'21. 7. ~ 8.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	'21. 9. ~ '22. 3.
공유재산 심의	-	'22. 4. ~ 8.
설계공모, 설계용역	'21. 10 ~ 12.	'22. 8. ~ '23. 7.
공사	'22. 1. ~ '23. 7.	'23. 10. ~ '24. 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1~2022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사업비 3억원을 2차례에 걸쳐 교부하였으나, 교부현액의 6.7%가 집행되고 잔액은 이월되었으며, 2022년에도 사업비 13억원을 2차례에 걸쳐 교부하였으나, 교부현액의 20.7%가 집행되고 잔액은 이월되었다.

[2021~2022년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교부액 (A)	교부일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1	300	180	'21.8.17.	-	300	20	280	0	6.7
		120	'21.12.23.						
2022	1,300	780	'22.11.7.	280	1,580	327	1,253	0	20.7
		520	'22.12.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전주시는 2022년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2022년 9월)³⁾에, 2021년 예산은 2022년에 설계용역비 및 부대비로 집행하고, 2022년 예산 13억원은 명시이월 후 2023년 5월 중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⁴⁾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과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가 2022년 사업비 13억원을 전액 이월할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과 12월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을 2차례 나누어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⁵⁾에 따른 것이나,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상황

3) 2022년 전주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1차)(전주시, 2022. 9. 20.)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변동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고 1차 교부금의 사용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가. 현 황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¹⁾은 공연, 연극, 무용,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기록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DB 구축 대상 자료를 정리하고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3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73,275	73,275	-	73,275	71,364	97.4	-	1,911	71,534
기타 체육·문화 예술의 진흥	12,769	12,769	-	12,769	10,883	85.2	-	1,886	6,328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370	370	-	370	370	100.0	-	-	3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7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편성하였으나 동일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할 경우 사업의 전체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동일 사업을 서로 다른 기금에 각각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2년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계획액 3억 7,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교부현액 3억 7,000만원의 84.1%인 3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보조사업자				
계획액	집행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70	370	370	311	84.1	0	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된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자료 정리 및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된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과 수행기관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2022년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사업과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 비교]

구분	예술기록물 DB 구축 지원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회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세부사업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수행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내용	예술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자료 정리 및 디지털화	예술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자료 정리 및 디지털화
수행방식	민간경상보조	직접
사업규모	3억 7,000만원	40억 4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일한 기관이 수행하는 동일 내용의 사업을 서로 다른 기금에 각각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리 및 등록이 시급한 근·현대 예술자료의 DB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할 경우 사업의 전체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다른 기금에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49억 7,500만원이며, 622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4.4%인 463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7,500만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158억 4,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4,975	54,975	54,975	61,760	46,204	15,481	75	74.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	496	132	364	-	26.6
합계	54,975	54,975	54,975	62,256	46,336	15,845	75	74.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81억 4,2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1조 409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76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5억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44,004	1,026,485	1,068,467	1,031,314	17,611	19,543	96.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675	9,675	9,675	9,675	-	-	100.0
합계	1,053,679	1,036,160	1,078,142	1,040,989	17,611	19,543	96.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550억 8,300만원이며, 1,688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인 1,677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3,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55,083	155,083	155,083	168,809	167,775	1,034	-	99.4

자료: 문화재청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550억 8,300만원이며, 이 중 108.2%인 1,67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55,083	155,083	155,119	167,775	-	1,673	108.2

자료: 문화재청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01억 3,000만원 (15.3%) 감소한 56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3억 1,300만원 (15.0%)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3,385	54,975	54,975	46,336	△8,639	2,951
기금	5,487	11,340	11,340	9,849	△1,491	4,362
합계	48,872	66,315	66,315	56,185	△10,130	7,31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 9,200만원(0.3%)이 증가한 1조 1,87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27억 1,100만원 (8.5%)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960,541	1,053,679	1,036,160	1,040,989	4,829	80,448
기금	133,826	147,726	147,726	146,089	△1,637	12,263
합계	1,094,367	1,201,405	1,183,886	1,187,078	3,192	92,71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재청 자산은 1조 410억 9,600만원, 부채는 938억 6,500만원으로 순자산은 9,472억 3,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577억 100만원, 투자자산 19억 2,000만원, 일반유형자산 9,573억 4,300만원, 무형자산 234억 2,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711억 9,900만원(7.3%) 증가하였다. 이는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등으로 기타비유동자산이 18억 1,800만원 감소하였으나, 선급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자산 201억 300만원 증가와 토지의 국유재산 가격평가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491억 8,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2억 6,500만원, 장기차입부채 916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8억 1,900만원(0.9%)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는 변동이 없으나, 선수수익 8억 2,300만원 증가 등 유동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041,096	969,897	71,199	7.3
Ⅰ. 유동자산	57,701	37,598	20,103	53.5
Ⅱ. 투자자산	1,920	1,526	394	25.8
Ⅲ. 일반유형자산	957,343	908,157	49,186	5.4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3,426	20,093	3,333	16.6
Ⅵ. 기타비유동자산	706	2,524	△1,818	△72.0
부 채	93,865	93,046	819	0.9
Ⅰ. 유동부채	2,265	1,446	819	56.6
Ⅱ. 장기차입부채	91,600	91,600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947,231	876,851	70,380	8.0
Ⅰ. 기본순자산	469,971	469,971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28,361	44,904	83,457	185.9
Ⅲ. 순자산 조정	348,898	361,976	△13,078	△3.6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255억 2,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276억 7,000만원, 관리운영비 1,200억 5,500만원, 비배분비용 15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60억 7,200만원, 비배분수익 504억 2,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572억 9,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36억 1,500만원(6.4%) 감소한 1조 828억 2,300만원이며, 이는 평가손실 감소 등 프로그램 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475억 6,500만원 감소하고, 관리운영비가 177억 4,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문화재보존관리 프로그램(4,717억 7,300만원)과 문화재활용 프로그램(997억 8,000만원),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프로그램(947억 5,200만원), 궁능원관리 프로그램(925억 6,100만원), 문화재국제교류 프로그램(924억 1,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72억 5,200만원과 경비 428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000만원과 이자비용 15억 8,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11,598	1,062,802	△51,204	△4.8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27,670	1,075,235	△47,565	△4.4
나. 프로그램 수익	16,072	12,433	3,639	29.3
II. 관리운영비	120,055	137,798	△17,743	△12.9
III. 비배분비용	1,591	1,578	13	0.8
IV. 비배분수익	50,421	45,739	4,682	10.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082,823	1,156,438	△73,615	△6.4
VI. 비교환수익 등	157,299	91,212	66,087	72.5
VII. 재정운영결과(V-VI)	925,524	1,065,226	△139,702	△13.1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768억 5,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472억 3,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03억 8,000만원(8.0%) 증가하였다.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년 대비 129억 7,000만원 감소하였고,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대비 730억 600만원 증가, 일반유형자산재평가 이익 등 조정항목이 전년 대비 1,293억 5,800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1,397억 2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조 553억 6,0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63억 7,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876,851	889,821	△12,970	△1.5
Ⅱ. 재정운영결과	925,524	1,065,226	△139,702	△13.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08,982	935,976	73,006	7.8
Ⅳ. 조정항목	△13,078	116,280	△129,358	△111.2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947,231	876,851	70,38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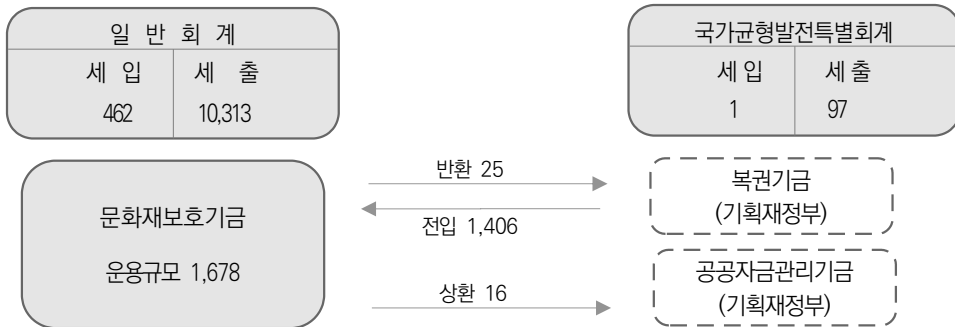
자료: 문화재청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기금이 복권기금으로부터 1,406억원을 전입받고 25억원을 반환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6억원의 이자를 상환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결산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기술 개발(R&D)**,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③ **문화유산 활용 진흥** 등이 있다.

문화유산 스마트보존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이월가능성을 고려하여 9억원이 감액(115억원 → 106억원)되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7억원이 감액(108억 1,000만원 → 101억 1,000만원)되었으며,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은 기 제작된 실감콘텐츠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9억 8,000만원이 감액(524억 4,700만원 → 514억 6,7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②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 ③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이 있다.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200억원이 증액(3,840억원 → 4,040억원)되었고,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 사업은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신규 추진 등을 위하여 48억 9,800만원이 증액(86억 6,000만원 → 135억 5,800만원)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22억 5,500만원이 증액(447억 1,500만원 → 469억 7,000만원)되었다.

문화재청은 ① 국민 공감과 소통 확대로 문화재 핵심가치 보존을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보존·전승**, ②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으로 **다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유산**, ③ 세계유산 지속 등재 및 보존관리 체계화를 통한 **세계 속 문화유산 선진 국가 도약**, ④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실현기반 조성**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선정인원의 24.0%가 중도 포기하였으므로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도포기 결원의 12.5%만 재매칭 되었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매칭 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인턴 운영기관이 정규직 전환 의지 없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인턴운영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공간 운영 계획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자체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지연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일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자체 집행 실적이 20.5%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¹⁾은 문화재 관련 분야 수요기관에 필요한 청년 인턴을 지원하여 문화재 산업 분야 취·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10,892	17,882	1,143	±26	19,025	17,253	90.7	1,197	575	50,504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2,400	2,400	-	-	2,400	2,400	100.0	-	-	2,80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 준비 청년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유산 산업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에 2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운영비 등 3,000만원을 제외한 23억 7,000만원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단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였다.²⁾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 준비 청년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유산 산업 취업·창업을 위한 기회 확대
사업대상	· 만19~39세 문화유산 분야 취업준비생(졸업예정자, 졸업자)
사업규모	· 24억원 - 문화유산 분야 청년 인턴십 20억 500만원 : 200명×167만원×6개월 * 정규직 채용 연계 시 3개월 추가 지원, 4대 보험은 채용기관 부담 - 교육 및 워크숍 등 사업관리 3억 6,500만원 - 사업 운영 모니터링 3,000만원
수행방식	· 민간위탁(한국문화재단) * 사업운영비 등 3,000만원은 문화재청 직접사업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

-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나. 분석의견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선정인원의 24.0%가 중도포기 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도포기 결원의 12.5%만 재매칭 되었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매칭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사업 운영 등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민간위탁사업비 23억 7,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그리고 수탁사업자인 한국문화재단은 2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수탁사업자			
	예산액	집행 (교부)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직접	30	30	-	-	-	-
위탁	2,370	2,370	2,370	2,363	7	99.7
합계	2,400	2,400	2,370	2,363	7	99.7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은 인턴 200명 모집으로 공고하였으나 약 5배에 해당하는 977명이 신청하였다. 그리고 신청자로부터 인턴 지원서를 제출받아 문화재 이해도 및 관심도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심사하여 신청인원의 20.5%인 200명이 선정되었으나, 선정인원의 24.0%인 48명이 중도포기하였다.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인턴 신청·선정·중도포기 현황]

(단위: 명, %)

신청(A)	선정(B)	선정률(B/A)	중도포기(C)	중도포기율(C/B)
977	200	20.5	48	24.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인턴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문화유산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지원연령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지원요건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심사방법	인턴 지원서 서면심사
심사기준	심사위원(6명) 전체 평균점수 70점 이상
심사항목	문화재 이해도 및 관심도(25점), 직무 적합성(25점), 인턴 수행의지(40점), 거주지 연계(10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재청은 인턴의 중도포기로 발생한 결원을 재매칭하였는데, 중도포기 결원 48명 중 12.5%인 6명만 재매칭 되어 실적이 저조하다.

재매칭 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중도포기 인턴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재매칭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매칭할 인턴을 선정하는 과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2022년 4월 30일까지 중도포기한 11명의 결원을 대상으로 재매칭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결원을 재매칭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매칭 인원은 기존 신청자 중에서 선정되는데, 동 사업에 신청한 977명 중 선정되지 못한 777명이 대상이다. 해당 인원은 재매칭을 통해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나, 문화재청에서 추가 재매칭을 실시하지 않아 재매칭된 6명 이외에는 문화유산 관련 분야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인턴 근무기간별 중도포기 및 재매칭 현황]

(단위: 명, %)

구분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4개월	4~5개월	5~6개월	합계
중도포기(A)	8	5	7	7	12	9	48
재매칭(B)	3	3	0	0	0	0	6
재매칭 비율(B/A)	37.5	60.0	0.0	0.0	0.0	0.0	12.5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는 공모를 통해 인턴이 선정되었으나 24.0%는 근무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포기하였고, 중도포기 결원에 대한 재매칭은 12.5%만 이루어졌다.

동 사업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 준비 청년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이므로, 문화재청은 계획된 근무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중도포기 결원에 대한 재매칭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청은 인턴 운영기관이 정규직 전환 의지 없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인턴운업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인턴 운영기관에 대해 기본 지원금 6개월분을 지급하고, 운영 중인 인턴의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힌 인턴 운영기관에 대해 추가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2개월분³⁾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6개월 기본 지원금으로 운영된 인턴 152명 중 39명이 이후 2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중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인원은 17명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해당 기관에 대한 지속적 채용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므로, 지원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관에서 채용을 지속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 전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인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지 없이 지원금만 받는 인턴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유지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인턴운업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정규직 채용 연계 추가 지원금은 당초 3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인 2개월로 변경하여 지원되었다.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의 지원 및 근무 현황]

(단위: 명)

지원	기본(6개월)		기본(6개월)+정규직 전환(2개월)		지원 후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근무	6개월	152	6개월+2개월	39	해당 기관 근무 지속	17
					근무 종료	22
			근무 종료	113	-	-

주: 지원 후 근무 현황은 2023년 4월말 기준임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¹⁾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예술인 행복주택, 생활 SOC가 결합된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9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무형문화재보호	23,666	18,666	86	±9	18,752	18,172	96.9	465	115	25,527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5,920	920	-	-	920	920	100.0	-	-	4,16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무형문화재 전승 공간 마련과 전승자 주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의 전수교육관 건립, 국토교통부의 생활 SOC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행복주택 건립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전주, 밀양이 선정되었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2-301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전주에서 2021~2025년 동안 82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2년에는 2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에서 5억 1,0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다.

밀양에서는 2021~2026년 동안 95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2년에는 3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1,0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밀양시
위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5 일원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일원
시설규모	· 연면적 4,800㎡, 지상 4층	· 연면적 8,800㎡, 지상 3층
사업기간	· 2021~2025년	· 2021~2026년
사업규모	· 총 82억 5,000만원 - 2022년 예산 : 27억 1,000만원 → 5억 1,000만원 (2022년도 제2회 추경)	· 총 95억 5,000만원 - 2022년 예산 : 32억 1,000만원 → 4억 1,000만원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행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연도별 예산 규모(국비)]

(단위: 백만원)

대상지역	세목 ¹⁾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전주	설계비	340	0	0	0	0	340
	공사비	1,160	510	2,000	1,088	3,026	7,784
	부대비	0	0	0	126	0	126
	소계	1,500	510	2,000	1,214	3,026	8,250
밀양	설계비	394	0	0	0	0	394
	공사비	1,106	410	2,164	1,804	3,526	9,010
	부대비	0	0	0	146	0	146
	소계	1,500	410	2,164	1,950	3,526	9,550
합계	설계비	734	0	0	0	0	734
	공사비	2,266	920	4,164	2,892	6,552	16,794
	부대비	0	0	0	272	0	272
	합계	3,000	920	4,164	3,164	6,552	17,800

주: 1) 세목은 각 지자체의 세부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문화재청 예산 편성 세목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임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공간 운영 계획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지연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일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보조사업자인 전주와 밀양은 LH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²⁾

2021년에 수립된 계획을 기준으로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주는 2021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2022~2023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부터 설계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 내역 및 계획: 전주]

당초 계획		추진 내역 및 계획	
절차	시기	절차	시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2021.4.~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1.7.~8.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2021.9.
		건축구상 용역	2021.9.~11.
		토지 매입	2022.2.~6.
설계 공모 및 설계	2021.5.~11.	설계 공모 및 업체 선정	2022.9.~10.
		설계	2023.1.~2024.2.
공사 발주 및 공사	2021.12.~2023.12.	입찰공고 및 공사	2024.3.~2025.12.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밀양도 2021년에 사전절차와 설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2~2023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6월부터 설계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 내역 및 계획: 밀양]

당초 계획		추진 내역 및 계획	
절차	시기	절차	시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2021.4.~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1.4.~7.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2021.11.~12.
		토지보상 협의 완료	2022.7.
설계 공모 및 설계	2021.6.~2022.2.	설계공모 및 업체 선정	2022.6.~8.
		설계	2022.9.~2023. 11.
공사 발주 및 공사	2022.3.~2023.12.	입찰공고 및 공사	2024.2.~2026. 3.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21~2022년 집행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먼저 전주의 경우 문화재청은 2021년 예산 15억원을 교부하고 전주소 이를 재 교부하였으나 LH는 전액 이월하였고, 2022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추경예산 5억 1,000만원을 6월에 전액 교부하고 전주소 이를 재교부하였으나, LH는 전년도 이월 액을 포함한 재교부현액 20억 1,000만원의 9.6%인 1억 9,300만원을 설계 계약 선 금과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집행 실적: 전주]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재청			전주			LH						
	예산액		집행액	교부일	교부액	실 집행액	재교부일	재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재교부현액 (C=A+B)	실 집행액 (D)	이월액	실 집행률 (D/C)
	당초	추경											
2021	1,500	1,500	500 1,000	'21.2.4. '21.5.28	500 1,000	1,500	'21.6.29.	1,500	-	1,500	0	1,500	0.0
2022	2,710	510	510	'22.6.15.	510	510	'22.12.21.	510	1,500	2,010	193	1,817	9.6
2023	2,000	2,00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밀양에서도 문화재청은 2021년 예산 15억원을 교부하고 밀양도 이를 재교부하였으나 LH는 전액 이월하였다. 2022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추경예산 4억 1,000만원을 6월에 전액 교부하고 밀양도 이를 재교부하였으나, LH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재교부현액 19억 1,000만원의 1.0%인 2,000만원을 설계 공모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집행 실적: 밀양]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재청			밀양			LH						
	예산액		집행액	교부일	교부액	실 집행액	재교부일	재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재교부현액 (C=A+B)	실 집행액 (D)	이월액	실 집행률 (D/C)
	당초	추경											
2021	1,500	1,500	500 1,000	'21.2.4. '21.5.28	500 1,000	1,500	'21.8.31.	1,500	-	1,500	0	1,500	0.0
2022	3,210	410	410	'22.6.15.	410	410	'22.6.24.	410	1,500	1,910	20	1,890	1.0
2023	2,164	2,164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전주는 약 8,000㎡의 부지에 전수교육관, 생활 SOC,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에서, 공간을 효율적·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체 건축물의 디자인과 공간 연계 등을 고려한 통합건축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협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밀양은 진·출입로 계획, 주차장 공유 사용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위해 연접하여 건립되는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³⁾과 설계, 공사 등을 협의 추진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SOC 조성, 행복주택 건립은 연계 추진이 계획된 사업이고,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동일한 시기에 연접된 공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간 운영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 계획이 아닌 당초 계획 수립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1차 교부금의 사용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교부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해 검토하되 계속사업은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문화재청은 공간 활용 관련 협의,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설계 절차가 전주는 2022년 9월, 밀양은 2022년 6월에 시작되었음에도, 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2021년 예산과 공사비가 편성된 2022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전액 교부하였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재청 직접 사업,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457억원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¹⁾은 근현대문화유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관리·보존·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71억 1,500만원 중 98.7%인 70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55억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2억 3,700만원의 94.5%인 2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은 불용되었다.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2억 7,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3억 7,000만원의 88.9%인 3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4,1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 관리	7,115	7,115	-	±39	7,115	7,023	98.7	-	92	4,856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5,500	5,500	-	0	5,500	5,500	100.0	-	-	3,000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270	270	-	△33	237	224	94.5	-	13	270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240	240	-	33	273	273	100.0	-	-	240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370	370	-	-	370	329	88.9	-	41	37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3-1.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정비, 경관회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에는 5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목포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50%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행되었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대상	· 목포, 영덕, 익산, 군산, 영주, 통영 등 6개 지자체
사업내용	·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등 - 근대건축자산 정비 - 경관회복(전선지중화, 가로경관 정비, 야간조명 등) - 관람 편의시설 조성
사업규모	· 55억원
수행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집행 실적이 20.5%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예산액 55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6개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74억 3,200만원의 20.5%를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각 지자체별로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목포와 익산의 실집행률은 50%대이고, 영덕, 군산, 영주, 통영은 10% 미만이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자체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A)	교부일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목포	1,205	453	'22.1.26.	521	1,726	866	860	50.2
		752	'22.5.12.					
영덕	1,922	961	'22.1.26.	1,299	3,221	171	3,050	5.3
		961	'22.5.12.					
익산	764	273	'22.1.26.	112	876	456	420	52.1
		491	'22.5.12.					
군산	491	246	'22.1.26.	-	491	1	490	0.2
		245	'22.5.12.					
영주	318	18	'22.1.26.	-	318	28	290	8.8
		300	'22.5.12.					
통영	800	400	'22.1.26.	-	800	0	800	0.0
		400	'22.5.12.					
합계	5,500	5,500		1,932	7,432	1,522	5,910	20.5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목포는 해안로 시장의 전선지중화 사업 설계 지연으로 가로등 설치 사업도 지연되었고, 골목길 정비 등은 지역주민 협의, 디자인 계획 협의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영덕은 2021년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고, 2022년에도 10월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전선지중화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익산은 전선지중화 사업의 공사비 증가로 2022년에 설계만 추진되었고, 보수정비 사업은 관계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군산은 2022년 8월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영주는 종합정비계획 수립(2022년 8월)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 기간 등이 소요되어, 두 지자체 모두 2022년에는 설계의 일부만 추진되었다.

통영은 2022년에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2022년에는 지중화사업 승인 절차만 수행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집행 실적 저조 주요 사유]

지자체	사업	집행 실적 저조 사유
목포	해안로 시장 전선지중화 및 가로등 설치	· 한국전력공사 설계 등 지연, 지중화 공사 지연에 따른 가로등 설치 지연
	골목길 정비, 경관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	· 지역주민 협의, 디자인 계획 협의 등 기간 소요
영덕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옛길 복원 등	· 종합정비계획 수립('22.10.)에 따른 자문의견 수렴 및 반영 기간 소요
	전선지중화	· 한국전력공사 협의 지연
익산	전선지중화	·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만 추진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 관계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군산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 '22년 8월 추경 예산 확보, 사업 추진 관련 협의
영주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등	· 종합정비계획 수립('22.8.) 이후 사업 추진 · 문화재위원 자문, 공공건축 자문, 사업 관계자 협의 등
통영	전선지중화	· 지중화사업 승인기간 소요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상세내역은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사업 지자체별 추진 현황' 참고

이와 같이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관련 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사전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보조금 교부시 1차 교부금의 사용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교부금을 교부하고, 지방비 확보, 사전 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³⁾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교부하였다.

특히 영덕은 2022년 10월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문화재청은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2022년 상반기에 편성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사업 지자체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사업	추진 현황
	2021 이월액	2022 교부액	2022	2023		
목포	521	-	301	52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및 경관회복	·'22.6. 4개소 완료 ·'23.6. 1개소 완료 예정
	-	200	194	0	국도 1.2호선 거점공간 정비	·'22.11. 완료
	-	130	117	11	대광전자 정비	·'22.12. 완료
	-	150	8	105	민어거리 진입로 정비	·'23.3. 완료
	-	115	5	41	오픈스페이스 정비	·'23.5. 완료 예정
	-	280	231	3	전선지중화(해안로 시장)	·'23.12. 완료 예정
	-	50	0	0	가로등 설치(해안로 시장)	
	-	120	10	0	골목길 정비	
	-	80	0	9	경관조명 설치	
	-	80	0	4	편의시설 설치	
소계	521	1,205	866	225		
영덕	1,299	-	116	45	등록문화자원 1,2,3구역 정비 및 경관회복	·'23.12. 완료 예정
	-	105	42	0	등록문화자원 보수설계	·'23.8. 완료 예정
	-	518	-	0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설계 중
	-	505	5	0	옛길복원	·'23.8. 공사 발주 예정
	-	300	8	0	관람편의시설 설치	
	-	494	-	0	전선지중화	·'23.12. 완료 예정
소계	1,299	1,922	171	45		
익산	112	-	64	17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및 경관회복	·'21.12. 2개소 완료 ·'23.12. 2개소 완료 예정
	-	27	-	0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23.6. 완료 예정
	-	737	392	0	전선지중화	·'23.12. 완료 예정
소계	112	764	456	17		
군산	-	491	1	0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설계 중 ·특허 공법 사용 관련절차 추진 중
영주	-	168	0	0	가로광장 정비	·설계 중 ·'23.6.~8. 완료 예정
	-	100	0	57	도시공간 정비	
	-	50	28	0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소계	-	318	28	57		
통영	-	800	0	0	전선지중화	·'23.12. 설계 완료 예정 ·'24.1. 착공 예정
합계	1,932	5,500	1,522	344		

주: 2023년 4월말 기준임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일반연구비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현황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세부사업 중,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내역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⁴⁾ 등 3개로 총 8억 8,000만원 규모이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문화재 등록 가치 검토를 통해 이를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에 동산 분야와 건축·시설물 분야에 대한 조사 예산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의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보존 및 활용 등 예방적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에 조사 예산 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체계적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2년에 동산 분야와 건축·시설물 분야에 대한 조사 예산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 중 일반연구비 편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조사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와 문화재 등록 가치 검토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보존 및 자료 구축 · 2022년 예산 2억 7,000만원(계속) - 동산 분야: 2개 분야 × 7,500만원 = 1억 5,000만원 - 건축·시설물 분야: 2개 분야 × 6,000만원 = 1억 2,000만원
국가민속 문화재 정기조사	· 국가민속문화재의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보존·관리·활용 등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 · 2022년 예산 2억 4,000만원(신규) - 국가민속문화재 112개소 × 214만원
국가등록 문화재 정기조사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토대 마련 · 2022년 예산 3억 7,000만원(계속) - 동산 분야: 1개 분야 × 1억원 = 1억원 - 건축·시설물 분야: 1개 분야 × 2억 7,000만원 = 2억 7,000만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는 동산 분야 5년, 건축물 분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2022년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사업과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 잔액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사업 예산은 각 조사를 위한 일반연구비 8억 8,000만원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된 건축·시설물 목록화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①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 용역으로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에서는 집행 잔액 7,600만원과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사업 예산 3,300만원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② 고택 및 종가문화 보존계승 명품화 용역 6,000만원, ③ 초가이영잇기 정비기준 마련 용역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세부사업 중 일반연구비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분야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조사	동산 목록화조사	150	△33	237	108	13	150
	건축·시설물 목록화조사	120			0		120
	①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	0			116		0
	소계	270	△33	237	224	13	270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240	33	273	164	0	240
국가민속 문화재 정기조사	② 고택 및 종가문화 보존계승 및 명품화	0			60		0
	③ 초가이영잇기 정비기준 마련	0			49		0
	소계	240	33	273	273	0	240
국가등록 문화재 정기조사	동산 정기조사	100	-	370	88	41	100
	건축·시설물 정기조사	270			241		270
	소계	370	-	370	329	41	370
합계		880	0	880	826	54	88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편성되지 않은 용역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①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사업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현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등록기준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②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의 대상인 고택 및 종택 등을 활용하여 체험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③ 초가의 원형을 살리기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잔액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하는 한편,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집행 잔액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운영 사업의 집행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하 ‘조성 사업’)과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이하 ‘운영 사업’)¹⁾은 페터널 등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발굴된 유물의 수장·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보존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조성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9억 100만원 중 93.7%인 55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운영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매장문화재보존	2,713	2,703	5,276	±7	7,979	7,517	94.2	-	462	10,891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625	625	5,276	-	5,901	5,529	93.7	-	372	8,803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1,300	1,300	-	-	1,300	1,300	100.0	-	-	1,17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332-301

두 사업은 동일한 대상지에 대해 조성 사업 후 운영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신규 편성된 조성 사업의 대상지였던 대전, 전주에 대해, 2022년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 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선정된 목포, 함안에 대해 조성 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 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운영 사업 개요]

구 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내용	·발굴유물 수장시설과 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발굴유물의 보관·관리 및 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역사문화공간 관리 운영
사업대상	·목포 벽돌창고(553㎡) ·함안 매천터널(4,200㎡)	·대전 사진포터널(3,600㎡) ·전주 신리터널(3,125㎡)
사업규모	·6억 2,500만원 : 2개소 설계 * <u>2022년 설계</u> → 2023년 공사 → 2024년 운영	·13억원 : 2개소 운영 * 2021년 설계, 공사 → <u>2022년 운영</u>
수행방식	·민간위탁(한국문화유산협회)	

주: 사업대상은 예산 편성시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1년 조성 사업 또한 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도 지연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사업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편성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운영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조성 사업 예산 6억 2,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수탁사업자인 한국문화유산협회는 교부액을 7억 4,200만원으로 변경하여 이 중 26.5%를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그리고 운영 사업에서도 문화재청은 예산 13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한국문화유산협회는 교부액을 11억 8,3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이 중 40.1%를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2022년 편성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운영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수탁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당초	변경(A)			
조성	625	625	625	742	197	545	26.5
운영	1,300	1,300	1,300	1,183	474	709	40.1
합계	1,925	1,925	1,925	1,925	671	1,254	34.9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두 사업 모두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성 사업의 경우, 대상지인 목포와 함안은 당초 2022년에 설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포는 대상지를 벽돌창고에서 청해사로 변경하여 확정(2022년 4월)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연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

함안도 기존에 선정된 매천터널이 안정성에 부적합하다는 한국도로공사 의견(2023년 2월)이 있어 모곡터널로 대상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승인,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변경 내역]

구분	추진내용	당초	변경	대상지
기본구상	공공건축 기본구상 수립	'22.2.~3.	'22.5~8.	목포
사전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포함)	'22.3.~4.	'22.8.~9. '22.4.~6.	목포 함안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실시	'22.4.	'22.4.~5.	함안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설계공모기간 포함)	'22.4.~11.	'22.10.~'23.4. '22.7.~'23.6.	목포 함안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운영 사업은 당초 유물 이관 등록과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을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2022년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으로 이관할 대상 문화재 보유 현황 요청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회신이 저조하여, 이관 대상 발굴유물 조사 등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또한 2021년 사업으로 추진된 대전·전주의 조성 사업이 지연되어 각각 2022년 11월, 12월에 완료되면서²⁾, 2022년 운영 사업도 지연되었다.

2) [2021년 편성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 추진 내역(대전·전주)]

구분	기간	추진 내용
기본구상	2021.1.~2.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사전검토	2021.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
설계	2021.4.~6.	조달청 설계 용역 계약 검토
	2021.6.~7.	기본 및 실시 설계 공모
	2021.8.~11.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	2021.12.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2022.2.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착수
	2022.11.~12.	건축공사 완료(대전 11월, 전주 12월)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 변경 내역]

구분	추진내용	당초	변경
유물 이관 등록	발굴유물 이관·등록 관리지침 마련	'22.3.	'23.3.~7.
	비귀속 유물 현황조사	'22.4.	'22.3.~5.
	이관 대상 발굴유물 수량 및 상태 조사	'22.5.	'22.6.~12.
	발굴유물 이관계획 수립	'22.5.	
	발굴유물 이관 및 등록	'22.7.~9.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대표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22.3.~8.	'22.4.~6.
	전시·체험 프로그램 개발	'22.3.~9.	'22.7.~'23.2.
	미래형 전시 디지털 콘텐츠 제작	'22.4.~9.	
개관	전시 개관	'22.10.	'23.3.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대상지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1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대상지가 선정되어 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운영 사업도 지연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사업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청은 2022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운영 사업의 사업수행자 선정시 한국문화유산협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두 사업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상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사업수행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유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2022년에는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계속)과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운영 사업(신규)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두 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문화재청은 수의계약 체결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중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³⁾를 들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사업대상인 비귀속 발굴유물을 보관·관리하는 조사기관의 연합체로 유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유물의 관리·활용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귀속 발굴유물의 수장·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에 한국문화유산협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 관리 철저 및 효과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이하 ‘구축 사업’)과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이하 ‘유지관리 사업’)¹⁾은 자율주행 순찰 등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구축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유지관리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억 7,2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2,682	2,554	-	±20	2,554	2,083	81.6	-	471	2,514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300	300	-	-	300	300	100.0	-	-	-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272	272	-	-	272	-	0.0	-	272	-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	-	-	-	-	-	-	-	3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2022년 구축 사업 예산 3억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유지관리 사업 예산 2억 7,200만원은 문화재청 직접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334-301

[2022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내용	·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 및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 전송 등이 가능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드론의 영상을 수집·분석·관리
사업규모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3억원 - 국비 70%, 지방비 30%, 자치단체 자본보조
	·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2억 7,200만원 - 직접수행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수행한 4개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수행 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구축 사업 예산 3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지자체는 49.3%를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유지관리 사업 예산 2억 7,20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A)	집행 (교부)액 (B)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 현액 (C)	실집 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D/C)
구축	300	300	0	100.0	300	148	152	0	49.3
유지관리	272	0	272	0.0	-	-	-	-	-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구축 사업에서 지자체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김제 등 4개 지자체는 실 집행률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교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대상지	교부액 (A)	교부일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	35	'22.2.16.,	28	7	80.0
함안	말이산 고분군	105	'22.3.22.	82	23	78.1
청주	상당산성	80	'22.4.11.,	0	80	0.0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80	'22.5.11.	38	42	47.5
합계		300		148	152	49.3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4개 지자체는 2022년 내에 구축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제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 위주의 구축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2022년말에 드론 등을 구입하고 2023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함안은 용역 계약 유찰 후 202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주는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고 드론 운영 대상지에 공군 군사지역이 포함되어 2023년 2~6월에 고도제한 상향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드론 구축은 2023년 8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고령도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고, 용역 계약 유찰로 202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2022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지자체별 계획 대비 추진 경과]

지자체	당초 계획	추진 경과
김제	·'22.5.~10. 드론 및 시스템 구축	·'22.3. 1회 추경 예산 확보(시설비) ·'22.8. 2회 추경 과목정정(자산취득비) ·'22.12. 드론 및 영상관계 물품구입 ·'23.2. 방재드론 카메라 1기 추가구입 예정 ·'23.5. 사업완료
함안	·'22.2~3. 사업자 선정 ·'22.3~12. 드론 및 시스템 구축	·'22.10. 유찰 ·'22.11. 재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2.12. 선금지급 ·'23.6. 사업완료 예정
청주	·'22.5.~12. 드론 및 시스템 구축	·'22.9. 2회 추경사업 편성 ·'23.2.~6. 고도제한 상향 협의 및 설계용역 ·'23.7.~8. 구축 진행(구매설치) 및 사업완료 예정
고령	·'22.2.~9. 드론 및 시스템 구축	·'22.8. 2회 추경사업 편성 ·'22.11. 1회 유찰 후 사업계약 ·'22.12. 선금지급 ·'23.4. 사업완료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조사업 신청시 4개 지자체는 2022년 내에 구축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내용 변경,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 협의 등 사업 수행 전에 완료되어야 할 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 등이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수행 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 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청은 2022년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한 바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이를 불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 도입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연계하여 평상시 예찰 활동을 분석하고 재난시 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에 문화재 방재 드론 상황정보 유지관리 사업 예산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다.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 도입된 드론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드론을 도입한 지자체가 적었고(2021년 1개소, 2022년 4개소),²⁾ 사업 범위를 드론 영상 공유에 한정할 것인지, 통제·관리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확정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 사업의 대상인 지자체의 드론 도입 현황은 예산 편성 전에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를 통해 파악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각 지자체의 드론 영상을 공유하거나 통제·관리하는 것을 통해 문화재 방재와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예산 편성시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이를 불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재청은 드론의 활용도, 효과성 등의 파악을 위한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측정함으로써, 드론이 당초 목적인 문화재 방재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2022년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으로 드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보령, 성주, 동해, 부안, 제주, 익산 등 6개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및 인근을 순찰하는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월 1~2일만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기간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1~2월은 유지관리업체 계약진행 등으로 미운영되었으며, 돌풍 및 폭우 등 기상악화와 기기수리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2021~2022년 편성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으로 드론을 도입한 지자체 현황(완료 예정 포함)]

편성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합계
2021	· 2021년 1개소 - 12월 보령	· 2022년 4개소 - 1월 성주, 5월 동해, 8월 부안, 12월 제주	· 2023년 2개소 - 3월 익산, 4월 제천	· 7개소
2022	-	· 2023년 4개소 - 4월 고령, 5월 김제, 6월 함안(예정), 8월 청주(예정)	-	· 4개소

주: 2023년 5월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의 문화재, 기후 등 상황에 따라 드론의 활용 주기에 차이가 있고 드론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도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드론이 문화재 방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드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재청은 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드론 관리대장, 운용일지, 정기점검일지 등을 제출 받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 파악에 더하여 드론 활용의 효과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서 드론을 문화재의 특성 등에 부합하게 적정 주기로 운용하고 있는지, 드론을 활용한 시찰이 문화재 방재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 드론의 활용도, 효과성 등의 파악을 위한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측정함으로써, 드론이 당초 목적인 문화재 방재에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2023년 문화재 방재 드론 도입 지자체별 운영 현황]

연번	지자체명	대상지	운영 실적			
			시기	시간	일(횟수)	내용
1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22.1.~2.		미운영	수림 및 근방순찰 등
			'22. 3.	370분	2일(2회)	
			'22. 4.	360분	2일(2회)	
			'22. 5.	240분	1일(1회)	
			'22. 6.		미운영	
			'22. 7.	1,890분	7일(29회)	
			'22. 8.	210분	1일(4회)	수림 모니터링 및 외연도 일대 산불감시 등
			'22. 9.	745분	4일(15회)	
			'22.10.	129분	3일(11회)	
			'22.11.	820분	6일(7회)	
			'22.12.	475분	4일(4회)	
			'23.1.~3.		미운영	
			'23. 4.	38분	3일(3회)	
2	성주	성산동 고분군	'22. 1.	23분	1일(3회)	고분군 일대 상태감시, 산불 감시
			'22. 2.	37분	1일(4회)	
			'22. 3.	91분	2일(9회)	
			'22. 4.	69분	2일(8회)	
			'22. 5.	92분	2일(8회)	
			'22. 6.	96분	2일(8회)	
			'22. 7.	48분	1일(4회)	

연번	지자체명	대상지	운영 실적			
			시기	시간	일 (횟수)	내용
			'22. 8.	99분	3일(10회)	
			'22. 9.	43분	1일(4회)	
			'22. 10.	미운영		
			'22. 11.	33분	1일(3회)	
			'22.12.	79분	3일(8회)	
			'23. 1.	244분	7일(28회)	
			'23. 2.	279분	8일(33회)	
			'23. 3.	249분	8일(29회)	
			'23. 4.	224분	8일(28회)	
3	동해	무릉계곡	'22. 2.	630분	3일(3회)	시험 비행
			'22. 3.	240분	4일(4회)	
			'22. 4.	110분	2일(2회)	
			'22. 5.	180분	3일(3회)	무릉계곡 예찰활동
			'22. 6.	210분	1일(1회)	
			'22. 7.	330분	2일(2회)	
			'22. 9.	60분	1일(1회)	
			'22.10.	120분	1일(1회)	
			'22.11.	210분	2일(2회)	
			'22.12.	240분	1일(1회)	
			'23. 1.	180분	1일(1회)	
			'23. 2.	720분	3일(3회)	
			'23. 3.	600분	4일(4회)	
			'23. 4.	720분	3일(3회)	
4	부안	죽막동 유적	'22.12.	40분	2일(3회)	적벽강 일원 퇴적층 및 산림 감시
			'23.1~2.	미운영		
			'23. 3.	50분	2일(5회)	
			'23. 4.	40분	2일(4회)	
5	제주	수월봉	'23. 4.	180분	1일(1회)	수월봉 화산쇄설층 변화 탐지
6	익산	왕궁리 유적 등	'23. 4.	120분	4일(13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터 일원 점검

주: 2023년 4월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적정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¹⁾은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보급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145억 5,200만원 중 98.4%인 143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내역사업 중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4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2억 5,200만원의 71.4%인 1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7,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2,000만원 중 92.0%인 9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8,2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16,032	14,552	-	-	14,552	14,326	98.4	-	226	17,032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000	4,000	-	-	4,000	4,000	100.0	-	-	4,280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252	252	-	-	252	180	71.4	-	72	252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2,500	1,020	-	-	1,020	938	92.0	-	82	3,5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6-1.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가. 현 황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은 유형별 문화유산에 실감콘텐츠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향유 기반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 예산은 유·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유형별 콘텐츠 구축 38억 5,000만원, Digital Heritage 전시관 콘텐츠 큐레이션 등 고도화 1억 5,000만원 등 총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동 사업을 한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목적	· 유형, 무형, 자연유산, 세계유산 등 유형별로 특화된 실감콘텐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향유 기반을 보급
사업규모	· 40억원 - 유·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유형별 콘텐츠 구축 38억 5,000만원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기반 실감형 콘텐츠(체형형·반응형) · Digital Heritage 전시관 collection(3D이미지, 텍스트, 3D가상사물 등 디지털시각화, 인물·작품 해설 오디오 콘텐츠 등) · 메타버스 구축 - Digital Heritage 전시관 콘텐츠 큐레이션 등 고도화 1억 5,000만원
수행방식	· 민간위탁(한국문화재단)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은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된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편성 내역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수탁사업자인 한국문화재단도 4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수탁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4,000	4,000	4,000	4,000	100.0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편성 내역은 유·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에 대한 제작비 38억 5,000만원과 온라인 서비스 보급비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은 과거에서 만나는 일상 실감콘텐츠 등 제작비 21억 5,0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유산 실감체험관 운영 등 보급비 18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제작비로 편성된 17억원이 보급비로 사용되었다.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			집행		차이 (A-B)
	내역		금액(A)	내역		
제작	유·무형 유산, 자연유산 등	초고화질영상, VR, AR, 다면영상, 음향채록, 답춌이미지, 메타버스, 디지털 에셋(3D)	3,850	과거에서 만나는 일상 실감콘텐츠	800	
				실감의궤 콘텐츠	254	
				역사인물 콘텐츠	548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상자	54	
				콘텐츠 제작 제반 경비	494	
			3,850 (96.3)	소계	2,150 (53.8)	△1,700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		금액(A)	집행		차이 (A-B)
	내역			내역	금액(B)	
보급	온라인 서비스	Digital Heritage 전시관	150	찾아가는 문화유산 실감체험관 운영	944	
				기제작 디지털콘텐츠 국내·외 보급	321	
				온라인 체험관 고도화 등	371	
				콘텐츠 보급 제반 경비	214	
		150 (3.8)	소계	1,850 (46.3)	1,700	
	합계	4,000 (100.0)	합계	4,000 (100.0)	0	

자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작비로 편성된 17억원이 보급비로 집행된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예산 편성시에는 ‘광의의 제작 개념(제작-보급-활용 모두 포함)’을 적용하였으나, 결산시에는 ‘협의의 제작 개념’을 적용하여, 편성시 보다 집행시 제작 예산이 적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²⁾

그러나 2022년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의 예산 편성은 제작과 보급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편성의 구체적인 내역에서 제작은 ‘유·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에 대한 ‘초고화질영상, VR, AR, 다면영상, 음향채록, 딥썬이미지, 메타버스, 디지털 에셋(3D)’으로 되어 있고, 보급은 ‘온라인 서비스’ ‘Digital Heritage 전시관’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성 내역 중 제작에 대해 보급 및 활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제작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당초 편성된 내역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재청은 예산 편성시와 결산시 ‘제작’, ‘보급’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산 편성시 ‘제작’은 광의의 개념으로 콘텐츠의 ‘제작-보급-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제작뿐만 아니라 보급·활용을 모두 포함하며, ‘보급’은 광의의 제작 이외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저장·구현 및 유지·보수하는 내용만 포함된다.

그리고 결산시 ‘제작’은 협의의 개념으로 성과주의·실적주의 관점에서 콘텐츠 편수로서 산출되는 것이 포함되고, ‘보급’도 산출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인원 등이 산출되는 활동이 포함된다.

6-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사업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가. 현황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록화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사업 예산은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사업 예산은 5,000만원 편성되었다.

[2022년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편성 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3D 스캐닝 및 모델링) 및 일반 국민이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을 위한 경상경비
사업규모	· 2억 5,200만원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홍보 및 협력망 구축 1억 3,700만원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연구 5,000만원 <u>-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5,000만원</u> - 디지털 문화유산콘텐츠 업무 협의 및 간담회 300만원 - 콘텐츠 보급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1,200백만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2022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사업 예산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내역사업에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일 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2022년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세부사업 중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내역사업에 편성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예산 5,000만원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여 4,8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같은 세부사업 중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내역사업³⁾에 편성된 전시 및 교육현장 보급 예산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여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집행	
사업명	예산현액	사업명	집행액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14,55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14,326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25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180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홍보 행사	50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48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1,020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938
전시 및 교육현장 보급(국내·외)	220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228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반기)	49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와 하반기 사업은 모두 독도·

3) [2022년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집행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대표유산 원형데이터 구축	300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원천자료 제작·보급	660
대표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500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228
전시 및 교육현장 보급(국내·외)	220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49
합계	1,020	합계	938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천문, 전통건축·공룡화석에 대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은 동일한 내용을 기간과 대상만 다르게 하여 각각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추진하였다.

[2022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세 내역]

구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반기)
기간	· 2022년 2~5월	· 2022년 8~12월
대상	· 전남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람객 등 · 충청권역 초등학교, 교육센터 등 학생	· 강원권 초등학교, 복지관 등의 미취학 아동, 초 등학생
내용	· 독도·천문 관련 체험영상, 학습활동 자료를 통한 디지털 교육 · 전통건축·공룡화석 관련 교육상자, 학습활동 자료를 통한 디지털 교육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일 사업을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서 추진한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확대 요청이 있어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사업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수요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요 파악이 선행되지 않아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내역사업에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사업이 추진되고,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내역사업에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사업이 추진되는 등 체계적 계획 없이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재보수정비 사업¹⁾은 국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와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2022년도 예산 현액 3,91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A)	(B)	(B/A)	이월액	
문화재보수정비	404,000	391,500	-	391,500	391,500	100.0	-	-
								463,4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 등²⁾에 근거하여 총액 계상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은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예산을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문화재 관련 시설 30% 각각 국비로 지원하고, 잔여 비용은 지방비를 매칭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행된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134-701

2)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멸실·훼손 방지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사업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 관련 시설 *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업규모	· 3,915억원 - 국가지정문화재: 국비 70%, 지방비 30% - 국가등록문화재: 국비 50%, 지방비 50% - 문화재 관련 시설: 국비 30%, 지방비 70%
수행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2022년에 수행된 총 1,849개 사업 실집행액 2,948억원 중 336개 사업 291억원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되었으므로, 문화재청은 사업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3,915억원은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목으로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는 총 1,849개 사업 3,915억원 중 자본보조 사업 1,513개에 2,656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보조 사업 336개에 290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가 경상보조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었다.³⁾

3)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편성 및 집행 비목]

부처 편성·집행	자본보조			
	자본보조		경상보조	
지자체 집행	내역	비목	내역	비목
내용	토지 등 매입	건설보상비	계획수립 등	일반연구비
	설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실측·진단·기록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공사	공사비	조사·연구	일반연구비
			보존·관리 등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주: 비목은 국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내역별 집행 실적]

(단위: 개, 백만원, %)

부처	지자체	내역	사업수	예산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자 본 보 조	자 본 보 조	토지 등 매입	86	154,155	154,155	140,309	13,317	529	91.0
		설계	222	16,181	16,181	10,297	5,348	534	63.6
		공사 등 ¹⁾	1,205	182,616	182,616	115,093	61,262	6,261	63.0
		소계	1,513 (81.8)	352,952 (90.2)	352,952 (90.2)	265,699 (90.1)	79,927 (90.3)	7,324 (89.2)	75.3 .
	경 상 보 조	계획수립 등	71	3,860	3,860	2,482	1,293	85	64.3
		실측·진단·기록	122	8,057	8,057	5,698	1,971	389	70.7
		조사·연구	108	22,844	22,844	17,587	4,933	324	77.0
		보존·관리 등	35	3,786	3,786	3,314	386	87	87.5
		소계	336 (18.2)	38,547 (9.8)	38,547 (9.8)	29,081 (9.9)	8,583 (9.7)	885 (10.8)	75.4
	합계		1,849 (100.0)	391,500 (100.0)	391,500 (100.0)	294,779 (100.0)	88,511 (100.0)	8,210 (100.0)	75.3

주: 1) 공사 등은 공사, 보존처리, 천연기념물(식물) 보수, 수목정비, 예초작업, 방제사업을 포함함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경상보조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을 전액 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국회 예산 심의 확정 후 재정당국과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대상 및 범위가 사후에 결정되어 자본보조 사업과 경상보조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계획수립, 안전진단, 발굴조사 등과 같은 경상보조 사업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자본을 형성(문화재 보수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천연기념물 먹이 제공 사업 등은 문화재 보수정비의 의미와 같이 생물의 종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자본보조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약 2,000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사전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경상보조 사업이 자본보조 사업과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고 최종 목적이 자본보조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상보조 사업을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기준으로 자본보조 사업과 경상보조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는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을 지자체 집행 내역에 부합하는 적정 세목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실제 집행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사업 비교]

구분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2, pp.282-283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705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2983-270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